

정책보고서 2012-71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이철선 · 권소일 · 남상호 · 김미숙 · 오영호 · 윤강재 · 김현식 · 이상림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 계약한 (2012.6.14)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머 리 말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는 근래에 보기 드문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다.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와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건국 이래 쉽 없는 노력으로 이루었던 경제발전의 결과에 대한 소득재분배 과정의 미숙함이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자본투입의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통합의 질적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집권할 차기정부의 우선 과제는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인 소득양극화의 해소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협동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소비를 영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모델이다. 과거 한국의 협동조합들은 농협을 비롯해 소비자생활협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왔지만 자본금 규모와 조합원수 등 8개 개별법에 의한 엄격한 설립조건으로 일반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국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인 복지창출을 목적으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년간의 준비 끝에 2012년 12월 1일 시행하였다.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축적된 소득양극화 감소와 사회 대통합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이 상부상조를 통한 경제행위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양극화된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

이 사회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1인1표의 민주적인 상부상조의 협동문화를 가지고 있어 조합원간, 협동조합간, 그리고 협동조합연합회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계층을 넘어 상생을 위한 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과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협동조합 설립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설립될 협동조합 수와 고용창출양 등에 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고, 협동조합기본법 상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소득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우리사회에 새롭게 나타날 5인 이상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에 대한 현황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농협 등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철선 연구위원 책임 하에 남상호, 김미숙, 오영호 등 3명의 연구위원과 윤강재, 김현식, 이상립 등 3명의 부연구위원, 그리고 권소일 연구원 등 총 8인의 연구진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연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검토·정리해 주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박사님과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학과와 김유정 학생,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 중인 엄형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4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28
제1절 조사개관	28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전체 결과분석	40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세부유형 결과분석	58
제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129
제1절 협동조합 설립 수요예측에 관한 방법론	129
제2절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32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추정	142
제4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149
제1절 실태조사 방법론의 구축방향과 방법	149
제2절 실태조사 방법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150
제3절 조사방법론 공통요인 도출을 위한 국내 기업조사 사례분석	167
제4절 협동조합 조사방법론 맞춤화 방안 개발	172
제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179
부록1	186
부록2	200

표 목차

〈표 1-1〉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22
〈표 2-1〉 1차 조사 범위 선정	29
〈표 2-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요약	30
〈표 2-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요약(계속)	31
〈표 2-3〉 조사 대상	31
〈표 2-4〉 조사 설계	32
〈표 2-5〉 조사 내용	33
〈표 2-6〉 조사 대상의 성격, 기업특성 및 고용 수준	36
〈표 2-7〉 조사 대상의 경영상황과 수입처, 자본금 조달방법	36
〈표 2-8〉 조사 대상의 이익배당 여부와 기관 적립률 및 사용처	37
〈표 2-9〉 조사 대상의 네트워킹 현황	39
〈표 2-1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내용(복수응답)	40
〈표 2-1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	40
〈표 2-1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	41
〈표 2-1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41
〈표 2-1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42
〈표 2-1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할 부분	43
〈표 2-1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	43
〈표 2-1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단체 vs. 개인) ..	44
〈표 2-1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전환 유무) ..	45
〈표 2-19〉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 ..	45
〈표 2-2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단체)	46
〈표 2-2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정책지원 유무) ..	46
〈표 2-2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단체 대비 개인)	47
〈표 2-23〉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정책 지원 유무)	47
〈표 2-24〉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단체 세부 단체별	47
〈표 2-2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정책유무별)	48

〈표 2-2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단체 대비 개인) ·	49
〈표 2-27〉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정책지원 유무) ···	49
〈표 2-28〉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	49
〈표 2-29〉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	50
〈표 2-30〉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 단체 대비 개인)	51
〈표 2-31〉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 정책지원 유무)	51
〈표 2-3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	52
〈표 2-3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	53
〈표 2-34〉 다양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계층	53
〈표 2-35〉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	53
〈표 2-36〉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54
〈표 2-37〉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	54
〈표 2-38〉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지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 ···	55
〈표 2-39〉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지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	55
〈표 2-40〉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	56
〈표 2-4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	56
〈표 2-42〉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	57
〈표 2-43〉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	57
〈표 2-44〉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생산·물류형)	58
〈표 2-45〉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산·물류형)	58
〈표 2-46〉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생산·물류형)	59
〈표 2-47〉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산·물류형)	59
〈표 2-48〉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산·물류형) ···	60
〈표 2-49〉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산·물류형)	60
〈표 2-5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생산·물류형)	61
〈표 2-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산·물류형) ···	62
〈표 2-52〉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서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산·물류형) ···	62
〈표 2-53〉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산·물류형) ···	63

〈표 2-54〉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산·물류형)	63
〈표 2-5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회P망 시기별 수요 측정(생산·물류형)	63
〈표 2-5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산·물류형)	64
〈표 2-5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생산·물류형) ...	64
〈표 2-58〉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산·물류형)	65
〈표 2-5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생산·물류형)	66
〈표 2-60〉 협동조합기본법 발표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산·물류형)	66
〈표 2-6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산·물류형) ..	67
〈표 2-62〉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생산·물류형)	68
〈표 2-6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산·물류형)	68
〈표 2-6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산·물류형)	69
〈표 2-6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산·물류형) ...	69
〈표 2-66〉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생산·물류형) 69	
〈표 2-67〉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점(생산·물류형)	70
〈표 2-6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산·물류형)	70
〈표 2-69〉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산·물류형) ·	71
〈표 2-70〉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산·물류형)	72
〈표 2-71〉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생산·물류형)	72
〈표 2-72〉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정도(생활문화형)(복수응답)	73
〈표 2-73〉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활문화형)	73
〈표 2-74〉 제시된 특성중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생활문화형)	74
〈표 2-75〉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활문화형)	74
〈표 2-76〉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활문화형) ...	75
〈표 2-77〉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활문화형)	75
〈표 2-78〉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생활문화형)	76
〈표 2-79〉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활문화형) 77	
〈표 2-80〉 기존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활문화형) 77	
〈표 2-8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활문화형) 78	

〈표 2-8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활문화형)	78
〈표 2-83〉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생활문화형)	78
〈표 2-84〉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활문화형)	79
〈표 2-8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생활문화형)	79
〈표 2-86〉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활문화형)	80
〈표 2-87〉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생활문화형)(복수응답) ..	81
〈표 2-8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활문화형)	81
〈표 2-8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활문화형)	82
〈표 2-90〉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시 알자리 생생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생활문화형) ..	82
〈표 2-91〉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활문화형)	83
〈표 2-9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활문화형)	83
〈표 2-9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활문화형)	83
〈표 2-94〉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장단(생활문화형) ...	84
〈표 2-95〉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생활문화형) ..	84
〈표 2-96〉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활문화형)	85
〈표 2-9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활문화형)	85
〈표 2-98〉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활문화형)	86
〈표 2-99〉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생활문화형)	86
〈표 2-10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돌봄형)(중복응답)	87
〈표 2-10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돌봄형)	87
〈표 2-10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돌봄형)	88
〈표 2-10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돌봄형)	88
〈표 2-10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돌봄형) ...	89
〈표 2-10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돌봄형)	89
〈표 2-10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돌봄형)	90
〈표 2-10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돌봄형)	91
〈표 2-108〉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돌봄형)	91
〈표 2-109〉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돌봄형)	92

〈표 2-110〉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돌봄형)	92
〈표 2-111〉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돌봄형)	92
〈표 2-112〉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돌봄형)	93
〈표 2-1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돌봄형)	93
〈표 2-114〉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돌봄형)(중복응답)	94
〈표 2-115〉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돌봄형)(중복응답)	95
〈표 2-116〉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돌봄형)(중복응답)	95
〈표 2-117〉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돌봄형)	96
〈표 2-118〉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협동조합 생성 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돌봄형)	97
〈표 2-119〉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돌봄형)	97
〈표 2-120〉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돌봄형)	98
〈표 2-121〉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돌봄형)	98
〈표 2-122〉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돌봄형)	99
〈표 2-123〉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돌봄형)	99
〈표 2-124〉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돌봄형)	99
〈표 2-12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돌봄형)	100
〈표 2-126〉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돌봄형)	101
〈표 2-127〉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돌봄형)	101
〈표 2-128〉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사회지원형)(중복응답)	102
〈표 2-129〉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사회지원형)	102
〈표 2-130〉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사회지원형)	103
〈표 2-131〉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사회지원형)	103
〈표 2-132〉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사회지원형)	104
〈표 2-133〉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사회지원형)	104
〈표 2-134〉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사회지원형)	105
〈표 2-135〉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사회지원형)	105
〈표 2-136〉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사회지원형)	106
〈표 2-137〉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사회지원형)	106

〈표 2-138〉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사회지원형)	106
〈표 2-139〉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사회지원형)	107
〈표 2-140〉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사회지원형)	107
〈표 2-141〉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이유(사회지원형)	108
〈표 2-142〉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사회지원형)	108
〈표 2-143〉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사회지원형)	109
〈표 2-144〉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사회지원형)	110
〈표 2-14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사회지원형) ...	110
〈표 2-146〉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 시, 알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사회지원형) ..	110
〈표 2-147〉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사회지원형)	111
〈표 2-14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지원형)	111
〈표 2-14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사회지원형) ·	112
〈표 2-150〉 복지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사회지원형) ·	112
〈표 2-151〉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112
〈표 2-152〉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사회지원형)	113
〈표 2-153〉 사회적협동조합 추진시 필요한 도움(사회지원형)	113
〈표 2-154〉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사회지원형)	114
〈표 2-155〉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사회지원형)	114
〈표 2-156〉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근로자형)(중복응답)	115
〈표 2-157〉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근로자형)	115
〈표 2-158〉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근로자형)	116
〈표 2-159〉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근로자형)	116
〈표 2-160〉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근로자형) 117	
〈표 2-161〉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근로자형)	117
〈표 2-162〉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근로자형)	118
〈표 2-16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지원 정책(근로자형) ...	118
〈표 2-164〉 협동조합 설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근로자형)	119
〈표 2-165〉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근로자형)	119

〈표 2-166〉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근로자형)	120
〈표 2-167〉 협동조합 전환/신규 추진 시, 고려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120
〈표 2-168〉 고려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121
〈표 2-16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근로자형)	121
〈표 2-170〉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근로자형)	122
〈표 2-17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것 같은 항목(근로자형)	123
〈표 2-172〉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다양한 협동조합 생기기 예상되는 생계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근로자형) ..	123
〈표 2-17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근로자형)	124
〈표 2-174〉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근로자형)	124
〈표 2-17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근로자형) ...	124
〈표 2-176〉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근로자형) ..	125
〈표 2-177〉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근로자형)	125
〈표 2-17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분야(근로자형)	125
〈표 2-179〉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근로자형)	126
〈표 2-180〉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근로자형)	126
〈표 3-1〉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상의 중요 속성	131
〈표 3-2〉 사업체의 설립 1년 후 평균 생존율	134
〈표 3-3〉 설립시기별 협동조합 생성수 수요예측	134
〈표 3-4〉 정책 마지막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수 추정 - 실질 설립률 ..	135
〈표 3-5〉 정책 마지막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최대 설립수	136
〈표 3-6〉 정책마지막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최소설립 수	137
〈표 3-7〉 희망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세부단체별 .	139
〈표 3-8〉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최대설립수	140
〈표 3-9〉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 최소설립수	141
〈표 3-10〉 단체의 출자금 제공방식에 따른 최대 및 최소 설립 수	142
〈표 3-11〉 조사대상군의 업종 산업군과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143
〈표 3-12〉 최대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자본금 추계	144
〈표 3-13〉 최소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자본금 추계	145

〈표 3-14〉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취업자 및 피고용자 창출 전망	146
〈표 4-1〉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수(2003년 기준)	150
〈표 4-2〉 해외 4개국의 실태조사 특징과 내용(요약)	151
〈표 4-3〉 협동조합 등록 지원서 내용	153
〈표 4-4〉 협동조합 진정성 파악을 위한 인터뷰 설문지	154
〈표 4-5〉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 조사 내용	155
〈표 4-6〉 영국사회적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내용	156
〈표 4-7〉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관보명부등재 제도의 관련 법률	157
〈표 4-8〉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조사내용	158
〈표 4-9〉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 조사내용	159
〈표 4-10〉 이탈리아 통계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문내용	161
〈표 4-11〉 레가코프 협동조합 중앙회의 산업경쟁력 조사 설문내용과 결과	162
〈표 4-12〉 중소기업조합의 유형과 주요 내용(1)	163
〈표 4-13〉 중소기업조합의 유형과 주요 내용(2)	164
〈표 4-14〉 일본 협동조합 유형과 법률 및 주무부서	165
〈표 4-15〉 오오사카 생협의 현황 파악자료	166
〈표 4-16〉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 분석 대상	167
〈표 4-17〉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조사 방법론 요약	169
〈표 4-18〉 국내 법 관련 기업체 조사의 공통 조사 문항	170
〈표 4-19〉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맞춤형 조사 문항	171
〈표 4-2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원제도	172
〈표 4-21〉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구성단체	173

그림 목차

[그림 1-1] 국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 추이(2005~2010)	21
[그림 1-2] 복지부분 국가예산 추이(2004~2012)	21
[그림 1-3]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비중 (2003년)	23
[그림 1-4] 협동조합 매출액 비교(2010년 기준)	23
[그림 2-1] 협동조합 실태조사 범위 및 대상	53
[그림 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178
[그림 5-2] 협동조합 생성 확산모형	179

요약

제1장 문제 제기

한국경제의 국가 고용창출력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부문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기반의 자생적인 고용창출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써 유럽의 경우, 시민주도의 제3섹터에서 지역기반의 경제와 복지를 약 100년에 걸쳐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부각된 이유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저성장 시대에 협동조합이 일반기업보다 고용창출력이 우월한 기업모델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기업모델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서민·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과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생성될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협동조합 설립 추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을 진단한 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는 단체들과 개인들을 선정 후, E-Mail과 면접원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심도분석을 위해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 수와 고용창출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셋째,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해외 4개국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국내 법 관련 기업 실태조사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실시된 3가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1. 조사 설계

우선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조사 설계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혜자인 국민을 경제활동 유무와 역할로 구분한 후, 수혜자 대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유형 26개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유형은 협동조합기본법 당시 시민대표로 참여했던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 참여자들의 조언과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5개 유형으로 요약하였다.

〈표 요약-1〉 1차 조사 범위 선정

구분	수혜자	사업 유형	1차 조사 대상
경제활동 有	생산자	-(생산물류형) 재화·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 연계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 재래시장 - 소비자 생협 - 의료생협 - 배송업체 - 소상공인 - 미소금융
	근로자	-(근로자형) 1인 사업자 등 근로자간 연대를 통해 근로자 권익증진 등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시기사 - 공제회 및 상조회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근로자 - 가사관리사 - 학교비정규직 - 대리기사
	소비자	-(생활문화형) 지역 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생활의 연계를 통한 소비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주거+복지) - 공연예술단체 - 아파트부녀회 - 재건축추진위원회
경제활동 無	취약계층	-(돌봄형) 영유아-아동-학생-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협동조합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 - 돌봄기관 - 돌봄 종사자
전체	일반시민	-(사회지원형) 시민중심의 연대를 통해 사회 인프라 개선 등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 사회적기업

〈표 요약-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 결과 요약

유형	조사대상	내용	선정여부
생산 물류	- 마을기업	- 현재 법인격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매력도가 주요변수로 작용 예상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전환가능성 낮을 것으로 예상	○
	- 재래시장	- 지역 재래시장 상인회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가능 · 지역 재래시장 별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전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 소비자 생협	- 전국연합회가 부재해 개별단체(10단체) 중심으로 접근 · 생협법이 존재해 전환보다는 신사업 시, 협동조합 채택가능성이 높을 것	○
	- 의료생협	- 협동조합 취지와 맞지 않는 사무장 의협이 많아 조사가 어려움 · 주민참여형은 15개에 불과하며, 연합회가 존재치 않음	○
	- 배송업체	- 지입차량 등 개인 배송업체 중심으로 면접조사로 실시 가능 ·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소상공인	- 1인 사업자 중심의 비프렌차이즈 대상으로 면접조사 가능 · 프렌차이즈는 구매가 본사 계약 하에 이루어져 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움	○
	- 미소금융	- 대부분 대기업 산하로 설립되어 협동조합 전환이 사실상 어려움 · 금융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산업업종에서 제외	×
근로자	- 특수직근로자	- 건설노조, 기계사업자,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가 사실상 붕괴 상태	○
	- 택시기사	- 개인기사는 이미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기존 회비납부 등으로 조사 어려움 · 법인택시 기사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은 존재	○
	- 공제회 및 상호회	- 할부거래 법률상 협동조합 전환시 불법사업체로 간주되어 설립가능성 낮음 · (공제회) 자본금 등 제한과 공정위 허가제로 인해 기업에서 생성이 어려움 · (상호회) 선불식 회비 납부방식으로 현 법률상 어려움	×
	- 북한이탈주민	- 신변 안전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이탈 주민단체는 정부의 일시지원 단체로 사업지속성을 확보 못함	×
	- 외국인근로자	- 공식화된 단체파악이 어려워 조사 불가능 · 외국인근로자 단체의 관리주체가 부재하며, 경찰도 추산이 어려운 상황	×
	- 가사관리사	- 공동체 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의향이 있는 단체는 존재 · 인력 알선업체 등 민간내 가정관리사 파악이 어려운 상황	○
	- 학교비정규직	- 각 학교 교사가 존재하나 단체는 부재해 협동조합 설립가능성이 낮음 ·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과 설립추진 단체파악이 매우 어려움	×
	- 대리기사	- 업체는 세금문제로, 종사자는 소득정수로 인해 협동조합 형성가능성이 낮음 · 종사자 중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많아 소득정수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	×
생활 문화	- 환경기업	- 연합회가 존재하며 협조를 통해 청소, 재활용, 주거복지 등 조사가 가능 · 한국대안기업과 주거사업복지협회의 구성기업이 중복인 경우가 다수	○
	- 공연단체	- 사업자 수는 다수이나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면접조사 진행 가능 · 단체 중 지자체 소속법인들의 경우, 협동조합 전환가능성이 거의 없음	○
	- 아파트부녀회	-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면접조사를 진행 · 단체성격이 존재하나 부녀회가 자본금, 회비를 운용하는 경우는 희박함	○
	- 재건축 추진위	- 주택조합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성격이 달라 제외 · 아파트 건축을 위한 재건축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해산	×
돌봄	- 부모협동보육시설	-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많은 전환이 예상 · 공동육아 및 공동체교육 소속기관 대상으로 조사가능	○
	- 전국지역아동센터	- 개인운영의 민간성격을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 인지도나 전환가능성이 낮음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협조로 조사 진행은 가능	○
	- 대안학교	- 현재 법인격 타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협동조합과 사업성격 충돌이 발생 ·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소속단체들로 조사 가능	○
	- 돌봄기관·종사자	- 단체들은 자활공동체 및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환가능성이 존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도 설립가능성이 존재해 면접조사 병행	○
사회 지원	- 시민단체	- 특인장관실 주처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대상으로 조사가능 · 수익사업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이 다수 존재	○
	- 사회적기업	-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마감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전환가능성이 존재 · 한국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통해 조사지원이 가능	○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선정된 조사대상군 26개를 대상으로 우선, 협동조합설립가능성 타진을 위해 각 단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 과정을 통해 1차로 선정된 조사대상 중 미소금융, 공제회 및 상조회,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학교비정규직, 대리기사, 재건축 추진위 등 7개 대상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의 사업부문 유형을 5개 유형 17개 집단으로 결정한 후, 협동조합 설립형식을 전환과 신규로 나누어 최종 설정하였다. 설립방식을 기존단체에서 전환, 기존 단체는 유지하되 신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 그리고 개인들이 신규로 설립하는 형태 등 3가지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최종 조사 대상들에 대해 모집단 대비 전체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총 2,502개의 표본(표본오차 ± 2.0)을 면접과 온라인(E-mail)을 통해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의 모집단 수가 적은 단체들은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였고, 모집단 수가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은 표본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을 포함해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인지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향후 설립여부와 가능성 및 출자금 규모 등 수요예측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파급효과 부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경제와 사회 측면에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복지차원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설문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표 요약-3〉 조사 설계

구분		모집단	표본수	조사종류	조사방법
전체		1,064,390	2502	-전수+표본조사	-온라인+면접
근로자형	특수직근로자	401,122	109	-표본조사	-면접
	택시기사	307,031	211	-표본조사	-면접
생산물류형	마늘기업	804	166	-전수조사	-온라인
	배송업체	21,380	35	-전수조사	-면접
	재래시장	2,042	200	-표본조사	-면접
	기존생협	385	101	-전수조사	-온라인
	소상공인	61,810	102	-표본조사	-면접
생활문화형	환경(대안+주거)	352	56	-전수조사	-온라인
	아파트부녀회	22,451	300	-표본조사	-면접
	공연예술단체	2,422	139	-전수조사	-온라인+면접
돌봄형	공동육아	76	34	-전수조사	-온라인
	지역아동센터	4,003	409	-전수조사	-온라인
	대안학교	145	30	-전수조사	-온라인+면접
	돌봄기관(자활+돌봄)	2,861	259	-전수조사	-온라인
	돌봄종사자	226,000	105	-표본조사	-면접
사회지원형	사회적기업	656	163	-전수조사	-온라인
	시민단체	1,850	83	-전수조사	-온라인

2. 현황조사 결과

첫째, 협동조합에 인지도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의 협동조합 인지도는 높은 편(92.1%)이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39.2%)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단체(50.1%)보다 개인(18.6%)에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인지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협동조합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52.6%)이나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48.7%)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형태라는 의견은 33.6%로 낮았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명 후에 응답자들은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내용보다 조합원 관련 내용(조합원의 이중자격(32.5%), 조합원의 적극적 사업 참여(17.7%), 조합원들에 의한 경영(16.9%))을 매력적으로 평가하였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비 인적·물적 자원 부족(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33.4%), 대규모 자본·출자능력 부족(29.1%))을 꼽았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이익잉여금 축적(33.1%)과 출자좌수 한도설정(19.8%)을 단점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향후 협동조합 설립은 단체들이 전환을 통해 설립한 후, 개인들이 신규 사업을 통해

설립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한 확산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단체의 경우 37.8%였으며, 개인을 포함해 신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은 19.9%였다. 전환의 경우 사회적기업(48.5%)과 시민단체(54.2%)가 많았으며, 신규의 경우 사회지원형(28.7%)과 돌봄형(21.0%), 근로자형(39.4%) 등 사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의지가 높았다. 한편 비 전환자 및 비 설립자에 한해 부가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냐고 질문한 결과 12.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재정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이 협동조합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시된 부가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28.5%)이었으며, 다음으로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18.0%)와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12.5%)이었다. 협동조합 미설립 이유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35.7%)이 1위였고,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18.9%)과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13.3%)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은 돌봄형(47.8%)에서,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은 근로자형(29.8%)에서, 협동조합 성공사례 부족은 아파트부녀회(3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자형태와 출자규모에서는 단체의 경우, 출자금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28.7%였으며, 약 1억 8,239만 원의 출자금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출자금 없이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조사대상은 대안기업과 주거사업복지협회 등이 포함된 환경기업(82.9%)과 공동육아(77.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협동조합으로 전환없이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겠다는 단체들은 약 2억 6,220만 원을, 개인은 1억 5,490만 원을 창업자금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협동조합 설립시기는 단체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년 안에, 개인은 2~4년 안에 집중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립고려 단체 중 약 70.5%가 2013~14년 중에 설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된 사회지원형의 설립이 단체를 선도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개인의 약 81.1%가 2014~16년 중에 설립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유형 중 돌봄이 기타 사업유형들을 선도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립을 고려하는 협동조합유형으로는 단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67.6%)을, 개인은 일반협동조합(76.3%)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단체 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유형으로는 돌봄형(77.6%)과 사회지원형(76.1%)이 많았다. 세부유형으로는 단체의 경우, 아이노인 대상 돌봄조합(33.2%)과 농·임·어업 생산자협동조합(13.2%)을, 개인들의 경우, 택배·청소부 등의 근로자협동조합(23.2%)과 아이·노인 대상 돌봄 교육협동조합(21.6%)이 많았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수익효과에 대해

단체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4.4%)을, 개인은 세금감면(8.9%)과 비용감소(8.8%)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로는 고용효과와 시민참여 의식 증대가 가장 많았다. 우선, 경제적인 효과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18.8%), 일자리생성(18.5%), 비영리 기관들의 자립(21.4%), 지역경제 활성화(18.4%)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29.7%), 여성 비취업자(19.4%) 등 고용관련 취약계층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에서는 담합행위(24.9%)와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21.8%), 질 낮은 일자리 생성(19.1%)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사회적 파급효과에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3.7%)와 복지사업 활성화(24.4%)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45.4%)과 복지전달체계의 왜곡(22.1%),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19.9%)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 대비 경쟁력이 높다(27.0%)는 평가가 낮다(23.4%)라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39.3%)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때문이었다.

〈표 요약-4〉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설문내용 별 결과 요약

구분	내용
협동조합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협동조합 인지도는 高(92.1%)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低(39.2%) · 단체(50.1%)보다 개인(18.6%)이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인지도가 低 · 일반 개인 중심의 근로자형의 경우 협동조합(79.4%) 및 협동조합기본법(19.4%) 인지도가 매우 低
협동조합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대비 전문경영인 부족에 대한 우려가 1위임(33.4%) · 2위에서 단체는 자본출자 능력 부족(29.1%)을, 개인은 낮은 의사결정(21.8%)을 우려 · 자본출자능력 부족은 공동육아와 대안학교가, 낮은 의사결정은 소상공인 등 1인 사업체에서 우려가 高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33.1%)과 출자좌수 한도설정(19.8%)을 부정적으로 평가 · 잉여금 적립의 경우 현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환경기업, 돌봄기관이 부담을 가짐 · 출자좌수 한도설정은 이익집단인 건설기계기사와 소상공인에서 부담을 가지는 경향이 높았음
협동조합 설립의향과 미 설립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단체(18.0%), 대안학교(23.3%), 지역아동센터(24.7%)의 경우 전환율이 타 조사대상보다 低 · 대안학교는 기존 사업형태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아동센터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 아파트부녀회의 경우, 신사업의지가 부족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공사례 부족이 주원인이었음
정책지원시 사업의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미지원시(26.2%) 대비 정책지원 시(28.4%) 실질전환율이 1.8%p 증가에 그침 · 매력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개인들이 20.4%였고, 특히 아파트 부녀회(33.0%)가 高
출자형태 및 출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평균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특히 환경기업(1억 2천만 원)과 사회적기업(약 9천만 원)이 적었음 · 신사업 시, 시민단체(약 6,700만 원)와 배송업체의 경우(약 4,500만원) 출자금 규모가 小 · 재래시장(37.3%)과 시민단체(49.0%)는 출자금 확대 설립이 높았지만 공연예술단체(85.7%)와 공동육아(84.4%)는 기존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多
설립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70.5%)의 경우, 법 시행 1~2년 안에, 개인(81.1%)은 2~4년 안에 집중될 것으로 파악됨 · 단체는 마을기업과 생협, 환경기업, 공동육아, 돌봄기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면, 개인은 보험설계사와 건설기사가 주도
설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67.6%), 개인은 일반협동조합(76.3%) 설립경향이 高 · 공동육아, 시민단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재래시장, 배송업체 등은 일반협동조합을 선호 · 세부유형별로는 각 업종별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선호
전환 수익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9.0%)을, 개인은 세금감면(8.9%)과 비용감소(8.8%)를 주 효과로 평가 · 고용창출에서는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이, 세금감면과 비용감소는 택시기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부지원혜택의 경우 공동육아(70.6%), 환경기업(25.0%), 시민단체(25.3%) 등에서 높았음
경제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사업내용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 · 대안학교(53.3%), 공동육아(47.1%)는 비영리기관들의 자립을, 택시기사(30.3%), 가사관리(34.3%) 등은 고용안정성을, 마을기업(26.5%), 기존생협(23.8%), 사회적 기업(30.7%)은 지역경제활성화에서 高 · 공연단체(41.7%), 환경기업(41.1%), 택시기사(45.0%), 가사관리사(42.9%)는 임시 근로자를 수혜자로 예상 · 기존생협(46.5%)과 시민단체(31.3%)는 사기행위를, 가사관리사(34.3%)와 재래시장(37.5%)은 담합을 우려
사회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송업체(60.0%)와 소상공인(61.8%)은 협동조합의 난립을, 공동육아(38.2%)와 돌봄기관(29.3%)은 복지전달체계의 왜곡을, 건설기계기사(60.0%)와 아파트부녀회(26.7%)는 기존협동조합과의 마찰을 예상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우려에서 대안학교, 사회적기업, 환경기업은 사업 주인의식을, 아파트부녀회와 택시기사는 구성원 참여를 증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동조합) 공연예술단체(33.3%), 마을기업(35.2%), 사회적기업(30.7%)는 전환컨설팅을, 시민단체(22.2%)와 지역아동센터(18.8%)는 협동조합교육을, 아파트부녀회(45.7%)는 주민과 시민간 연계를, 택시기사(41.7%), 소상공인(45.1%), 배송업체(42.0%)는 지역내외 분기사업, 전국사업

〈표 요약-5〉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조사대상별 요약

구분	내용	지원과제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성향 高, 법 시행시 1~2년 내 설립예정 농업업종 등 생산자협동조합(40.0%), 물류유통협동조합(14.8%), 돌봄협동조합(12.2%) 설립희망 협동조합전환시 전환컨설팅에 대한 수요 高, 구성원 의식고취를 위한 활성화과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컨설팅 및 지역기반지원 제공
배송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 18.6%로 低 협동조합 설립으로 정부지원혜택(11.4%)과 세금감면(11.4%)기대 일반협동조합을 추구하며 세부유형으로는 근로자협동조합을 선호 출자금 낮아(평균 4,571만원) 지자체의 적극참여와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연계 및 역량 교육지원
재래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매출증대를 기대하나 실질설립률(19.0%)과 출자금(1억 2,500만원)은 低 대부분 출자금을 확대한 후 전환을 통해 일반 구매협동조합 설립(69.1%)을 추구할 예정 전문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을 우려, 전문경영인 영입을 지원과제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경영인 연계 및 지식 교육지원
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인지도가 高, 실질설립률(53.6%)도 높아 2년 이내에 설립예정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익효과는 고용안정(22.8%)과 고객인지도 상승(22.8%) 기대 돌봄협동조합(22.2%)과 의료협동조합(12.5%)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구(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 8.0%로 매우 低, 이유는 지식부족(34.1%)과 사업체의 의견교환 부족(21.2%) 때문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낮은 의사결정 과정과, 기본법의 출자좌수 한도설정에 부담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특히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교육 및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환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은 43.6%로 高, 설립을 통해 고용안정(48.2%)과 고객인지도 상승(28.6%)을 기대 대부분 전환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형(50.0%)의 근로자협동조합(41.3%) 설립을 추진 출자금 규모(1억 2,000만원)가 작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교육 및 일반협동조합과의 연계 지원
아파트부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이 5.1%로, 성공사례 부족과 매력적인 정책 부족으로 신규사업 의지가 가장 低 추진 협동조합 유형으로는 구매협동조합(41.4%)과 소비자생협(31.0%)을 고려 활성화 과제로서 주민과 시민단체간의 연대(45.7%)와 전문경영인 도입(30.0%)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경영인과 주민연계 지원
공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은 11.3%로 매우 低, 이유는 지식부족(38.0%)과 사업체 의견교환 부족(27.2%)때문 전환 추진단체의 경우 출자금 없는 전환(85.7%)이 높고, 문화협동조합(91.5%) 설립을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단체의 경우 전환컨설팅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교육 및 전환컨설팅 제공
공동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이 57.4%로 가장 高, 주 이유는 정부지원 혜택 증가(70.6%) 때문 설립유형은 돌봄협동조합(96.9%)이었으며 대부분 기존 출자금 없이 전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행정절차 간소화(26.1%)를, 활성화 과제로 공동체정신함양(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시 신속한 행정지원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설립률은 26.0%로 중간 수준이며, 미설립 이유는 기존사업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기때문 출자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62.5%)을 희망하나 출자금 규모(1억 원)는 낮음 재정지원 등 희망정책 지원 시 전환율이 7.7%로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촉진 정책 개발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56.6%)으로 실질설립률은 19.4%로 낮은 수준 설립의 경우, 기존 출자금으로 전환(80.1%)이 높았고, 돌봄협동조합(76.6%)을 추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활성화 과제로 전환컨설팅(21.8%)과 협동조합 지식교육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컨설팅 및 협동조합 지식교육
돌봄기관 및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기관 실질설립률은 31.0%, 종사자는 36.9%로 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기대 돌봄기관의 경우 기존출자금으로 전환(76.4%)이 多, 1~2년 안에 설립이 39.7%로 高 사회적 부정효과로 복지전달체계 왜곡(29.3%)을 우려한 반면 지원과제로 전환컨설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사업주체로 돌봄기관 홍보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고객인지도 상승을 위해 실질설립률이 40.0%로 高 출자금 확대 없이 전환(64.0%)이 多, 출자금 규모(약 9,065만원)는 매우 적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전환컨설팅(30.7%)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컨설팅 및 일반협동조합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고객인지도 상승, 정부지원혜택을 위해 실질설립률이 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협동조합

그리고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가능한 사업분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7.9%)과 취약계층 돌봄사업(19.1%),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15.5%)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전환과정에서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22.8%)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15.9%),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1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과 동시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연대(26.7%)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26.3%), 그리고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25.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24.2%)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관계기관의 적극 지원(23.4%), 구성원의 의식(22.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협동조합 설립수와 그로 인한 고용창출량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 걸친 수요예측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수요예측 추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산적 선택모형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여부에 관한 중요 속성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산적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은 특정 선택을 하는 의사결정자는 다양한 선택 대안들 중 대안이 가진 속성들의 가치가 높게 반영된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사결정모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차적으로 기업형태 수준에서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각각 7개와 5개를 도출해 응답자에게 학습시킨 후, 2차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각각 8개와 5개를 도출해 제시함으로써 설립으로 인한 속성가치의 평가를 응답자들에게 유도하였다. 그리고 3차에서는 2차 수준에서 제시된 속성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에 한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가상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효익 수준을 증가시킨 후 협동조합 설립을 다시 유도하였다.

2단계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협동조합 생성가능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수집된 협동조합 전환의도와 신규사업 시 협동조합형태로의 추진의도를 기반으로 실질설립률을 산출한 후, 모집단에 적용하여 향후 6년간 협동조합 설립수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된 변수는 실질설립률, 설립주체, 설립방법, 설립시기, 설립규모, 희망정책 지원 유무 등 크게 6가지였다. 우선, 실질설립률 추정은 응답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모집, 자본금 출자,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지 등 주변 환경여건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설립은 적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 조사과정에서 단체와 개인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의향과 더불어 그 가능성을 100%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하여 설립의향률에 설립가능성을 적용해 실질설립률을 산출하였다. 둘째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외에 일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체와 개인으로 설립 주체를 구분하였다. 이 때 고려되는 문제는 개인이었다. 단체의 경우 전환을 응답자가 기관장급으로 전환 또는 신규사업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개인은 개별 민간인이므로 전환율에 의한 신규 설립은 과대추정의 우려가 존재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후 유사기업의 종업원 규모나 협동조합 형성 최소 인원인 5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를 나누어 협동조합 수를 산정하였다. 셋째는 설립 방법으로 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기존사업체를 유지한 채,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신규 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체를 전환하기보다는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넷째는 설립시기이다. 협동조합 설립 의향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준비수준에 따라 설립시기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 기준 2013년을 기준으로 6년간 추정하였다. 다섯째는 설립규모이다. 협동조합의 생존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설립의향자를 기준으로 실질 설립자의 규모를 최대, 각 협동조합이 속한 업종별 국내기업의 1년간 생존율을 적용한 규모를 최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섯째는 희망정책의 지원 유무였다. 현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만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지 않지만 향후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설립의향이 변할 수 있어 희망정책 정책지원 시, 설립의향자 수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정책 미지원시 향후 6년간 단체 3,534~4,367개, 개인 4,754~6,371개 총 8,289~10,737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총 786~1,00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돌봄기관 780~887개, 지역아동센터 685~778개, 재래시장 275~388개, 마을기업 265~330개, 공연예술단체 196~273개의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돌봄종사자가 1,400~1,79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직근로자 1,137~1,457개, 아파트부녀회 816~1,152개, 소상공인 704~994개의 순이었다. 설립유형은 기존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규모가 총 2,867~3,554개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될 협동조합 수는 5,422~7,183개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시기는 2013년에 2,704~3,386개로 가장 많은 후

2014년 2,565~3,351개, 2015년 1,943~2,563개, 2016년 704~955개, 2017년 123~165개, 2018년 250~316개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재정지원 등 희망정책 지원 시에는 향후 6년간 단체에서 4,085~5,051개, 개인에서 5,115~6,862개, 총 9,201~11,914개의 협동조합이 생성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정책 미지원시 생성수와 비교할 때, 총수는 약 11.0%p 증가한 수치이며, 개인(약 7.0%p)에 비해 단체(약 15.6%p)의 생성 수 증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총 843~1,080개, 돌봄기관 881~1,002개, 지역아동센터 841~956개, 재래시장 310~437개, 공연예술단체 309~431개, 마을기업 304~379개의 순이었으며, 개인의 경우, 돌봄종사자가 1,447~1,854개, 특수직근로자 1,224~1,569개, 아파트부녀회 986~1,392개, 택시기사가 726~1,014개의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2014년 2,797~3,64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3년에 2,791~3,494개, 2015년 2,334~3,068개, 2016년 824~1,120개, 2018년 320~401개, 2017년, 135~181개의 순이었다.

〈표 요약-6〉 설립시기별 협동조합 생성 수 수요예측

(단위: 개)

구분			전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대	정책 미지원시	전환	3,554	1,896	940	438	115	60	105
		신규	7,183	1,490	2,411	2,125	841	105	211
		소계	10,737	3,386	3,351	2,563	955	165	316
	정책지원시 소계		1,177	108	298	505	165	16	85
	전체		11,914	3,494	3,649	3,068	1,120	181	401
최소	정책 미지원시	전환	2,867	1,548	752	345	93	46	83
		신규	5,422	1,156	1,813	1,598	611	77	167
		소계	8,289	2,704	2,565	1,943	704	123	250
	정책지원시 소계		912	87	232	391	120	12	70
	전체		9,201	2,791	2,797	2,334	824	135	320

3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을 추진 단체들 중 출자액 확대를 고려하는 협동조합 설립수를 산출한 후, 출자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량 추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출자액으로 가정한 이유는 생성된 협동조합들의 운영능력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보다 순수하게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인한 고용창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대신 일반사업체의 업종별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은 협동조합에 의한 지표가 부재하다는 사실과 협동조합의 고용창출량이 일반기업보다는 높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제공방식이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자금을 고려한 단체들과 개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출자금 확대방식을 통해 설립될 협동조합 설립 수는 총 6,310~8,295개였으며, 이 중 단체는 888~1,111개, 개인은 5,422~7,184개였다. 두 번째로 출자금 확대방식을 통해 설립될 협동조합의 수에 각 조사대상별 평균 출자액 금액을 곱해 총출자액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향후 6년간 설립될 협동조합의 총 출자금은 최소 1조 5,213억 원에서 최대 1조 9,93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금은 1,940~2,423억 원이었고, 신사업을 통한 출자금은 1,379~1,685억 원으로 총 3,319~4,108억 원이었다. 그리고 개인에서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은 1조 1,893억 원~1조 5,826억 원이었다. 세 번째로 본고에서는 산출된 조사대상별 출자금 총액에 조사대상이 속한 2010년 업종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향후 6년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취업자와 피고용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취업자는 총 39,182~50,908명, 피고용자는 29,918~38,389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중 단체에 의한 취업자 수는 11,137~13,516명이었고, 개인에 의해 설립될 협동조합으로 인해 생성될 취업자 수는 28,045~37,392명이었다. 그리고 단체에 의한 피고용자수는 8,987~10,737명이었고, 개인에 의한 피고용자 수는 20,931~27,592명 이었다.

〈표 요약-7〉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취업자 및 피고용자 창출 전망

(단위: 명)

구분		최대		최소	
		취업자	피고용자	취업자	피고용자
총계(명)		50,908	38,389	39,182	29,918
단체	소계	13,516	10,797	11,137	8,987
	마을기업	900	106	721	85
	재래시장	497	259	352	184
	기존생협	870	454	616	321
	환경(대안+주거)	162	140	105	91
	공연예술단체	287	183	206	131
	공동육아	42	38	37	33
	지역아동센터	4,131	3,740	3,633	3,289
	대안학교	90	82	79	72
	돌봄기관(자활+돌봄)	2,331	2,110	2,050	1,856
	사회적기업	532	481	468	423
	시민단체	3,675	3,205	2,868	2,501
개인	소계	37,392	27,592	28,045	20,931
	특수직근로자	7,633	6,603	5,957	5,153
	택시기사	1,242	784	889	561
	배송업체	30	27	21	19
	소상공인	8,800	4,591	6,234	3,253
	아파트부녀회	5,832	3,043	4,131	2,155
	돌봄종사자	13,856	12,544	10,813	9,790

제4 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실시될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는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방향이 단순 실태파악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파생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 중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와 한국과 문화적 적합성이 높은 일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고려한 분석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조사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영국은 민간자율형, 이탈리아는 민간위탁형, 일본은 각개전투형, 프랑스는 외부감사형으로 요약이 가능하였다. 영국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한 대신 영국협동조합연합회가 개별 협동조합들로부터 제출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이탈리아는 통계청이 2년을 주기로 중앙협

동조합연합회를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개별 중앙협동조합연합회는 자체적으로 관심사항을 별도로 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설문형식을 통한 공식적인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부재한 대신 각 관련 부처 내에서 각자 수집한 등록 통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집하여 발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 실시로 정부가 세부부문별 연합회와 연계하여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외부감사와 더불어 조사감독관을 통해 질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다.

〈표 요약-8〉 해외 4개국의 실태조사 특징과 내용(요약)

구분	특징	주요 내용
영국 [민간자율형: 지원低-연대低]	·정부-연합회 비연계 ·협동조합 지원 無 ·현황파악 중점	- (정부) FSA가 협동조합 등록 심사 - (협동조합연합회) 연차보고서 중심 통계발표 - (사회적기업연합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이탈리아 [민간위탁형: 지원低-연대高]	·정부-연합회 연계 ·이익잉여금 세금 감면 ·현황파악 중심	- (중앙정부) 통계청 2년 주기 실태조사 기획 - (지방정부) 등록 주관 - (연합회) 등록위탁 및 설문조사
일본 [각계전투형: 지원高-연대低]	·부처 개별형 ·장기 자금 융자 지원 ·설립 현황 파악	- (중앙정부) 협동조합 유형별로 각 부처 파악 - (중소기업 중앙회) 각 부처 조사결과를 취합해 발표
프랑스 [외부감사형: 지원高-연대高]	·정부-연합회 연계 ·다양한 조세감면 실시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 (정부) 협동조합 관리감독제도 및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등재 운영 - (연합회) 조사감독관을 통해 질적 조사 시행

제2단계에서는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방법론상의 공통점을 도출한 후, 향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위한 구성요소 및 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다수의 법 관련 기업조사가 존재하고 있어 기업별 비교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법 관련 조사 중 사회적기업실태조사(2012), 기업체장애인과 용실태조사(2010), 중소기업실태조사(2011), 여성기업실태조사(2011), E-러닝실태조사(2011) 등 5개 기업조사 방법론을 조사주체, 대상, 시기, 방법 등 조사의 일반사항과 각 실태조사의 공통 설문항목, 그리고 맞춤형 설문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주체의 경우 정부 중앙부처가 관리를, 전담기관은 연구 및 실행을, 조사대행사는 실사를 담당하는 3단계 분업화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조사범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기업을 조사하되 기업체의 임원급 이상 경영자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종사자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은 모집단이 적은 경우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모집단이 큰 경우,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사방식은 대부분이 조사원

을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이었으나, 조사편의를 위해 온라인 조사, FAX, e-Mail 조사도 조사 대상별로 병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노동부에 제출한 연차 회계보고서도 활용하고 있었다. 공통 조사내용으로는 기업조사인 만큼 대부분의 실태조사가 사업체 특성과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그리고 서비스(상품) 등 5개 영역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조사의 경우, 열악한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노동부에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이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설문조사를 통해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용현황에서는 고용축진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경우, 기본사항 이외에 고용관련 문항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문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해 조사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을, 장애인고용실태 조사는 장애인고용방법 및 인식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방식을,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방식을, E러닝기업조사는 산업 수요전망을 부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제3단계에서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지원정책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된 조사내용을 도출 한 후, 조사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 하였다.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들이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사업진행시 협동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설립될 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기본법 설정에 따른 기대효과의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법 관련 기업조사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7개 구성요인별로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위한 맞춤형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표 요약-9〉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도와 연대정도를 고려 시, 프랑스의 외부감사형 모델을 벤치마킹 ·(지원제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단기순이익 과세 특례적용, 지정 기부금단체 적용, 중소기업 지원 적용 등 다수 ·(연대정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시, 시민단체 주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의 관여
조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기관과 실사조직의 이원화 구성 ·(실태조사)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 담당 ·(실사조직) 기획재정부 소속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하에 실사담당 실행조직을 구성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유형과 종사자 범위를 고려, 총 8개 집단을 조사 ·(경영층)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표 ·(관련자) 고용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 점검을 위해 일반협동조합 등의 근로자와 조합원 포함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 선정 → 실태조사 → 실사조사 집행의 3단계 조사방법을 추진 ·(모집단)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협동조합과 연합회 전수 ·(실태조사) 법 시행 초기 전수조사, 향후 협동조합 수가 약 10,000 개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 ·(실사조사) 지원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이고 범위반 사항이 포착된 협동조합에 대해 기획재정부 실사 전담조직이 해당 협동조합을 방문해 질적 조사를 실시
기본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서비스(상품) 등 5개 범주로 구성 ·(사업체 특성) 협동조합유형, 사업분야, 조직형태, 외부출자 등 ·(고용)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임금, 4대 보험, 교육훈련, 신규채용 현황, 이직률 등 ·(재무) 회계보고서, 현 출자금 출처와 향후 자금조달계획, 결산 후 잉여금 처분 내용 등 ·(경영) 매출구조, 의사결정구조, 이사회 구성, 네트워킹 및 연대,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서비스·상품) 가격구조, 시장 가격수준, 원자재 조달, 생산판매활동, 경쟁력 수준 등
부가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의 이용 및 애로사항 ·(매출지원)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현황, 학술연구용품 사용현황, 물류단지시설 사업자 및 농어업회사, 산림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 등 ·(경영지원) 임직원 겸직 허용 정도,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여부, 기부금 규모 및 사용출처, 의사록 인증제외 여부, 고용보험기금 사용여부 등 ·(기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여부 및 지원사항 등 타 부처 지원정책 이용 내용 등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건전성 확인을 위한 개별 협동조합들의 건전성 지표 개발 ·(구성내용) 협동조합 경영자료의 조합원과 임금근로자를 연계한 지표의 구성 및 개발 ·(활용방안) 건전성 평가가 낮은 협동조합 리스트를 실사조직에게 전달, 직접실사 실행

제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와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그리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요확산과 사업운영, 인프라 제공 등 3가지 범주에서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들이 확산과정상에서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기 수요자를 발굴하는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성숙한 이탈리아 등 해외사례를 고려 시, 5인 이상 사업체의 약 10% 정도를 협동조합의 포화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 570,000개의 약 10%인 57,000여개가 국내 협동조합의 모집단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6년간 설립이 예상되는 약 8,289~10,737개의 협동조합 수는 전체 모집단의 약 14.5~18.8%로 확산모델 상에서 도입기 진입이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규모이다. 그러나 수요예측 상에서 설립시기가 늦어질수록 설립의향자가 적어지는 현상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성장기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차기 사회적기업가 등 성장기 진입 시 고려되는 수요자 개발과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 대비 인지도가 낮은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현황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농협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사업운영 및 효익 등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35.7%)하고 성공사례 부족(18.7%)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과반수에 달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구축하되, 필수적으로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국민들이 협동조합 설립 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교육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근본취지 중 하나인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결과, 기존 단체 중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출자금 없이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약 71%에 달했고, 신규로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규모는 약 2억 원으로 협동조합 설립 수에 비해 고용창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장점 중 조합원의 이중자격과 경제적 효과 중 고용안정성에 대한 응답이 높아 고용의 질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정책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의 양보다는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협동조합들이 자금력을 확보한 후, 생성되는 고용의 양을 확인하여, 홍보정책 방향을 고용의 양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반협동조합과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협동조합 생성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법 제정 이후 1~2년에,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은 2~4년에 걸쳐 설립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대거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자금과 경영능력이 부족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 사회적기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이 안정화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중앙부처의 직접지원보다 지역기반의 간접지원에

중심을 둔 분산지원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에 있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유무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수 차이는 약 11%p에 지나지 않을 만큼 효과성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및 의식고양 등 지역기반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설립절차에 관한 컨설팅과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차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각 지역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 설립 및 대행기관으로서 역할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각 지역의 협동조합연합회와 NPO지원단체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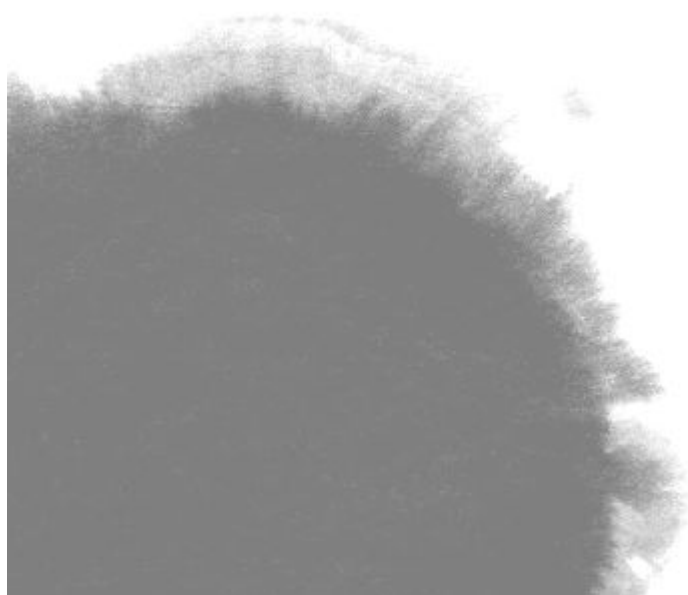
여섯째,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민주도의 기금조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황조사 결과,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기관들의 자산규모는 약 3억 5,000만 원, 매출액 역시 약 3억 7,000만 원 정도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출자금 규모도 약 2억 원 정도로 상당부분 부족해 향후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일정액을 안정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시민주도의 기금조성을 통해 설립지원금 또는 파산 시 구조조정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3%를 각출하여 기금화 한 후, 부실한 협동조합이 파산 시, 구조조정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감사형의 협동조합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현황조사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정효과에 대해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와 협동조합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시, 정부 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사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담당부처 내 관리감독조직을 두고 연합회와 연계하여 부실 협동조합에 대한 실사 등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3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사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수요예측, 고용창출

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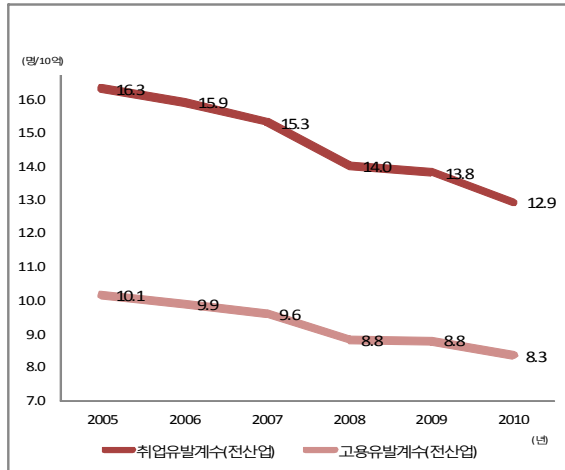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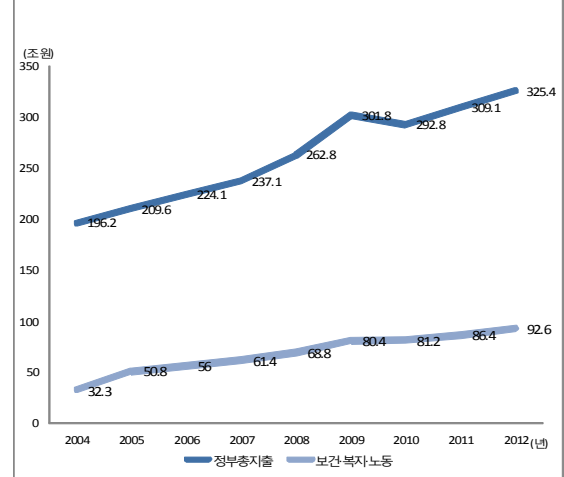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현황) 한국경제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 고용창출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부문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는 후발 경제도상국들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생산시설의 해외전과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2005년 10.1이었던 고용유발계수가 2011년 8.3으로 감소
 -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감소를 위해 복지부문의 정부예산이 2004년 32조3천억 원에서 2012년 92조 6천억 원으로 증액 되는 등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상황

[그림1-1] 국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 추이 [[그림1-2] 복지부분 국가예산 추이
(2005~2010) (2004~2012)



자료: 한국은행(2005~2010),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국회예산처(2004~201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정부대응) 지역기반의 자생적인 고용창출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국회에 입법예고 하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결정

○(협동조합 개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임

⇒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적 경제의 한 주체로서 정부와 영리기업외의 시민 주도의 제3섹터에서 지역기반의 경제와 복지 등을 약 100년에 걸쳐 담당해옴

○(협동조합기본법) 일반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등 4개 기업모델에 법인격을 부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확대를 통한 서민·지역경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등의 기대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함

〈표 1-1〉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총칙	(법인격)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책)	•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제11조)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과의 관계)	•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협동조합	(의결·선거권)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1인 1표(제23조)
	(설립등록)	•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립금)	•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	•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등록)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재부장관)(제71조)
	(의결·선거권)	•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적립금)	•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소액대출)	•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해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인가(기재부장관)(제114조)
기타	(벌 칙)	•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제117~119조)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1.26), 협동조합기본법 공포, 2012.12월 시행,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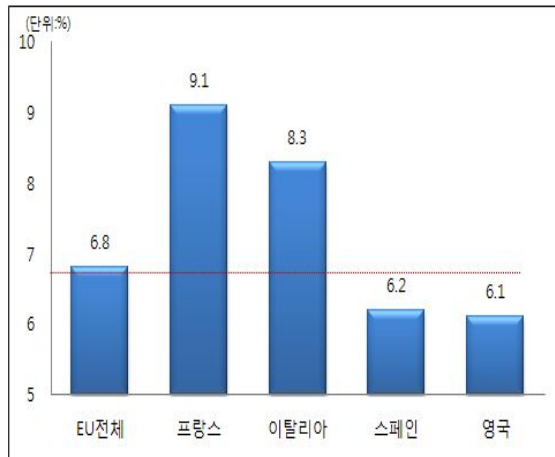
■(협동조합 부각 배경)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이 우수 하는 등 저성장 시대에 고용창출력 가능한 기업모델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임

○(고용창출) 2003년 기준 EU 전체 임금근로자 중 6.8%가 협동조합을 포함한 제3섹터에서 창출되는 등 고용창출력이 높고, 고용안전성 면에서 일반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

○(매출액) 2008년 기준,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1조 600억 달러로 세계 9위 국가인 스페인의 GDP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협동조합의 해) UN은 2009년 멕시코 칸쿤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함

< [그림1-3]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비중 (2003년)



자료: 유럽위원회, ILO 공식홈페이지 게재자료.

[그림1-4] 협동조합 매출액 비교(2010년 기준)



자료: 국제협동조합연맹(2012), 글로벌 300

■(한국의 적용가능성)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과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생성될 협동조합들의 활성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자료들이 부재한 상황임

○(기존 협동조합과의 차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개별법하에 300인 이상 조합원수에 특정 산업 중심으로 설립이 허용되어 왔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조합원수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

○(사회적기업과의 차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한 종류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재정지원이 부재함

〈표 1-2〉 기존 8개 협동조합 개별법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 (조합원수*) 1000명이상 - (산업) 농식품
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 (조합원수) 200명이상 - (산업) 어업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 (조합원 수) 1천명이상 - (산업) 임업, 조경사업
염연초생산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조합원 수) 20인 이상 - (산업) 담배산업
중소기업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조합원수) 30인 이상 - (산업) 생산, 가공, 수리 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 (조합원 수) 100인 이상 - (산업) 신용사업, 적금 등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 (조합원 수) 100인 이상 - (산업) 신용사업, 적금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조합원수) 300명이상 - (산업) 소비재 구입·생산 등

자료: 법제처(2012). 8개 협동조합 개별법
주: 조합원 수는 지역기준.

〈표 1-3〉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차이

구분	주요 내용
인건비지원	- 신규인원(5~30인미만) 인건비 - 사회보험료
기타 재정 지원	- 사회보험료(인건비 비지원 기업) - 사업개발비 - 컨설팅, 회계 등 전문인력 인건비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 경영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가, 관련직원 교육
재정지원 외 지원	- 시설비 등 지원 - 세제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료: 특임장관실(2012), 협동조합자료집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협동조합 설립 추진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을 조사, 협동조합 활성화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생성될 협동조합들로 인해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여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취지인 고용창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능성 타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협동조합 생성수와 고용창출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장기육성방안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매 3년 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지정하고 있는 바, 금번 현황조사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한 실태조사를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시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

림이 예상되는 집단들을 선정 후, 자기기업식 E-mail과 면접원 방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

○해외사례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 관여했던 시민연대회의 회원들의 성향을 통해 조사 대상군을 5개 협동조합 유형으로 구분 후, 관련 단체와 개인 등 17개 대상 군을 조사

○설문내용은 실태조사방법론 구축에서 파악되었던 기업체들의 응답자 특성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평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함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심도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 하에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 설립수와 고용창출량에 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음

○(1단계) 수요예측 추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산적 선택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중요 속성수준과 속성내용을 도출함

○(2단계) 현황조사에서 수집된 단체와 개인들의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 사업체로 협동조합 설립여부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향후 6년간 설립될 협동조합 수를 추정

○(3단계) 협동조합 설립 수에서, 설립 시 출자금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된 출자액을 적용하여 조사대상별 출자금 총액을 산출한 다음, 조사 대상들이 포함된 업종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향후 협동조합 생성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추정함

■셋째,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위해 해외 4개국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과 국내 법 관련 기업 실태조사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함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이 발달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문화적 동질성이 비슷하고 협동조합관련법이 한국과 유사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의 실태방법론을 분석

○국내 사례의 경우, 법과 결부되어 실시중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e-러닝 관련기업들에 대한 실태방법론을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할 관리정책과 실태조사와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통된 방법론과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징을 고려해 향후 실시할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관한 맞춤형 방안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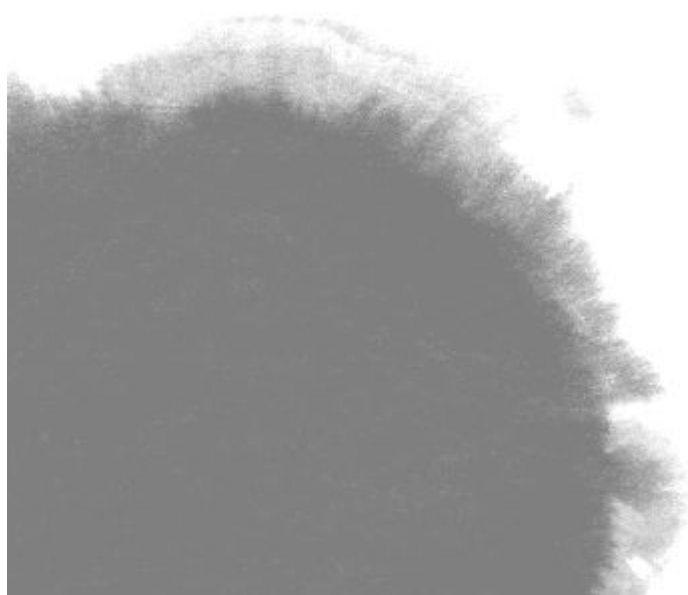
■넷째, 앞서 실시된 3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함

○협동조합의 생성 및 확산과 관련된 수요확산상의 지원과제와 협동조합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측면의 지원과제,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회정착화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지원

과제 등 3가지 측면을 포함

2장

협동조합기본법관련 현황조사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제1 절 조사개관

1. 조사 설계

■(조사 목적) 본고에서는 2012년 12월 1일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파악과 설립될 협동조합 수 및 고용창출 양 예측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함

○금번 조사의 주목적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반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임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 수와 고용창출량에 대한 추정은 향후 정부가 협동조합이 확산되면서 추진해야할 간접적 지원정책의 방향과 대안생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조사범위 설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혜자를 구분 후 수혜자 대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 유형을 설정하여 1차 조사대상을 선정함

○금번 조사과정 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협 등 기존 개별법 이외에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설립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모집단 설정의 문제였음

○본고에서는 조사범위 설정에 있어 1차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해 혜택을 얻을 수혜자를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구분한 후 직접 수혜자를 생산자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함

○각 수혜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5개 유형으로 요약함

⇒ (가치사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활동 연계를 통해 기존 개별단위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각 5개 사업유형별로 설립이 예상되는 주체들을 1차적으로 26개 집단으로 선정

⇒ (선정기준) 협동조합기본법 당시 시민대표로서 참여했던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 참여자들의 조언과 해외사례를 통해 선정

〈표 2-1〉 1차 조사 범위 선정

구분	수혜자	사업 유형	1차 조사 대상
경제활동 有	생산자	-(생산물류형) 재화·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 연계를 통한 생산활동 증진으로 부가가치 창출	- 마을기업 - 재래시장 - 소비자 생협 - 의료생협 - 배송업체 - 소상공인 - 미소금융
	근로자	-(근로자형) 1인 사업자 등 근로자간 연대를 통해 근로자 권익의 증진 등 근로자 자신의 부가가치를 창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시기사 - 공제회 및 상조회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근로자 - 가사관리사 - 학교비정규직 - 대리기사
	소비자	-(생활문화형) 지역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생활의 연계를 통한 소비활동 증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 환경(주거+복지) - 공연예술단체 - 아파트부녀회 - 재건축추진위원회
경제활동 無	취약계층	-(돌봄형) 영유아-아동-학생-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공동육아협동조합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 - 돌봄기관 - 돌봄 종사자
전체	일반시민	-(사회지원형) 시민중심의 연대를 통해 사회 인프라 개선 등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시민단체 - 사회적기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 1차적으로 선정된 조사대상군 26개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설립가능성 타진을 위해 각 단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소집단 전문가 그룹은 각 사업단체별 협회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인터뷰

기간은 7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음

○FGI 과정을 통해 1차 선정된 조사대상 중 미소금융, 공제회 및 상조회,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학교비정규직, 대리기사, 재건축 추진위 등 7개 대상은 제외하였음

⇒ (제외 이유) 설립주체 문제(미소금융), 타 법률과의 상충(상조회 및 공제회), 신변상의 문제(북한이탈주민), 조사의 불가능(외국인근로자, 학교비정규직), 그리고 세금 및 소득징수 문제(대리기사)와 협동조합과의 취지 불일치(재건축추진위) 때문이었음

〈표 2-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 결과요약

유형	조사대상	내용	선정여부
생산 물류	- 마을기업	- 현재 법인격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매력이 주요변수로 작용 예상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전환가능성 낮을 것이라는 의견	○
	- 재래시장	- 지역재래시장 상인회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 지역재래시장 별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전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 소비자 생협	- 전국연합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단체(10단체) 중심으로 접근 · 생협법이 존재해 전환보다는 신사업 시, 협동조합 채택가능성이 높을 것	○
	- 의료생협	- 협동조합 취지와 맞지 않는 사무장의협이 많아 조사가 어려움 · 주민참여형은 15개에 불과하며, 연합회가 존재치 않음	○
	- 배송업체	- 지입차량 등 개인 배송업체 중심으로 면접조사로 실시 ·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소상공인	- 1인 사업자 중심의 비프렌차이즈 대상으로 면접조사 가능 · 프렌차이즈는 구매가 본사 계약 하에 이루어져 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움	○
	- 미소금융	- 대부분 대기업 산하로 설립되어 협동조합 전환이 사실상 어려움 · 금융사업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산업업종에서 제외	×
근로자	- 특수직근로자	- 건설노조, 기계 사업자,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가 사실상 붕괴 상태	○
	- 택시기사	- 개인기사는 이미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기존 회비납부 등으로 조사 어려움 · 법인택시 기사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은 존재	○
	- 공제회 및 상조회	- 할부거래 법률상 협동조합 전환시 불법사업체로 간주되어 설립가능성 낮 · (공제회) 자본금 등 제한과 공정위 허가제요 인해 기업에서 생성이 낮 · (상조회) 선불식 회비 납부방식으로 현 법률상에서 어려움	×
	- 북한이탈주민	- 신변안전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북한이탈 주민단체는 정부의 일시지원 단체로 사업지속성을 확보 못함	×
	- 외국인근로자	- 공식화된 단체파악이 어려워 조사 불가능 · 외국인근로자 단체의 관리주체가 부재하며, 경찰추산도 어려운 상황	×
	- 가사관리사	- 공동체 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의향이 있는 단체는 존재 · 인력알선업체 등 민간내 가정관리사 파악은 어려운 상황	○
	- 학교비정규직	- 각 학교 교사가 존재하나 단체는 부재해 협동조합 설립가능성이 낮음 ·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과 설립추진 단체파악이 매우 어려움	×
	- 대리기사	- 업체는 세금문제로, 종사자는 소득징수로 인해 협동조합 형성가능성이 낮음 · 종사자 중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많아 소득징수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	×
생활 문화	- 환경기업	- 연합회가 존재하며 협조를 통해 청소, 재활용, 주거복지 등 조사가 가능 · 한국대안기업과 주거사업복지협회의 구성기업이 중복인 경우가 다수	○
	- 공연단체	- 사업자 수는 다수이나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 · 단체 중 지자체 소속법인들의 경우, 협동조합 전환가능성이 거의 없음	○
	- 아파트부녀회	-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면접조사를 진행 · 단체성격이 존재하나 부녀회가 자본금, 회비를 운용하는 경우는 희박함	○
	- 재건축 추진위	- 주택조합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성격이 달라 제외 · 아파트 건축을 위한 재건축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해산	×

〈표 2-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결과요약 (계속)

유형	조사대상	내용	선정여부
돌봄	- 부모협동보육시설	- 대부분 협동조합형태를 취하고 있어 많은 전환이 예상 · 공동육아·공동체교육 소속기관대상으로 조사가능	○
	- 전국지역아동센터	- 개인운영의 민간성격을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 인지도나 전환가능성이 낮음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협조로 조사 진행은 가능	○
	- 대안학교	- 현재 법인격 타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협동조합과 사업성격의 충돌이 발생 ·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소속단체들로 조사 가능	○
	- 돌봄기관·종사자	- 단체들은 자활공동체 및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환가능성이 존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도 설립가능성이 존재해 면접조사 병행	○
사회 지원	- 시민단체	- 특임장관실 주최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대상으로 조사가능 · 수익사업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이 다수 존재	○
	- 사회적기업	-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마감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전환가능성이 존재 · 한국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통해 조사지원이 가능	○

■(최종 조사대상)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의 사업부문 유형을 5개 유형 17개 집단으로 결정한 후 협동조합 설립형식을 전환과 신규로 나누어 최종 설정함

○설립방식을 기존단체에서 전환하는 형태, 기존 단체 형태는 유지하는 반면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형태, 그리고 개인들이 신규로 설립하는 형태 3가지를 고려

〈표 2-3〉 조사 대상

설립 주체	사업부문	조사 대상
단체(전환+신규)	- 생산·물류형	- 마을기업 - 재래시장 - 소비자 생협
	- 생활·문화형	- 환경(주거사업+대안기업) - 공연예술단체
	- 돌봄형	- 공동육아 협동조합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 - 돌봄기관(돌봄+자활센터)
	- 사회지원형	- 시민단체 - 사회적기업
개인(신규)	- 근로자형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보험/가사 등) - 택시기사
	- 생산·물류형	- 배송업체(택배+화물연대) - 소상공인 (과일가게+제과점+세탁소)
	- 생활·문화형	- 아파트부녀회장
	- 돌봄형	- 돌봄 종사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조사 설계) 모집단 대비 전체 표본오차를 고려 총 2,600 표본을 계획하였으나 조사대상의 설문거절 등으로 인해 총 2,502개의 표본(표본오차 ± 2.0)을 면접과 온라인(E-mail)으로 수집함

○조사대상 단체 중 모집단 수가 적은 단체들은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모집단 수가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은 표본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설계함

○전수조사가 가능한 단체들의 경우 기본법 제정 시 관여했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소속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소속 개별 기관장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응답을 받음

⇒ 온라인 조사과정에서 조사선정자의 설문거절로 인해 확보하지 못한 표본은 면접원을 통한 면접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병행함

○표본조사는 면접원이 해당조사 대상자를 접촉 후 방문해 설문을 받는 면접설문 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

○조사에 대한 실사는 경영전문 컨설팅 및 리서치 기업인 (주)INI마케팅에서 담당함

〈표 2-4〉 조사 설계

구분		모집단	표본수	조사종류	조사방법
전체		1,064,390	2502	-전수+표본조사	-온라인+면접
근로자형	특수직근로자	401,122	109	-표본조사	-면접
	택시기사	307,031	211	-표본조사	-면접
생산물류형	마을기업	804	166	-전수조사	-온라인
	배송업체	21,380	35	-전수조사	-면접
	재래시장	2,042	200	-표본조사	-면접
	기존생협	385	101	-전수조사	-온라인
	소상공인	61,810	102	-표본조사	-면접
생활문화형	환경(대안+주거)	352	56	-전수조사	-온라인
	아파트부녀회	22,451	300	-표본조사	-면접
	공연예술단체	2,422	139	-전수조사	-온라인+면접
돌봄형	공동육아	76	34	-전수조사	-온라인
	지역아동센터	4,003	409	-전수조사	-온라인
	대안학교	145	30	-전수조사	-온라인+면접
	돌봄기관(자활+돌봄)	2,861	259	-전수조사	-온라인
	돌봄종사자	226,000	105	-표본조사	-면접
사회지원형	사회적기업	656	163	-전수조사	-온라인
	시민단체	1,850	83	-전수조사	-온라인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을 포함해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인지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향후 설립 여부와 가능성 및 출자금 규모 등 수요예측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파급효과 부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경제와 사회 측면에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복지차원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설문내용들이 포함됨

〈표 2-5〉 조사 내용

항 목		내 용	
응답자특성 (단체)	조직구성	-민법상 분류와 상법상 분류 -전체 구성원 수 및 상근직원, 경영진 수 -상근직원 월평균 임금과 4대 보험 가입률 및 경영진의 경영·경제 전공비중	
	재무구조	-2011년도 자산과 부채, 총수입과 순이익 -총수입 구성 내역(%)과 자본금 조달방식	
	운영상황	-경영상 이익발생 시, 조직구성원에 배당하는지 여부 -이익 발생시, 기관 내 이익적립여부 및 비중 -적립한 이익잉여금의 사용방식	
	국내 협력활동	-상위단체 존재여부(중앙회 등) -상위단체로부터 지원 내용 및 상위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국내 동종기관들과 정기적인 교류여부 및 내용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내용 -협동조합의 장점과 주식회사 대비 취약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인지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평가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법률 상 매력적인 부분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협동조합 전환가능 여부	有	-협동조합 전환 가능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간접 지원정책 평가 -지원정책 실현 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비전환시 이유
		無	-신규 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 및 출자금 규모 · 전환사업체(신규 출자금 확대여부, 출자금 고려 금액) · 신사업(신규 출자금 고려 금액) -향후 6년간 설립 예정 시기(2012년 12월 기준) -설립 형태(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설립 시 이유 및 지원 요구 내용 -일반협동조합 전환 또는 설립 시 이유 및 지원 요구 내용 · 고려중인 협동조합의 유형과 전환을 통한 기대효과
파급효과	경제	-기본법 발효 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협동조합 설립 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계층 -협동조합 설립 시,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사회	-기본법 발효 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기본법 발효 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혹은 갈등관계 -기본법 발효 시, 이외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일반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복지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쟁력 -향후 발전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	

2. 응답자 특성

■(사업체 특성) 영리 중심 기업체의 비중이 약 50% 수준이었으나 기업규모 대비 상근직원 수, 그리고 경영진의 배경이 영리사업에 취약한 특성을 보임

○(성격) 50%로 파악된 비영리 성격 기관에 소속된 세부 조사대상군에는 생협, 아파트 부녀회,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가 포함

○(기업형태) 기업형에는 마을기업, 재래시장, 환경관련 기업, 공연예술단체, 돌봄기관,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들이 포함됨

○(고용수준) 전체 상근직원은 8.7명이었으며 사회적기업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안학교(18.2명) 생협(17.3명), 돌봄종사자(17.2명) 돌봄기관(13명)외 대부분 10명 이하였음

⇒ 상근직원 평균 임금은 126.6만 원으로 낮은 반면, 4대보험 가입률은 93.7%로 높았음

⇒ 경영진 중 경영경제 전공자의 비중은 전체 15.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재무구조) 전년도 평균 매출액이 3억 7,300만 원에 평균 이익이 6,600만 원으로 사업규모가 매우 낮으며, 주 사업의 수입 비중이 평균 44.3%로 낮은 구조를 보임

○(자산부채) 조사대상자 중 재래시장(부채 1억 7천만 원), 환경기업(약 3,500만 원), 대안학교(약 6억 7천만 원), 시민단체(약 1,500만 원)는 자본침식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였음

○(총수익) 평균 1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조사대상으로는 생협(약 16억 원), 사회적기업(약 11억 원) 단 2개로 사업규모가 매우 취약

⇒ 전년도 총이익은 전체평균 6,600만 원이었으며, 사업규모가 큰 생협(약 1억 3천 만 원)과 대안학교(2억 5,500만 원), 사회적기업(3억 8,600만 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주 수익사업) 전반적으로 주 사업수익이 44.3%로 가장 높았지만 정부시민 등 외부지원(24.7%), 회비(21.8%)의 비중도 적지 않았음

⇒ 주 수익이 주 사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로는 지역아동센터(68.8%), 돌봄기관(47.2%), 시민단체(24.7%)가 존재함

○(자본금 출처) 전체 응답자의 26.5%가 회원 출자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마을기업(48.2%), 재래시장(93.0%), 생협(77.2%) 공동육아(85.3%)가 높았음

■(이익사용) 전체 대상의 14.7% 만이 이익을 배당하고 있었으며, 이익 중 기관에 적립하는 비율은 55.7%였고, 적립금 사용처로는 기존사업 투자가 23.9%로 가장 많았음

○(이익배당 여부) 조사대상자 중 이익을 배당하는 비율이 30%이상 되는 곳은 마을기업(48.8%), 환경기업(58.9%), 사회적기업(41.7%)으로 매우 적었음

○(이익 기관적립) 기관 내 이익을 적립하는 비율이 타 조사대상군보다 적은 조사대상군으로는 지역아동센터(29.4%), 대안학교(33.3%) 공동육아(40.0%)가 있었음

⇒ (기관 이익적립률) 전체 35.2%였지만, 조사 대상중 50%이상 적립하는 곳은 재래시장(50.0%), 시민단체(58.0%)에 불과했음

○(적립금 사용처) 기존사업투자, 신사업투자 이외에 기존 생협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타 단체지원의 비율이 각각 15.4%, 7.9%로 타 조사대상보다 높았음

■(네트워크) 조사 대상 군 중 상위단체 존재 여부는 21.7%로 낮았으며, 상위단체로 받는 지원 방안으로는 교육지원(49.1%)이, 상위단체에 지원내용으로는 회비납부(59.0%)가 가장 많았음

○(상위단체 유무) 생협(65.3%), 환경기업(41.1%), 공동육아협동조합(64.7%), 지역아동센터(41.3%), 돌봄기관(49.4%)에서 상위단체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지원받는 내용) 교육지원 이외에 홍보지원과 경영컨설팅이 지원내용 중 2, 3위였으며, 마을기업(26.1%), 지역아동센터(25.4%), 대안학교(33.3%)는 운영비 지원 비율이 높았음

⇒ (기관 이익적립률) 전체 35.2%였지만, 조사대상 중 50%이상 적립하는 곳은 재래시장(50.0%), 시민단체(58.0%)에 불과했음

○(지원하는 내용) 회비납부 이외 결산보고의 비중이 높았는데 40%이상 되는 곳으로는 마을기업(47.8%), 사회적기업(46.5%)이었음

○(동종업계 교류) 교육 등 정보 교류기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연계가 21.9%였는데 사업연계의 경우, 마을기업(39.1%), 환경기업(43.5%), 사회적기업(37.2%) 등 기업형에서 비율이 높았음

〈표 2-6〉 조사 대상의 성격, 기업특성 및 고용 수준

구분		전체	근로자형			생산물류형						생활문화형			
			소계	특수 직근 로자	택시 기사	소계	마을 기업	배송 업체	재래 시장	기존 생협	소상 공인	소계	환경	아파 트부 녀회	공연 예술 단체
합계		2,502	320	109	211	604	166	35	200	101	102	495	56	300	139
성 격	영리	49.2	96.3	89.0	100.0	83.3	100.0	100.0	100.0		100.0	39.4	100.0		100.0
	비영리	50.8	3.8	11.0		16.7				100.0		60.6		100.0	
특 성	기업형	61.5				60.6	27.5		33.1			39.4	11.3		28.1
	조합형	4.0				16.7				16.7					
	개인	34.5	100.0	34.1	65.9	22.7		5.8			16.9	60.6		60.6	
구 성	기관 구성원수	102.8	32.7	7.0	37.0	307.7	54.0	29.3	81.0	1,370.2		13.0	18.4	7.7	24.8
	상근직원 수	8.7	6.3	2.2	6.8	6.5	3.2	9.0	2.0	17.3		9.1	15.7	2.7	5.4
	상근직원 임금(만 원)	126.6	167.6	129.4	179.2	135.5	111.8	162.5	158.4	138.9		143.2	127.8	180.0	152.6
	상근직원 4대보험 가입률	93.7	96.8	60.0	98.2	92.7	88.5	100.0	89.7	98.1		93.1	95.1	.	90.7
	경영진 수	4.1	2.3	1.1	2.5	6.5	4.6	10.7	6.2	9.2		3.5	2.7	4.1	2.9
	경영진 중 상경전공비중	15.2	23.7	47.5	22.3	9.2	11.2	5.0	3.0	14.4		18.3	15.4	11.9	20.6

〈표 2-7〉 조사 대상의 경영상황과 수입처, 자본금 조달방법

구분		전체	근로자형			생산물류형						생활문화형			
			소계	특수 직근 로자	택시 기사	소계	마을 기업	배송 업체	재래 시장	기존 생협	소상 공인	소계	환경	아파 트부 녀회	공연 예술 단체
합계		2,502	320	109	211	604	166	35	200	101	102	495	56	300	139
경 영 상 황	자산(억 원)	3.51	0.77	1.93	0.75	6.33	3.46	0.10	2.09	21.10		0.56	2.45	0.13	1.23
	부채(억 원)	4.95	0.15		0.15	11.61	1.65		19.29	16.49		1.62	2.79	0.09	0.74
	2011년 총수입(억 원)	3.73	0.43	0.50	0.43	4.56	2.67	0.56	0.55	16.03		0.95	4.74	0.04	1.84
	2011년 총이익(억 원)	0.66	0.27	0.12	0.27	0.47	0.27	0.29	0.25	1.28		0.13	0.43	0.03	0.26
수 입 비 중	(1)회비	21.8	1.2	8.2	0.0	52.0	8.3	0.0	90.2	26.2		18.5	0.0	27.1	5.6
	(2)주 사업 수입	44.3	100.0	100.0	100.0	37.4	64.9	100.0	6.4	68.4		70.2	83.4	69.1	65.8
	(3)중앙회 등 단체 지원	3.1	0.0	0.0	0.0	2.6	3.7	0.0	2.3	2.1		2.0	3.9	0.0	6.3
	(4)정부시민 등 지원	24.7	0.0	0.0	0.0	6.3	19.3	0.0	0.1	2.9		4.6	11.9	0.3	12.1
	(5)공공자금 등 후원	6.2	0.1	0.9	0.0	1.7	3.8	0.0	1.0	0.5		4.8	0.8	3.6	10.2
자 본 금 조 달 방 법	무응답	41.2	97.2	96.3	97.6	32.1	18.7	88.6	6.0	17.8	100.0	32.9	17.9	22.0	62.6
	회원 출자	26.5	1.3	2.8	0.5	57.3	48.2	2.9	93.5	77.2		22.2	23.2	24.7	16.5
	공적자금 투자	12.0	0.3	0.9		2.2	7.2			1.0		26.1	10.7	37.3	7.9
	정부투자	7.8				1.7	6.0					2.0	5.4		5.0
	기업 등 외부 투자	4.0				0.8	3.0					11.3	5.4	16.0	3.6
	금융기관 대출	2.4	0.9		1.4	1.0	3.6					2.2	14.3		2.2
	주식발행	2.3				2.3	7.8		0.5			2.8	21.4		1.4
	기타	1.4				0.7	0.6	8.6							
	자본금 필요없음	1.3				0.3	0.6			1.0		0.2			0.7
	회원들로부터 대출	1.2	0.3		0.5	1.7	4.2			3.0		0.2	1.8		

〈표 2-8〉 조사 대상의 이익배당 여부와 기관 적립률 및 사용처

구분		전체	근로자형			생산물류형						생활문화형			
			소계	특수 직근 로자	택시 기사	소계	마을 기업	배송 업체	재래 시장	기존 생협	소상 공인	소계	환경	아파 트부 녀회	공연 예술 단체
합계		2,502	320	109	211	604	166	35	200	101	102	495	56	300	139
이익배당여부		14.7	0.6	0.9	0.5	16.7	48.8		0.5	18.8		13.5	58.9		24.5
기관이익적립 여부		55.7	50.0	100.0		67.3	66.7		100.0	68.4		58.2	57.6		58.8
이익적립률		35.2	100.0	100.0		26.7	25.6		50.0	28.1		29.2	40.0		7.7
적 립 금 사 용	무응답	49.8				30.9	33.3			23.1		71.8	73.7		70.0
	기존사업 투자	23.9	100.0	100.0		32.4	33.3		100.0	23.1		15.4	21.1		10.0
	신사업 투자	10.2				14.7	16.7			7.7		5.1			10.0
	타 단체 지원	5.4				11.8	11.1			15.4					
	회원배당	4.4				4.4	3.7			7.7		2.6	5.3		8.2
	기타	4.4				2.9	1.9			7.7		2.6			5.0
	적립	2.0				2.9				15.4		2.6			5.0

〈표 2-9〉 조사 대상의 네트워킹 현황

구분	전체	근로자형			생산물류형						생활문화형				소계
		소계	특수 직근 로자	택시 기사	소계	마을 기업	배송 업체	재래 시장	기존 생협	소상 공인	소계	환경	아파 트부 녀회	공연 예술 단체	
합계	2,502	320	109	211	604	166	35	200	101	102	495	56	300	139	837
상위단체 유	21.7	0.3		0.5	18.5	13.9		11.5	65.3		6.1	41.1	0.3	4.3	39.9
상위단체로 받는 지원방안	교육지원	49.1	100.0		100.0	50.9	26.1		13.0	72.7	50.0	60.9		16.7	52.4
	홍보 지원	31.1				46.4	21.7		69.6	47.0	46.7	43.5	100.0	50.0	25.7
	경영(운영지원)컨설팅	27.9				35.7	34.8		8.7	45.5	30.0	34.8		16.7	26.0
	운영비 지원	16.0				10.7	26.1			9.1	20.0	13.0		50.0	18.0
	지원없음	15.3				6.3	13.0			6.1	16.7	13.0		33.3	15.0
	회계 지원	7.4				5.4	8.7			6.1	16.7	4.3		66.7	6.6
	인원 파견	7.4				7.1	4.3			10.6	3.3	4.3			8.4
	모름/무응답	5.1				5.4		26.1			3.3	4.3			5.1
	등록 절차	5.0	100.0		100.0	7.1				12.1	3.3	4.3			3.3
	기타	0.4											0.6		0.6
상위단체 지원내용	회비 납부	59.0	100.0		100.0	73.2	26.1		65.2	92.4	70.0	78.3	100.0	33.3	56.6
	결산 보고	28.1				13.4	47.8		4.3	4.5	20.0	17.4		33.3	31.1
	지원없음	8.5				6.3	17.4			4.5	6.7	8.7			8.1
	영업지원	5.5				13.4	17.4		30.4	6.1	16.7	13.0		33.3	2.7
	인원 파견	4.8				3.6	8.7			3.0	10.0	8.7		16.7	4.8
	등록 절차	2.9	100.0		100.0	0.9		4.3			6.7	8.7			3.3
	무응답	2.0				0.9				1.5					2.1
	기타	1.8									3.3	4.3			2.4
동종 영업계 교류내용	교육 등 정보교류	58.3				51.8	47.8		30.4	60.6	50.0	47.8	100.0	50.0	64.7
	사업연계	21.9				17.9	39.1			16.7	40.0	43.5		33.3	19.2
	교류가 없다	8.5	100.0		100.0	12.5	8.7		26.1	9.1	3.3	4.3			6.3
	무응답	7.2				16.1	4.3		34.8	13.6	3.3	4.3			3.9
	운영비 등 금전지원	2.9				1.8			8.7						4.2
	인력	1.3									3.3			16.7	1.8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전체 결과분석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협동조합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협동조합 인지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형태라는 의견은 인지내용에서 3위로 나타남

⇒ 1위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52.6%), 2위는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48.7%)로 인식하고 있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단체보다 개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음

〈표 2-1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내용(복수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	52.6	59.7	58.0	50.3	62.0	63.4	39.1	29.1	60.0	35.0	44.3
기존생협 농수산물 유통 업체	48.7	46.2	52.5	46.2	48.2	28.0	53.5	50.0	42.9	63.5	56.3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형태	33.6	39.9	36.8	34.9	37.2	57.7	21.7	21.6	34.3	20.4	18.0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 는 조직	13.1	11.5	13.7	14.9	9.0	11.8	16.4	18.1	2.9	18.2	18.3
주인이 없는 단체	8.2	7.1	9.4	5.6	6.7	5.3	10.2	5.3	9.5	7.3	17.0
지방 등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	8.0	5.5	5.8	9.7	5.3	2.4	12.5	11.3	2.9	21.2	13.3
들어본 적 없다	7.9	4.1	2.6	11.8	3.3	3.3	15.2	20.6	12.4	15.3	10.3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	1.2	1.6	1.1	3.1	1.5	1.6	0.3		2.9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로 만든단체	0.9	1.4	1.1	0.5	1.2	3.3					
기타	0.5	0.7	0.9		0.3	2.4					

〈표 2-1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예	39.2	50.1	56.3	40.0	38.4	80.9	18.6	19.4	51.4	10.2	10.0
아니오	60.8	49.9	43.7	60.0	61.6	19.1	81.4	80.6	48.6	89.8	90.0

■(협동조합 인식내용과 약점) 응답자들은 인식 내용에서 사업내용보다 조합원 관련 내용을 매력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 대비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취약점으로 평가

○협동조합 인지내용에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병행가능(8.3%) 등 사업내용보다 조합원의 이중자격(32.5%)과 조합원의 적극적 사업 참여(17.7%), 그리고 조합원들에 의한 경영(16.9%) 등 조합원 관련 내용이 1~3위를 차지

○주식회사 대비 약점에서는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33.4%)이 전체 1위였고, 단체에서는 단기과제인 자본과 관련된 대규모 자본 출자능력 부족(29.1%)이 2위

〈표 2-1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32.5	29.7	30.2	32.8	29.4	27.2	37.8	35.0	37.1	27.7	45.7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7.7	17.7	16.1	19.5	17.8	19.1	17.6	18.1	17.1	19.7	16.3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6.9	17.3	19.1	13.3	17.2	17.5	16.1	15.6	18.1	19.7	14.3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 없는 1인 1표제	11.9	11.8	14.3	11.8	10.0	12.6	11.9	12.5	8.6	13.9	11.7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 업 병행 가능	8.3	9.5	6.6	8.2	11.1	11.0	6.1	8.1	5.7	5.8	4.3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 진 또는 연합회 구성	7.2	7.0	9.0	5.6	6.7	5.3	7.4	5.6	10.5	10.9	6.7
고용창출 및 안정	5.0	6.2	4.3	8.2	6.7	6.5	2.8	4.7	2.9	2.2	1.0
모름/없음	0.4	0.6	0.4	0.5	1.0		0.1	0.3			
기타	0.2	0.2			0.3	0.8					

⇒ 개인에서는 1인 1표로 인한 낮은 의사 결정과(21.8%)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부족(20.2%) 등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2~3위로 평가함

〈표 2-1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33.4	34.7	37.7	29.2	35.0	32.5	30.9	33.8	25.7	30.7	29.7
대규모 자본출자 부족	25.8	29.1	26.6	28.7	30.9	29.3	19.5	18.1	31.4	19.7	16.7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18.0	16.8	19.3	16.9	16.8	12.2	20.2	18.4	17.1	18.2	24.0
1인표제로 낮은 의사결정	15.9	12.7	10.3	18.5	9.8	21.5	21.8	22.2	12.4	23.4	24.0
지역경제 중심 고립성	6.1	5.6	5.8	5.6	6.4	2.8	7.1	7.2	9.5	8.0	5.7
모름/없음	0.8	0.9	0.4	0.5	1.1	1.6	0.6	0.3	3.8		
기타	0.0	0.1		0.5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잉여금과 출자자수 한도설정을 부정적으로 평가

○(효익) 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43.9%), 협동조합 법인부여(30.5%)를, 개인은 협동조합중앙회 설립(40.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33.2%)을 긍정적으로 평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의 경우, 단체에서는 사회지원형(52.0%)과 돌봄형(46.0%)의 평가가 매우 높았으며,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가 소속된 생활문화형의 평가가 49.3%로 높았음

○(우려) 단체와 개인, 모두 이익잉여금 축적(33.1%)과 조합원 1인당 출자자수 한도설정(19.8%)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 조합원 1인당 출자자수 한도설정의 경우 단체(19.8%)보다 개인(22.9%)이 높았는데 개인의 경우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 설립 성향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

〈표 2-1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40.2	43.9	36.8	42.6	46.0	52.0	33.2	35.0	34.3	24.8	34.7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28.8	30.5	25.5	30.8	32.1	35.4	25.4	23.8	30.5	32.8	22.0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28.1	25.4	31.7	26.2	20.6	27.2	33.1	33.4	13.3	43.1	35.0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22.4	24.4	19.7	16.9	31.7	17.5	18.6	17.2	33.3	17.5	15.3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22.3	12.8	21.4	26.7	6.8	3.3	40.3	40.9	7.6	43.8	49.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16.8	22.1	21.4	18.5	22.5	24.8	6.7	4.7	22.9	3.6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14.7	12.6	16.1	15.9	8.7	15.0	18.8	18.4	10.5	15.3	23.7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9.4	9.8	6.4	7.7	13.8	5.7	8.6	9.7	14.3	5.1	7.0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 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7.4	9.3	12.0	8.7	7.7	9.8	3.8	1.9	11.4	2.2	4.0
모름	0.6	0.8	0.4	0.5	1.2	0.4	0.2	0.3	1.0		
기타	0.1	0.1				0.8					

〈표 2-1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자기자본의 3배시 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3.1	33.9	30.8	36.9	33.6	38.2	31.7	31.6	23.8	34.3	33.3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설정	19.8	18.2	20.6	20.0	15.7	19.5	22.9	25.9	21.9	24.1	19.3
일반협동조합 배당한도 설 정	15.6	14.5	12.8	20.0	13.5	16.3	17.6	12.5	19.0	10.2	26.0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 금 지	13.5	14.7	16.9	11.8	16.8	6.5	11.4	11.9	17.1	13.1	8.0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3.2	12.0	14.1	8.7	11.9	11.0	15.5	17.5	12.4	18.2	13.3
모름/없음	3.7	5.2	3.4	1.5	7.5	4.9	0.7	0.6	3.8		
기타	0.4	0.5	0.9	0.5	0.3	0.8	0.2		1.9		
저희 단체와 관련성 없음	0.3	0.5		0.5	0.4	1.6					
협동조합회원간의 인식부족	0.2	0.3	0.4			1.2					
국가보조의 감소	0.1	0.1			0.3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의향)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단체의 경우 37.8%였으며, 개인을 포함해 신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은 19.9%였음

○(전환) 사회지원형(50.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산물류형(42.4%)이 2위였음

○(신규) 협동조합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체의 응답자들은 13.3%인 반면, 개인은 27.7%로 높았음

〈표 2-1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1,640	1,640	467	195	732	246					
기존 사업 전환 의사	無	62.2	62.2	57.6	69.2	67.5	49.6					
	有	37.8	37.8	42.4	30.8	32.5	50.4					
합계		1,882	1,020	269	135	494	122	862	320	105	137	300
신규사업 형태 로 추진의사	無	80.1	86.7	90.3	91.9	87.0	71.3	72.3	60.6	41.0	80.3	92.0
	有	19.9	13.3	9.7	8.1	13.0	28.7	27.7	39.4	59.0	19.7	8.0

⇒ 단체의 경우, 사회지원형(28.7%)과 돌봄형(13.0%)의 신규사업 가능성이 높았고, 개인은 돌봄형(59.0%)과 근로자형(39.4%)의 의지가 높았음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 사업 의향) 비 전환자 및 비 설립자에 한해 부가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질문에 12.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본고에서는 향후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는 가상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응답자에게 제시 후 설립 의지를 재 파악하였음

○(정책평가) 단체와 개인 모두 각각 34.6%와 19.9%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을 1위로 평가

⇒ 이외 단체는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19.3%)를, 개인은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 지원(18.8%)을 2위로 평가

○(유형) 정책지원 시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사업유형 중 근로자형과 기타 유형 간에 선호 정책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

⇒ (근로자형) 시민기금조성으로 인한 긴급 자금지원(23.1%), 기부금단체 지정(23.1%),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23.1%)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과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에 대

한 선호 경향이 강했음

〈표 2-1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단체 vs. 개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지원 정책	합계	1,507	884	243	124	430	87	623	194	43	110	276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28.5	34.6	18.9	32.3	43.7	36.8	19.9	17.0	53.5	25.5	14.5
	매력적인 지원정책이 없음	18.4	16.6	24.7	10.5	13.7	17.2	20.9	7.2	16.3	16.4	33.0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8.0	19.3	18.1	21.0	17.9	27.6	16.1	18.6	18.6	13.6	14.9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	12.5	8.1	12.3	9.7	5.6	6.9	18.8	24.2	2.3	20.9	16.7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12.1	11.2	14.8	14.5	9.3	5.7	13.5	16.5	2.3	11.8	13.8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 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5.2	3.7	3.7	4.8	3.5	3.4	7.2	10.8		8.2	5.4
	고용지원자금으로 협동조합 경영권설탕지 원	5.2	6.2	7.4	7.3	6.3	1.1	3.7	5.7	7.0	3.6	1.8
기타		0.1	0.1				1.1					
합계		1,230	737	183	111	371	72	493	180	36	92	185
정책지원시 설립의사	無	87.8	82.4	83.1	80.2	83.6	77.8	95.9	92.8	94.4	100.0	97.3
	有	12.2	17.6	16.9	19.8	16.4	22.2	4.1	7.2	5.6		2.7

〈표 2-1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전환 유무)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정책지원 시, 전환 有						안함					
		소계	근로자	생산물류	생활문화	돌봄	사회지원	소계	근로자	생산물류	생활문화	돌봄	사회지원
합계	1,507	150	13	31	27	63	16	1,357	181	322	373	410	7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28.5	48.0	7.7	29.0	48.1	66.7	43.8	26.4	17.7	20.2	18.0	41.2	35.2
매력적인 지원정책이 無	18.4							20.4	7.7	24.2	27.9	16.1	21.1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8.0	23.3	15.4	29.0	25.9	15.9	43.8	17.4	18.8	15.5	16.1	18.3	23.9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	12.5	8.0	23.1	12.9	11.1	1.6	6.3	13.0	24.3	15.2	14.7	5.9	7.0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12.1	6.7	23.1	9.7	3.7	4.8		12.7	16.0	14.3	14.7	9.3	7.0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5.2	8.0	23.1	9.7	7.4	4.8	6.3	4.9	9.9	4.7	5.1	2.9	2.8
고용지원자금으로협동조합 경영권설팅지원	5.2	6.0	7.7	9.7	3.7	6.3		5.1	5.5	5.9	3.5	6.3	1.4
기타	0.1							0.1					1.4

■(미 설립 이유)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35.7%),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18.9%),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13.3%)이 주된 이유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의 경우 단체의 돌봄형이 48.8%로 가장 높았고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의 경우 개인의 근로자형과 생산물류형에서 비중이 높았음

⇒ 협동조합 성공사례 부족의 경우, 개인의 생활문화형(31.0%)에서 의견이 높았음

○기존 사업형태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에서는 단체의 돌봄형과 사회지원형에서 높았음

〈표 2-19〉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1,357	754	212	102	369	71	603	181	41	110	271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 족	35.7	39.5	29.2	38.2	48.8	23.9	30.8	34.3	36.6	33.6	26.6
사업체 내 의견교환이 無	18.9	15.5	21.2	25.5	9.2	16.9	23.2	29.8	9.8	23.6	20.7
협동조합 성공사례 부재	13.3	7.0	11.8	7.8	5.4		21.1	13.8	2.4	15.5	31.0
기존형태로도 충분해서	11.1	15.1	13.2	7.8	14.9	32.4	6.0	5.5	12.2	3.6	6.3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無	6.9	4.0	5.2	1.0	4.1	4.2	10.4	11.6	7.3	16.4	7.7
시행령 등 제도 미확정	4.9	4.6	3.8	5.9	4.6	5.6	5.1	3.3	7.3	4.5	6.3
모름 없음	4.1	5.6	6.1	5.9	5.4	4.2	2.3	1.1	24.4	0.9	0.4
전환시, 법적문제가 존재해 서	2.9	4.4	2.8	4.9	5.1	4.2	1.0	0.6		1.8	1.1
현재 협동조합이므로	1.0	1.9	6.1			1.4					
현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1.0	1.7	0.5	2.0	1.9	4.2					
기타	0.4	0.7		1.0	0.5	2.8					

■(출자형태 및 출자금) 단체의 경우, 출자금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28.7%였으며, 약 1억 8,239만 원의 출자금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출자확대) 사업유형 중 출자금 없이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유형은 대안기업과 주거사업 복지협회 등이 포함된 생활문화형과 공동육아 등이 포함된 돌봄형이 많았음

⇒ (정책지원 유무) 정책지원이 있을 경우 전환하겠다는 응답자의 평균 출자액은 9,444만 원으로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보다 출자금이 매우 적었음

〈표 2-2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단체)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전체	단체				
			소계	생산물류	생활문화	돌봄	사회지원
합계		750	750	229	82	299	140
출자 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71.3	71.3	65.9	82.9	77.9	59.3
	출자확대	28.7	28.7	34.1	17.1	22.1	40.7
출자금 평균(단위:만 원)*		18,239	18,239	18,238	14,286	21,042	17,197

*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표 2-2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정책지원 유무)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전체	정책 미지원시 전환					정책지원시 전환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합계		750	620	198	60	238	124	130	31	22	61	16
출자 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71.3	66.8	62.6	76.7	74.4	54.0	93.1	87.1	100.0	91.8	100.0
	출자확대	28.7	33.2	37.4	23.3	25.6	46.0	6.9	12.9		8.2	
출자금 평균(단위:만 원)*		18,239	19,015	19,237	14,286	23,947	17,197	9,444	8,750		10,000	

*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신사업) 협동조합 전환 없이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고려하는 단체의 경우, 약 2억 6,220만 원을, 개인은 1억 5,490만 원을 신규 창업자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지원 유무) 정책지원이 있을 경우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자의 평균 출자액은 약 9억 원으로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의 출자금 1억 7,204원보다 많았음

⇒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집단들에 비해 정책미지원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집단들은 자립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단체 대비 개인)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395	136	26	11	64	35	259	139	64	27	29
출자금 평균	19,522	26,220	46,833	35,000	22,500	9,727	15,490	15,910	18,750	4,571	20,000

주: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표 2-23〉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정책 지원 유무)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전체	정책 미지원시 신규						정책지원시 신규			
		소계	근로자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자	생활 문화	돌봄
합계	395	375	126	53	35	126	35	20	13	5	2
출자금 평균	19,522	17,204	11,095	35,000	32,500	20,400	9,727	90,000	105,000		30,000

주: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설립시기) 단체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년 안에, 개인은 2~4년 안에 집중될 것으로 파악됨

○(단체) 설립예정 단체 중 약 70.5%가 2013~14년 중에 설립될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된 사회지원형의 설립이 단체를 선도할 것으로 파악

○(개인)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개인은 약 81.1%가 2014~16년 중에 설립하겠다고 응답

⇒ 사업유형 중 돌봄형이 기타 사업유형들을 선도할 것으로 파악됨

〈표 2-24〉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단체 대비 개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1,145	886	255	93	363	175	259	139	64	27	29
2013년 중	33.6	39.2	36.9	30.1	35.8	54.3	14.7	6.5	40.6	3.7	6.9
2014년 중	30.3	31.3	38.8	25.8	29.5	26.9	27.0	24.5	26.6	29.6	37.9
2015년 중	21.6	18.6	16.1	26.9	20.7	13.7	31.7	32.4	28.1	33.3	34.5
2016년 중	8.4	4.3	3.5	7.5	4.4	3.4	22.4	31.7	1.6	29.6	17.2
2017년 중	1.7	1.7	2.7	2.2	1.7		1.9	2.9		3.7	
2018년 이후	4.4	5.0	2.0	7.5	8.0	1.7	2.3	2.2	3.1		3.4

○(정책유무) 정책 미지원시 전환의 경우, 기본법 시행 후 1~2년(78.6%)안에, 신규는 2~3

년(59.2%)안에, 그리고 정책지원 시 설립도 2~3년(68.0%)에 집중될 것으로 응답

〈표 2-2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정책유무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정책 미전환 시		정책지원 시 설립
		전환	신규	
합계	1,145	620	375	150
2013년 중	33.6	48.1	19.7	8.7
2014년 중	30.3	30.5	30.1	30.0
2015년 중	21.6	13.1	29.1	38.0
2016년 중	8.4	3.9	15.7	8.7
2017년 중	1.7	1.8	1.6	2.0
2018년 이후	4.4	2.7	3.7	12.7

■(설립유형) 단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67.6%)을, 개인은 일반협동조합(76.3%)을 설립하겠다는 성향이 높았음

○(단체)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설향이 강한 사업유형으로는 돌봄형(77.6%)과 사회지원형(76.1%)이 있었음

⇒ (전환이유) 현 사업과의 적합성(22.2%), 사회적 가치실현(17.5%),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모델 양성(13.5%)을 주된 전환이유로 생각하고 있었음

○(개인) 근로자형(91.5%), 생산물류형(96.4%) 등이 일반협동조합 추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전환이유) 정부지원(8.1%)이 1위였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양성(6.5%)이 2위였음

○(정책지원 유무) 정책 미지원시 전환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66.9%)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협동조합(57.3%)의 설립경향이 높았음

⇒ 정책지원 시 설립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경향이 57.3%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경향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단체 대비 개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1,143	886	255	93	363	175	259	139	64	27	29
사회적협동조합	57.8	67.6	50.5	59.1	77.6	76.1	24.0	8.8	70.3	3.6	13.4
일반협동조합	42.2	32.4	49.5	40.9	22.4	24.1	76.3	91.5	29.7	96.4	85.6

〈표 2-27〉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정책지원 유무)

(단위: 개, 명, %)

구분	전환					신규						정책지원시전환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합계	620	198	60	238	124	375	126	53	35	126	35	150	13	31	27	63	16
사회적협 동조합	66.9	51.5	60.0	77.7	74.2	42.7	8.7	32.1	25.7	73.8	85.7	57.3	7.7	35.5	51.9	77.8	68.8
일반협동 조합	33.1	48.5	40.0	22.3	25.8	57.3	91.3	67.9	74.3	26.2	14.3	42.7	92.3	64.5	48.1	22.2	31.3

〈표 2-28〉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661	599	129	55	282	133	62	12	45	1	4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사업에 적합	20.3	22.2	24.8	20.0	21.3	22.6	1.6	8.3			
사회적가치 실현	16.5	17.5	14.0	14.5	17.7	21.8	6.5		8.9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양성	12.9	13.5	16.3	5.5	14.2	12.8	6.5		2.2		75.0
무응답	7.7	4.7	7.0	1.8	3.9	5.3	37.1		48.9	100.0	
일자리 창출	6.8	7.2	10.9	7.3	6.0	6.0	3.2		4.4		
취약계층위주 사업	6.7	7.0	3.9	16.4	8.2	3.8	3.2	8.3			25.0
기타	6.1	3.8	2.3	1.8	5.3	3.0	27.4	33.3	28.9		
조합원 중심 경영추진	5.4	5.7	6.2		5.0	9.0	3.2	8.3	2.2		
사회적기업 추진	4.7	5.2	3.1	10.9	3.9	7.5					
공동체 운영	4.5	4.5	7.0	9.1	3.5	2.3	4.8		6.7		
정부지원	4.4	4.0	3.9	3.6	3.5	5.3	8.1	25.0	4.4		
조합원의 복리증진	3.8	3.8	3.9	5.5	3.5	3.8	3.2	16.7			
경영의 안정화	2.7	3.0	2.3	3.6	2.5	4.5					
잘 모르겠다.	1.7	1.8	0.8	1.8	3.2						

■(세부유형) 단체는 아이·노인 대상 돌봄조합(33.2%)과 농·임·어업 생산자협동조합(13.2%)이

1~2위였으며, 대부분 각 조사대상별로 적합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 역시 택배·청소부 등의 근로자협동조합(23.2%)과 아이·노인 대상 돌봄 교육협동조합(21.6%) 설립이 1~2위였는데 조사 대상별 설립유형이 차별적으로 나타남

〈표 2-29〉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1,145	886	255	93	363	175	259	139	64	27	29
아이 등 돌봄/교육협동조합	30.6	33.2	11.8	1.1	62.0	21.7	21.6	2.2	78.1	3.7	6.9
택배·청소부 등 근로자협동조합	12.8	9.8	3.9	21.5	11.8	8.0	23.2	31.7	6.3	44.4	
농·임수산업 등 생산자협동조합	11.3	13.2	22.0	1.1	7.2	19.4	4.6		4.7	22.2	10.3
재래시장 등 구매협동조합	10.3	7.4	20.4		3.3	1.1	20.1	28.1		3.7	41.4
물류·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8.8	8.4	11.8	6.5	3.9	13.7	10.4	14.4	3.1	18.5	
공연 등 문화 협동조합	7.9	9.6	5.9	48.4	2.2	9.7	1.9	1.4	3.1		3.4
모름/없음	3.9	4.5	6.7	2.2	2.5	6.9	1.9	2.2	1.6		3.4
보험 등 공제 협동조합	3.6	2.3	3.5		2.5	1.1	8.1	12.9	1.6	3.7	3.4
아파트주민 등의 소비자생협	3.3	3.0	5.5	3.2	1.1	3.4	4.2	1.4			31.0
에너지 등 에너지협동조합	1.8	1.5	1.6	7.5	0.3	0.6	3.1	5.8			
기타	1.7	1.9	2.0		0.6	5.7	0.8		1.6	3.7	
사회복지 협동조합	1.6	2.0	0.4	7.5	2.2	1.1					
의료 협동조합	1.2	1.6	3.5		0.3	2.3					
여가, 여행관련 협동조합	1.2	1.6	1.2	1.1	0.3	5.1					

■(전환 효과) 단체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9.0%)을, 개인은 세금감면(8.9%)을 1순위로 평가
○이외 단체에서는 고객인지도 상승(18.3%)과 정부지원 혜택 증가(18.1%)를, 개인에서는 비용감소(8.8%)와 정부지원 혜택 증가(7.1%)를 2~3위로 평가

⇒ (세부유형) 단체의 생활문화형(22.6%) 및 사회지원(29.3%)형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돌봄형(20.8%)은 정부지원 혜택증가를, 생산물류형(16.1%)은 고객인지도 상승을 1순위로 평가함

⇒ (세부유형) 개인의 돌봄형(30.5%)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근로자형(14.4%)은 세금감면에 대한 설립효과를, 생산물류형(8.8%)은 비용감소를 기대하고 있었음

○정책지원 시 전환 응답자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효과(24.0%)보다 정부지원 혜택증가(44.7%)와 고객인지도 상승(30.0%)을 긍정적으로 평가

〈표 2-30〉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_단체 대비 개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모름/없음	97.6	96.5	97.4	97.4	96.9	92.7	99.8	100.0	98.1	100.0	100.0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4.4	19.0	14.3	22.6	17.5	29.3	5.8	4.7	30.5	2.2	
고객인지도 상승	14.3	18.3	16.1	13.8	18.2	26.4	6.7	7.5	20.0	5.8	1.7
정부지원 혜택 증가	14.3	18.1	13.5	19.0	20.8	18.3	7.1	11.9	11.4	2.9	2.3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9.5	12.0	9.4	10.8	13.7	13.0	4.8	8.4	5.7	3.6	1.0
비용감소	8.1	7.7	9.6	5.6	7.7	5.7	8.8	14.1	6.7	8.8	4.0
세금감면	7.9	7.4	8.8	7.2	5.7	9.8	8.9	14.4	11.4	6.6	3.3
매출증가	6.4	6.3	11.1	3.1	2.3	11.4	6.5	10.0	5.7	5.8	3.3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체성강화	1.1	1.6	0.9	1.0	1.8	3.3					
조합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	0.6	0.8	1.1		1.1		0.1		1.0		
기타	0.3	0.4	0.6	0.5		0.8	0.1		1.0		

〈표 2-31〉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_정책지원 유무)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정책 미지원시		정책지원시설립
		전환	신규	
합계	2,502	620	375	150
모름/없음	97.6	92.3	97.1	99.3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4.4	36.0	27.2	24.0
고객인지도 상승	14.3	34.4	26.7	30.0
정부지원 혜택 증가	14.3	31.9	24.8	44.7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9.5	22.1	17.6	23.3
비용감소	8.1	13.4	24.5	18.0
세금감면	7.9	14.2	24.0	13.3
매출증가	6.4	12.4	18.4	8.7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체성 강화	1.1	3.7	1.1	
조합원들의 책임있는 참여	0.6	1.9	0.3	0.7
기타	0.3	1.0	0.3	

■(전환 예상 단체) 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43.5%)이, 개인에서는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27.7%)의 전환예상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이외 단체는 시민운동 단체(34.5%)와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및 농촌 지방주민들(20.7%)

이, 개인은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20.9%)와 농촌 등 지방주민(20.2%)이 2~3위였음

○단체의 경우, 복지차원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체에서, 개인의 경우 임금취약계층에서 협

동조합 설립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2-3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사회적기업	34.7	43.5	37.0	36.4	46.3	53.3	17.7	11.9	52.4	3.6	18.3
시민운동 단체	29.1	34.5	27.0	32.8	38.4	38.6	18.7	16.3	38.1	13.9	16.7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23.1	20.7	30.4	16.4	16.9	16.7	27.7	28.8	11.4	36.5	28.3
농촌 등 지방주민	20.5	20.7	22.1	11.8	20.2	26.8	20.2	10.6	13.3	6.6	39.0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3	15.1	16.3	16.9	14.2	14.2	15.7	16.3	26.7	14.6	11.7
주택 재개발 주민	11.5	10.4	13.7	9.7	10.5	4.5	13.6	8.4	4.8	16.1	21.0
배송업체 종사자	10.6	5.2	6.2	11.8	3.6	3.3	20.9	28.8	3.8	38.7	10.3
임금 취약 근로자	10.3	8.4	7.1	12.8	8.2	7.7	14.0	22.2	8.6	21.2	4.0
문화 예술인	7.7	8.0	5.4	27.7	4.8	7.3	7.1	7.8		9.5	7.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7.6	6.0	6.2	3.1	7.0	4.9	10.7	18.4	5.7	7.3	5.7
각종 상조회	6.9	6.7	8.1	6.2	6.3	5.7	7.2	9.1	4.8	8.0	5.7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6.2	3.7	4.9	2.1	3.0	4.9	10.8	2.5	5.7	9.5	22.0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6.0	7.9	6.2	4.6	10.8	5.3	2.3	1.3	8.6	2.2	1.3
외국인 노동자	2.3	1.4	1.1	4.1	1.0	1.2	4.1	5.9		5.8	2.7
모름	0.7	0.9	0.6		1.5	0.4	0.2	0.3	1.0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측면) 긍정적 측면에서 단체는 비영리 기관들의 자립(23.5%)을, 개인은 고용안정성 강화(22.6%)를 1위로 평가, 부정적으로는 사기 및 담합행위(46.7%)를 1위로 우려하고 있었음

○(긍정) 이외 단체에서는 일자리 생성(21.5%)과 지역경제 활성화(20.5%)를, 개인에서는 비영리기관들의 자립(17.3%)과 물가안정(15.9%)을 긍정적 효과로 평가

⇒ (고용수혜자) 전체에서 임시직 근로자(29.7%)가 1위였고, 단체는 여성 비취업자(19.8%)와 장애인(15.0%)이, 개인에서는 자영업자(19.4%), 여성비취업자(18.7%)가 2~3위였음

○(부정) 이외에 질 낮은 일자리 창출(19.1%)과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13.9%)가 2~3위임

⇒ (고용수혜자) 특히 질 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돌봄형과 사회지원형에 속한 응답자의 비중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21.4	23.5	18.4	23.1	28.1	19.9	17.3	16.3	30.5	19.0	13.0
고용안정성 강화	18.8	16.8	14.3	26.7	15.7	17.1	22.6	26.9	29.5	22.6	15.7
일자리 생성	18.5	21.5	19.1	19.5	22.4	25.2	12.9	12.8	21.0	14.6	9.3
지역경제 활성화	18.4	20.5	21.4	16.4	19.1	26.4	14.4	17.2	7.6	11.7	15.0
물가안정	8.2	4.1	9.2	3.6	1.6	2.0	15.9	9.4	1.0	13.9	29.0
상품·서비스 고품질화	7.3	5.3	7.7	5.1	4.8	2.4	11.0	7.8	4.8	15.3	14.7
대기업 횡포 완화	5.9	6.0	8.1	1.5	6.4	4.5	5.7	9.7	3.8	2.9	3.3
모름/없음	1.2	1.8	1.3	3.6	1.5	2.0	0.2		1.9		
기타	0.2	0.4	0.4	0.5	0.3	0.4					

〈표 2-34〉 다양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임시직 근로자	29.7	27.4	24.0	41.5	26.1	26.8	34.1	42.8	28.6	38.0	25.0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19.4	19.8	24.6	8.7	19.7	19.5	18.7	9.4	24.8	7.3	31.7
자영업자	13.8	10.9	12.2	11.8	10.9	7.3	19.4	21.3	9.5	24.1	18.7
퇴직 등 조기은퇴자	12.5	13.2	14.8	10.3	12.0	15.9	11.4	14.4	6.7	8.8	1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12.0	15.0	8.6	14.9	16.4	23.2	6.1	5.6	13.3	10.9	2.0
정규직 근로자	7.9	8.6	12.0	5.1	8.9	4.1	6.6	4.1	10.5	5.8	8.3
학생 등 청년	3.9	4.1	3.0	7.2	5.1	1.2	3.4	2.5	3.8	5.1	3.3
모름	0.5	0.7	0.4	0.5	0.7	1.2	0.1		1.0		
협동조합과 관계된 개별 특수 이해관계자	0.2	0.2			0.3	0.8					
기타	0.2	0.1	0.4				0.2		1.9		

〈표 2-35〉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협동조합간 담합행위	24.9	21.8	21.8	26.7	22.3	16.3	31.0	31.9	22.9	35.0	31.0
협동조합 이용한 사기	21.8	24.5	27.6	21.0	23.2	24.8	16.7	12.5	21.9	9.5	22.7
질 낮은 일자리 생성	19.1	18.8	17.1	17.4	19.1	22.4	19.6	20.6	21.9	15.3	19.7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3.9	14.4	9.6	14.4	18.4	11.4	13.0	11.9	14.3	14.6	13.0
정부의 간섭 심화	11.5	12.1	13.1	10.8	11.2	13.8	10.4	14.1	9.5	13.9	5.3
경영혁신·창의성 저하	7.3	6.8	8.1	9.2	4.5	8.9	8.4	8.8	5.7	10.2	8.0
모름/없음	1.4	1.7	2.6	0.5	1.2	2.4	0.9	0.3	3.8	1.5	0.3

■(사회측면) 긍정적으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3.7%)를, 부정적으로는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45.4%)을 1위로 평가

○(긍정) 2위로 단체와 개인 모두 복지사업 활성화(24.4%)를 뽑음

⇒ (유형) 지역차원에 토대를 둔 단체의 생산물류형과 사회지원형, 개인의 생활문화형의 경우 지역사회의 소통강화 측면을 2위로 평가

○(부정) 2위로 단체에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왜곡(26.8%)을, 개인에서는 기존 협동조합과의 경쟁(24.7%)을 뽑음

〈표 2-36〉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시민 참여의식 증대	33.7	33.7	33.6	35.4	31.3	39.4	33.9	29.4	26.7	32.1	42.0
복지 사업의 활성화	24.4	25.0	19.1	26.2	30.7	18.3	23.2	23.8	46.7	16.8	17.3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19.6	23.5	26.6	15.4	22.7	26.8	12.2	6.6	18.1	6.6	18.7
사회 양극화 해소	16.1	12.4	15.2	12.3	11.2	11.0	23.1	32.2	5.7	32.8	15.0
청년 실업 해소	5.2	4.0	4.7	8.7	2.9	2.4	7.3	8.1	1.0	10.9	7.0
모름	0.6	0.8	0.6	1.0	0.5	1.6	0.3		1.9	0.7	
영향이 없을것 같음	0.4	0.5	0.2	1.0	0.7	0.4					

〈표 2-37〉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45.4	41.2	42.8	41.5	41.5	36.6	53.6	50.3	40.0	61.3	58.3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 스 전달자)의 왜곡	22.1	26.8	25.9	23.6	28.1	27.2	13.2	11.6	26.7	12.4	10.7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 에 대한 다툼	19.9	17.3	18.8	21.0	17.1	12.2	24.7	27.2	16.2	21.2	26.7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 제 체제와의 마찰	11.5	13.2	11.6	13.8	12.0	19.5	8.2	10.9	16.2	4.4	4.3
모름/없음	1.0	1.5	0.9		1.2	4.5	0.2		1.0	0.7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 대비 경쟁력이 높
다(27.0%)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39.3%)을 뽑음

○(경쟁력 평가) 돌봄, 사회지원 등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단체들의 경우,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이 34.0%로 높은 반면에 기타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추진자들은 13.7%로 낮았음

○(차별적 우위) 단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40.6%), 다양한 구성원 참여(35.7%)
가 1~2위로 제시

〈표 2-38〉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경쟁력 낮음	23.4	17.6	16.1	25.1	19.8	8.1	34.3	39.4	13.3	46.0	31.0
동일한 수준	49.6	48.4	49.3	46.7	47.7	50.4	52.0	50.3	48.6	47.4	57.0
경쟁력 높음	27.0	34.0	34.7	28.2	32.5	41.5	13.7	10.3	38.1	6.6	12.0

〈표 2-39〉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675	557	162	55	238	102	118	33	40	9	36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39.3	40.6	45.1	25.5	40.3	42.2	33.1	27.3	45.0	22.2	27.8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37.5	35.7	34.6	50.9	34.0	33.3	45.8	45.5	40.0	44.4	52.8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4.2	15.6	13.0	14.5	19.3	11.8	7.6	6.1	2.5	33.3	8.3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7.4	7.0	7.4	7.3	4.6	11.8	9.3	9.1	10.0		11.1
기타	1.9	1.3		3.6	1.7	1.0	5.1	15.2	2.5		
법인격	0.7	0.9			1.7	1.0					
모름	0.6						3.4	9.1	2.5		

○(사업 분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7.9%)이 1위였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
(19.1%)과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15.5%)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 2~3위로 평가
⇒ (유형) 이외 문화 및 관광지원 사업분야에서는 단체(9.3%)가, 치매노인장기요양사업
과 지역사회 환경보전사업에서는 개인이 각각 12.5%, 13.7%로 긍정적으로 평가

〈표 2-40〉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37.9	38.5	38.3	37.9	38.8	38.2	36.9	42.2	35.2	35.8	32.3
취약계층 돌봄 사업	19.1	18.3	16.7	11.3	21.2	18.3	20.8	25.9	26.7	20.4	13.3
보육, 육아 영유아 사업분야	15.5	16.5	18.6	11.8	16.9	14.6	13.6	9.4	14.3	8.8	20.0
치매 노인 장기요양사업	9.8	8.4	7.5	8.2	9.0	8.1	12.5	10.6	20.0	16.1	10.3
지역사회 환경 보전 사업	9.4	7.1	8.6	10.8	5.7	5.3	13.7	10.6	1.9	14.6	20.7
문화 및 관광 지원사업	6.9	9.3	8.1	17.4	7.5	10.2	2.4	1.3	1.9	4.4	3.0
모름	0.8	1.1	1.3	1.0	0.7	2.0	0.1				0.3
기타	0.6	1.0	0.9	1.5	0.1	3.3					

○(지원 과제) 전환절차 컨설팅(22.8%)이 1위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
과정에 대한 교육(15.9%),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12.0%)를 2~3위로 요구

〈표 2-4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661	599	129	55	282	133	62	12	45	1	4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	22.8	24.2	24.0	32.7	21.3	27.1	9.7	16.7	6.7		25.0
사회적협동조합 이해와 설립과정에 대한교육	15.9	16.4	11.6	10.9	18.4	18.8	11.3	16.7	8.9		25.0
행정절차 간소화/기준완화	12.0	12.4	10.9	7.3	12.4	15.8	8.1	16.7	6.7		
무응답	11.0	8.2	11.6	9.1	5.3	10.5	38.7		48.9	100	25.0
아직은 잘 모르겠음	7.0	7.3	4.7	5.5	10.3	4.5	3.2		4.4		
행정절차 등 메뉴얼	6.7	7.0	6.2	12.7	6.7	6.0	3.2		4.4		
법률자문	6.2	6.3	5.4	9.1	6.4	6.0	4.8	8.3	4.4		
기타	5.9	6.0	5.4	1.8	8.5	3.0	4.8	8.3	4.4		
조합원 모집, 규칙 등 교육	5.6	5.8	4.7	7.3	6.7	4.5	3.2		2.2		25.0
현재는 없음	4.4	3.5	5.4		2.1	6.0	12.9	33.3	8.9		
금전지원 등 모든 도움	3.2	3.3	5.4		2.5	4.5	1.6		2.2		
정부로부터 지원사업	3.0	3.3	6.2	3.6	1.4	4.5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연대(26.7%)가,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강화(24.2%)가 시급하다고 응답

○(사회적협동조합) 단체는 협동조합 교육 및 인식개선(33.4%)을, 개인은 주민과 시민단체간 연대(33.1%)를 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반협동조합) 단체는 구성원들의 의식(28.2%)을, 개인은 구성원들의 역량강화(27.6%)를 1위로 제시

〈표 2-42〉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주민과 시민단체간 연대	26.7	23.3	25.5	25.1	23.1	18.3	33.1	29.1	19.0	25.5	45.7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26.3	33.4	31.9	24.6	33.6	42.7	12.6	12.5	39.0	5.1	7.0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5.9	26.5	30.0	25.6	24.3	26.8	24.8	24.7	26.7	23.4	25.0
지자체의 복지사업 적극 참여	20.6	16.3	12.2	24.1	18.4	11.4	28.9	33.8	13.3	44.5	22.0
모름/없음	0.5	0.5	0.4	0.5	0.5	0.8	0.5		1.0	1.5	0.3
기타	0.0						0.1		1.0		

〈표 2-43〉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소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돌봄	사회 지원	소계	근로 자	돌봄	생산 물류	생활 문화
합계	2,502	1,640	467	195	732	246	862	320	105	137	300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24.2	22.4	19.3	27.2	23.0	23.2	27.6	31.3	16.2	38.0	23.0
정부관계 기관의 적극지원	23.4	24.4	22.3	27.2	25.8	22.0	21.5	25.6	21.0	19.7	18.0
구성원의 의식	22.3	28.2	31.5	25.1	26.0	30.9	11.1	9.1	28.6	8.0	8.7
협동조합내 전문경영인영입	16.5	12.0	18.0	10.8	8.7	11.0	25.3	25.3	13.3	24.1	30.0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연대	12.2	11.2	8.6	8.7	13.8	10.6	13.9	8.8	19.0	8.8	20.0
모름/없음	1.1	1.5	0.2	0.5	2.7	0.8	0.5		1.0	1.5	0.3
기타	0.2	0.2	0.2	0.5		0.8	0.1		1.0		
조합설립·운영 지원체계	0.1	0.1				0.8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세부유형 결과분석

1. 생산·물류형 현황조사 결과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전체 생산·물류형 응답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들어본 적 없음: 5.5%)이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법 제정 인지: 45.9%)이었음

○설립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비해 개인인 배송업체와 소상공인에서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내용에서는 조사대상이 생산물류 관련 단체나 개인인 만큼 1위는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55.0%), 2위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52.8%)으로 인식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단체보다 개인들의 인지도가 낮았으며, 기존 생협들은 대부분(94.1%) 인지하고 있었음

〈표 2-44〉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농협·수협·소비자생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	55.0	48.8	65.5	32.7	54.3	66.7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	52.8	56.6	56.0	64.4	28.6	37.3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	33.1	46.4	23.0	48.5	22.9	19.6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	14.7	10.8	20.5	5.0	17.1	18.6
지방 등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	9.3	4.2	9.0	2.0	22.9	20.6
주인이 없는 단체	8.9	6.0	13.5	6.9	2.9	8.8
들어본 적 없다	5.5	2.4	1.5	5.0	20.0	13.7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	0.8	0.6		4.0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원 출자로 만듦	0.8	0.6		4.0		
기타	0.7	1.2		2.0		

〈표 2-45〉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예(알고 있음)	45.9	57.2	36.5	94.1	11.4	9.8
아니오(모름)	54.1	42.8	63.5	5.9	88.6	90.2

■(협동조합의 매력과 약점) 장점으로는 조합원 관련 내용(소유주이면서 근로자, 조합원 경영)을 매력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 대비 경쟁력(전문경영인 부족에 따른 리더십 부족, 자본 출자 능력 부족)부문을 취약점으로 평가

○기존생협들은 협동조합의 매력으로, 지분 규모에 관계없는 1인 1표제를 지정한 경우 (25.7%)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조합간의 연합회구성(13.0%)을 매력적으로 평가

○재래시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취약점으로 ‘수익축적 부족’을 지정한 경우(31.5%)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46〉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29.6	30.1	32.5	25.7	28.6	27.5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9.2	15.7	17.5	27.7	20.0	19.6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6.9	15.7	18.0	12.9	22.9	18.6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14.2	12.7	10.0	25.7	14.3	13.7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9.4	7.2	13.0	4.0	8.6	11.8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6.5	9.6	5.5	4.0	2.9	6.9
고용창출 및 안정	3.8	8.4	3.0		2.9	2.0
모름/없음	0.3	0.6	0.5			

〈표 2-47〉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36.1	45.8	35.0	29.7	45.7	25.5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25.0	28.9	18.0	39.6	14.3	21.6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19.0	7.2	31.5	14.9	14.3	19.6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13.2	13.3	8.0	9.9	17.1	25.5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6.3	4.2	7.5	5.0	8.6	7.8
모름/없음	0.3	0.6		1.0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신고를 통한 조합 설립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

립 가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잉여금과 출자좌수 한도설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마을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성에, 재래시장과 기존 생협조직들은 중앙회 조직의 설립 가능성을 매력적으로 파악하였고, 개인(배송업체, 소상공인)들 역시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에 기대를 표명

○기존 생협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금융과 보험업 영위 금지 및 정치행위 개입 금지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

○문제점에서는 설립 유형별로 대부분 잉여금 회수와 출자좌수 한도 등을 우려

〈표 2-48〉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2	35	102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4.3	32.5	29.5	46.1	34.3	46.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4.1	46.4	25.0	24.5	25.7	24.5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27.2	21.7	28.5	31.4	37.1	31.4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26.5	4.8	43.5	45.1	40.0	45.1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19.2	15.7	21.5	17.6	17.1	17.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17.4	30.7	9.5	2.0	8.6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15.9	13.9	16.5	16.7	11.4	16.7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9.8	18.7	9.0	2.0	2.9	2.0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6.1	4.2	9.5	3.9	8.6	3.9
모름	0.3	1.2				

〈표 2-49〉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1.6	38.0	33.0	14.9	37.1	33.3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21.4	15.7	25.5	18.8	22.9	24.5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16.1	13.9	16.5	22.8	11.4	13.7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5.1	7.2	14.5	24.8	17.1	18.6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 (출자금10%이하,사업수익50%이상)	12.3	18.1	10.5	8.9	11.4	9.8
모름/없음	2.6	6.6		5.0		
기타	0.7			4.0		
협동조합 회원간의 인식부족	0.3	0.6		1.0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 의향) 생산·물류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의 경우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2.8%였으며, 신규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1%로 조사되었음

○(전환) 기존 사업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해서는 마을기업(51.8%)과 기존 생협(54.5%)이 보다 긍정적이었음

○(신규) 신규사업의 협동조합 형태 추진은 응답자 모두 호응도가 낮았는데,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0.7%의 응답만이 신규사업의 협동조합 형태 추진을 선택

〈표 2-5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기존 사업 전환 의사	無	67.2	48.2	71.5	45.5	100.0	100.0
	有	32.8	51.8	28.5	54.5		
합계		406	80	143	46	35	102
신규사업 형태로 추진의사	無	86.9	85.0	99.3	71.7	71.4	83.3
	有	13.1	15.0	0.7	28.3	28.6	16.7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사업 의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생산·물류형 응답자들은 매력적인 지원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기업과의 동일 지원을 지적한 응답이 21.0%였음. 아울러 정부의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1.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을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과의 동일 지원,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등을 매력적인 지원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향이 29.8%였음

○개인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과의 동일지원 요구가 높았음

〈표 2-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353	68	142	33	25	85
지 원 정 책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22.1	16.2	23.2	48.5	4.0	20.0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인건비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21.0	33.8	12.0	18.2	32.0	23.5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6.7	33.8	11.3	15.2	16.0	12.9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	15.0	1.5	20.4		20.0	21.2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13.9	2.9	21.8	9.1	4.0	14.1
	고용지원자금으로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6.2	8.8	6.3	9.1	4.0	3.5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5.1	2.9	4.9		20.0	4.7
합계		275	57	109	17	24	68
정책지원시 설립의사		無	88.7	70.2	90.8	76.5	100.0
		有	11.3	29.8	9.2	23.5	

■(미설립 이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30.7%),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22.0%), 협동조합 성공사례 부족(13.0%)이 1~3위임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은 마을기업에서,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은 배송업체에서, 성공사례 부족과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소상공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52〉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322	51	132	29	25	85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	30.7	37.3	31.1	6.9	32.0	34.1
사업체 내 의견교환 無	22.0	5.9	29.5	10.3	32.0	21.2
협동조합 성공사례 부재	13.0	9.8	15.2		12.0	16.5
기존 형태로도 충분해서	9.9	21.6	10.6	10.3	4.0	3.5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無	9.0	3.9	6.1	3.4	12.0	17.6
모름/없음	4.3	7.8	3.8	13.8		1.2
시행령 등 제도 미확정	4.0	5.9	3.8			5.9
현재 협동조합이므로	4.0			44.8		
전환 시, 법적 문제가 존재해서	2.5	7.8		6.9	8.0	
현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0.3			3.4		

■(출자형태 및 출자금) 생산·물류형의 경우, 출자금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34.1%였으며, 약 1억 8,238만 원의 출자금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출자확대) 기존 출자금만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기존생협(71.2%)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환시 출자확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37.3%)이 가장 높았음

○(신사업) 협동조합 전환 없이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고려하는 생산·물류형의 경우, 약 3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표 2-53〉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총계	단체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합계		229	103	67	59
출자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65.9	65.0	62.7	71.2
	출자 확대	34.1	35.0	37.3	28.8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18,238	18,458	12,500	22,300

〈표 2-54〉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만원)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53	12	1	13	10	17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35,000	29,000		58,182	4,571	

*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설립시기)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사업의 협동조합 추진시기의 경우, 2014년까지 33.4%가 구성될 것으로 파악됨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등 단체는 향후 1~2년 이내 설립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인인 배송업체 응답자들은 2016년에 설립하겠다는 응답이 17.1%를 차지하였음

〈표 2-5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2013년 중	15.7	34.3	2.0	32.7	2.9	
2014년 중	17.7	25.9	17.0	21.8	5.7	5.9
2015년 중	8.3	5.4	8.5	14.9	2.9	7.8
2016년 중	2.8	1.8	2.0	2.0	17.1	2.0
2017년 중	1.3	0.6	3.0			1.0
2018년 이후	0.8	1.2	1.5			
비설립	53.3	30.7	66.0	28.7	71.4	83.3

■(설립유형) 생산·물류형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고려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마을기업, 기존 생협 사업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재래시장과 배송업체, 소상공인 사업체들은 일반협동조합을 선호

○협동조합 설립방식을 기존 사업체의 전환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신규로 설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 정책지원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을 고려

○재래시장의 경우 전환하는 경우에 일반협동조합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표 2-5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사회적협동조합	21.5	42.8	7.0	43.6		1.0
일반협동조합	25.2	26.5	27.0	27.7	28.6	15.7

〈표 2-5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소상공인
합계	130	71	14	44	1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사업에 적합	24.6	23.9	21.4	27.3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양성	16.2	12.7	42.9	13.6	
사회적가치 실현	13.8	14.1		18.2	
일자리 창출	10.8	16.9	7.1	2.3	
무응답	7.7	4.2		13.6	100.0
공동체 운영	6.9	8.5	7.1	4.5	
조합원 중심 경영추진	6.2	8.5		4.5	
취약계층을 위주 사업	3.8	4.2		4.5	
정부지원	3.8	2.8	7.1	4.5	
조합원의 복리증진	3.8		21.4	4.5	
사회적기업 추진	3.1	4.2		2.3	
경영의 안정화	2.3	4.2			
기타	2.3			6.8	
잘 모르겠다.	0.8	1.4			

■(세부설립 유형) 향후 협동조합 설립 시 고려하는 협동조합 유형으로 농·임·수산업 등 생산자 협동조합(22.0%), 재래시장·자영업자 등 구매 협동조합(18.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자 협동조합 형태를, 재래시장은 구매자 협동조합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기존생협 사업체들은 교육·의료·근로자 등 협동조합 유형이 다양하였음

〈표 2-58〉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282	115	68	72	10	17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자 협동조합	22.0	40.0	2.9	11.1		35.3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 협동조합	18.8	1.7	69.1	4.2		5.9
물류·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12.4	14.8	5.9	12.5		29.4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 협동조합	11.0	12.2		22.2		5.9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 협동조합	7.8	5.2		5.6	100.0	11.8
모름/없음	6.0	5.2	4.4	11.1		
공연 등 문화 협동조합	5.3	10.4		4.2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 생협	5.0	4.3	7.4	5.6		
보험 등 공제 협동조합	3.5	0.9	7.4	4.2		5.9
의료 협동조합	3.2			12.5		
기타	2.1	2.6	1.5	1.4		5.9
에너지 협동조합	1.4	0.9	1.5	2.8		
여가,여행관련 협동조합	1.1	1.7		1.4		
사회복지 협동조합	0.4			1.4		

■(전환 효과) 협동조합 설립으로 가장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고객인지도 상승(13.7%)이 선택되었고, 다음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1.6%), 정부지원 혜택 증가(11.1%) 등으로 조사됨

○마을기업과 기존생협들은 고객인지도 상승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큰 수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매출증가와 비용감소에 기대를 걸고 있음

⇒ 개인인 배송업체는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과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표 2-5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고객인지도 상승	13.7	25.9	4.5	22.8	5.7	5.9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1.6	25.3	1.0	22.8	8.6	
정부지원 혜택 증가	11.1	17.5	9.0	15.8	11.4	
매출증가	9.9	12.0	13.5	5.0	5.7	5.9
비용감소	9.4	10.2	11.5	5.0	8.6	8.8
세금감면	8.3	9.0	8.5	8.9	11.4	4.9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8.1	14.5	3.0	13.9	2.9	3.9
조합원들의 책임있는 사업 참여	0.8	1.2		3.0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체성강화	0.7	1.2		2.0		
기타	0.5			3.0		

■(전환 예상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로 자영업자(31.8%), 사회적기업(29.5%), 시민운동 단체(24.0%)가 1~3위였음

○마을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시민운동단체를 예상한 응답이 많았고, 재래시장에서는 자영업자(51.0%), 기존생협에서는 사회적기업(66.3%) 예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개인인 배송업체는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62.9%), 소상공인은 자영업자(36.3%)에 대한 예상이 가장 높아서, 현 직무와 관련해 협동조합 설립을 예상하고 있었음

〈표 2-60〉 협동조합기본법 발표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31.8	18.7	51.0	8.9	37.1	36.3
사회적기업	29.5	44.6	16.0	66.3		4.9
시민운동 단체	24.0	34.3	21.0	26.7	11.4	14.7
농촌 등 지방주민	18.5	30.7	20.0	11.9	2.9	7.8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5.9	16.3	13.0	22.8	14.3	14.7
주택 재개발 주민	14.2	6.0	24.0	5.9	2.9	20.6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13.6	2.4	12.0	1.0	62.9	30.4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10.3	7.2	5.0	10.9	31.4	17.6
각종 상조회	8.1	6.0	8.0	11.9	5.7	8.8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6.5	5.4	5.5	8.9	5.7	7.8
문화 예술인	6.3	6.0	5.5	4.0		12.7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6.0	3.6	6.5	4.0	5.7	10.8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5.3	8.4	2.5	9.9	5.7	1.0
외국인 노동자	2.2	0.6	2.0		5.7	5.9
모름	0.5	1.2		1.0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측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국가경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영리기관 자립(18.5%), 일자리 생성(18.0%) 등의 순이었음, 반면에 . 부정적인 효과로는 협동조합간 담합행위가 24.8%,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23.5%였음

○(긍정) 단체의 마을기업과 기존 생협들은 일자리 창출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가장 긍정적 영향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재래시장과 배송업체는 비영리기관의 자립을, 소상공인들은 고용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

⇒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계층은 임시직 근로자(27.2%)와 주부 등 여성비취업자(20.7%)로 예상하였고, 재래시장, 배송업체, 소상공인 등은 현재 종사 직무와의 연관성에서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

○(부정) 마을기업은 질 낮은 일자리 생성, 재래시장은 담합행위, 기존 생협들은 사기행위를 부정적 효과로 우려하였음

⇒ 개인 사업체(배송업체, 소상공인)들은 공히 협동조합 간 담합행위를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하였음

〈표 2-6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지역경제 활성화	19.2	26.5	16.0	23.8	14.3	10.8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18.5	16.9	25.0	7.9	22.9	17.6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18.0	28.3	5.0	31.7	11.4	15.7
고용안정성 강화	16.2	14.5	13.0	16.8	22.9	22.5
물가안정	10.3		20.0	3.0	14.3	13.7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9.4	4.2	14.0	1.0	14.3	15.7
대기업 횡포 완화	7.0	7.2	7.0	11.9		3.9
모름/없음	1.0	2.4		2.0		
기타	0.3			2.0		

〈표 2-62〉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임시직 근로자	27.2	19.9	27.5	23.8	51.4	33.3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20.7	29.5	13.5	38.6	2.9	8.8
자영업자	14.9	7.8	20.5	3.0	20.0	25.5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13.4	19.3	11.0	14.9	11.4	7.8
정규직 근로자	10.6	3.6	21.0	7.9	2.9	6.9
장애인 등 취약계층	9.1	15.1	3.5	7.9	11.4	10.8
학생 등 청년	3.5	3.0	3.0	3.0		6.9
기타	0.3	0.6		1.0		
모름	0.3	1.2				

〈표 2-6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24.8	12.0	37.5	6.9	37.1	34.3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23.5	30.1	16.0	46.5		12.7
질 낮은 일자리 생성	16.7	21.7	18.5	6.9	17.1	14.7
정부의 간섭 심화	13.2	11.4	10.5	20.8	17.1	12.7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0.8	8.4	11.0	8.9	11.4	15.7
경영상 혁신 및 창의성 저하	8.6	12.0	6.5	5.0	11.4	9.8
모름/없음	2.3	4.2		5.0	5.7	

■(사회측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인해 긍정적으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3.3%)가, 부정적으로는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47.0%)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긍정)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재래시장·기존생협·배송업체는 시민참여 의식 증대를, 소상공인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

○(부정) 기존 생협의 경우 복지전달체계의 왜곡(48.5%)을 부정적인 효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른 사업체들은 모두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

〈표 2-6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시민 참여의식 증대	33.3	30.1	31.0	44.6	40.0	29.4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22.0	33.1	21.0	26.7	11.4	4.9
사회 양극화 해소	19.2	8.4	23.5	9.9	31.4	33.3
복지 사업의 활성화	18.5	23.5	17.0	15.8	8.6	19.6
청년 실업 해소	6.1	3.0	7.5	2.0	8.6	11.8
모름	0.7	1.2		1.0		1.0
영향이 없을것 같음	0.2	0.6				

〈표 2-6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47.0	40.4	54.5	23.8	60.0	61.8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22.8	25.9	14.5	48.5	5.7	14.7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19.4	17.5	27.0	5.0	25.7	19.6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9.9	15.1	3.5	21.8	8.6	2.9
모름/없음	0.8	1.2	0.5	1.0		1.0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에 비교해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지는 경쟁력 평가에서 28.3%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43.9%)이 주된 이유였음

○(경쟁력 평가)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은 기존생협(62.4%) 및 마을기업(4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개인에서는 경쟁력이 낮거나 차이가 없다고 인식

○(차별적 우위) 재래시장·기존생협·배송업체들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1위로, 마을기업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40.3%)를 1위로 평가함

〈표 2-66〉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경쟁력이 낮음	22.8	10.8	26.5	4.0	48.6	45.1
동일한 수준/ 차이 없음	48.8	48.8	57.5	33.7	42.9	49.0
경쟁력이 높음	28.3	40.4	16.0	62.4	8.6	5.9

〈표 2-67〉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점(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171	67	32	63	3	6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43.9	38.8	56.3	46.0	66.7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35.1	40.3	21.9	34.9	33.3	50.0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4.0	9.0	15.6	15.9		50.0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7.0	11.9	6.3	3.2		

○(사업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향후 발전사업 분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7.7%), 취약계층 돌봄사업(17.5%),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16.4%)이 1~3위임

⇒ 유형별로는 기존생협의 경우 영유아 사업분야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돌봄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었음

〈표 2-6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37.7	42.8	41.0	25.7	42.9	33.3
중장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17.5	13.9	15.5	23.8	25.7	18.6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16.4	11.4	19.5	28.7	8.6	8.8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	9.9	8.4	11.0	4.0	11.4	15.7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분야	9.4	6.0	8.0	8.9	5.7	19.6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7.3	15.1	4.5	4.0	5.7	3.9
모름	1.0	1.8	0.5	2.0		
기타	0.7	0.6		3.0		

○(지원과제) 협동조합 전환절차 컨설팅이 1위였으며(23.8%),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11.5%),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10.8%)가 2~3위였음

⇒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 생협 사업체들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9〉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소상공인
합계	130	71	14	44	1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	23.8	35.2	7.1	11.4	
무응답	12.3	9.9	7.1	15.9	100.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	11.5	7.0	50.0	6.8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완화	10.8	8.5		18.2	
행정제반 절차 및 과정 등의 메뉴얼	6.2	8.5	7.1	2.3	
정부로부터 지원사업	6.2	5.6	7.1	6.8	
법률자문	5.4	5.6		6.8	
금전적 지원, 전환 절차상의 도움 모두 필요함.	5.4	4.2	7.1	6.8	
현재는 없음	5.4	2.8		11.4	
기타	5.4	4.2		9.1	
조합원 모집과 조합 규칙을 정하는 과정등 전체적 과정 교육	4.6	5.6		4.5	
아직은 잘 모르겠음	4.6	4.2	14.3	2.3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28.5%)이, 일반협동조합은 주인·공동체 의식 등 구성원들의 의식(26.2%)이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사회적협동조합) 전체적으로는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유형별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

⇒ 마을기업과 기존 생협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을, 재래시장은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배송업체와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를 각각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음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기존생협은 구성원들의 의식 함양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래시장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내 전문경영인 영입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 개인 사업체(배송업체, 소상공인)들은 구성원들의 역량강화가 일반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70〉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8.5	34.9	31.0	19.8	22.9	23.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25.8	42.2	10.0	58.4	11.4	2.9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25.5	14.5	39.0	16.8	17.1	28.4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19.5	7.8	20.0	4.0	42.9	45.1
모름/없음	0.7	0.6		1.0	5.7	

〈표 2-71〉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생산·물류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배송업체	소상공인
합계	604	166	200	101	35	102
구성원의 의식	26.2	38.6	22.5	37.6	2.9	9.8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23.5	22.9	16.0	19.8	34.3	39.2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21.7	20.5	22.5	24.8	22.9	18.6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19.4	8.4	32.5	5.0	28.6	22.5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강화	8.6	9.0	6.5	11.9	5.7	9.8
모름/없음	0.5			1.0	5.7	
기타	0.2	0.6				

2. 생활문화형 조사결과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협동조합에 대한 생활문화형 응답자의 인지도는 90.1%로 높은 편이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는 21.8%로 낮았음

○(협동조합 인자내용)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52.3%)가 가장 많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46.7%)이 그 다음이었음

⇒ 환경(대안+주거)의 경우 마음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80.4%)과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 형태(62.5%)라는 인식이 타 조사대상 보다 높았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환경(대안+주거)부문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아파트부녀회나 공연예술단체는 낮은 편이었음

〈표 2-72〉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정도(생활문화형)(복수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농협,수협,소비자 생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이다	52.3	21.4	56.1	56.3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46.7	80.4	38.1	44.3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이다	24.6	62.5	23.7	18.0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이다	17.0	8.9	17.3	18.3
주인이 없는 단체이다	12.5	1.8	7.2	17.0
지방 등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11.9	1.8	12.9	13.3
들어본 적 없다	10.9		16.5	10.3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이다	1.2	7.1	1.4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단.	0.2		0.7	

〈표 2-73〉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예	21.8	83.9	22.3	10.0
아니오	78.2	16.1	77.7	90.0

■(협동조합의 장점과 약점) 조합원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 대비 취약점으로는 리더십, 의사결정, 출자능력, 수익 축적 등 경영전반을 취약하다고 평가함

○(장점)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의 이중자격에 대해 아파트부녀회(45.7%)는 환경기업(37.5%)이나 공연예술단체(30.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단점) 2위에서는 환경기업과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1인 1표로 인한 낮은 의사 결정(28.6%)을, 아파트부녀회에서는 1인 1표로 인한 낮은 의사 결정(24.0%)과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축적부족(24.0%) 등 장기 사업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꼽았음

〈표 2-74〉 제시된 특성중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40.6	37.5	30.9	45.7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7.6	14.3	21.6	16.3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3.9	17.9	11.5	14.3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11.7	17.9	9.4	11.7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6.3	5.4	5.8	6.7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5.9	5.4	9.4	4.3
고용창출 및 안정	3.8	1.8	10.8	1.0
모름/없음	0.2		0.7	

〈표 2-75〉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29.5	32.1	28.1	29.7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21.8	28.6	14.4	24.0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21.4	19.6	32.4	16.7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21.2	10.7	19.4	24.0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5.7	8.9	4.3	5.7
기타	0.2		0.7	
모름/없음	0.2		0.7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협동조합 설립가능 내용(중앙회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설립제)은 긍정적이었지만 이익배분 내용(잉여금과 출자좌수 및 배당 한도설정)은 부정적으로 평가

○(효익) 환경(대안+주거)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55.4%)과 협동조합 법인부여(33.9%)를, 아파트부녀회는 협동조합중앙회 설립(49.3%)과 신고설립제(35.0%)를, 공연예술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37.4%)과 협동조합중앙회 설립(36.7%)을 긍정적으로 평가

○(우려) 환경기업, 아파트부녀회, 공연예술단체 모두 이익잉여금 축적(34.7%)을 1위로 부정적으로 평가

⇒ 환경기업과 아파트부녀회는 일반협동조합 배당한도 설정을 각각 26.8%, 17.3%로, 공연예술단체는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설정(22.3%)을 2위로 평가

〈표 2-76〉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40.4	1.8	36.7	49.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7.8	55.4	37.4	34.7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1.5	25.0	26.6	35.0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25.5	33.9	29.5	2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20.6	17.9	15.1	23.7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16.0	19.6	15.8	15.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10.1	25.0	15.8	4.7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7.3	3.6	9.4	7.0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5.9	10.7	7.9	4.0
모름	0.2		0.7	

〈표 2-77〉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4.7	37.5	36.7	33.3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설정 (출자금10%이하, 수익50%이상)	23.6	26.8	17.3	26.0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19.6	14.3	22.3	19.3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1.5	12.5	7.2	13.3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9.5	5.4	14.4	8.0
모름/없음	0.6	1.8	M1.4	
저희단체와 관련성 없음	0.2	1.8		
기타	0.2		0.7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 의향) 기존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자는 8.0%였음

○(전환) 환경기업(대안+주거)은 62.5%로 높았지만 공연 예술단체 18.0%로 낮았음

○(신규)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기업은 28.6%였으며 아파트 부녀회가 8.0%, 그리고 공연예술단체는 4.4%로 매우 낮았음

〈표 2-78〉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기존사업 전환의사	無	87.9	37.5	82.0	100.0
	有	12.1	62.5	18.0	
합계		435	21	114	300
신규사업형태로 추진의사	無	92.0	71.4	95.6	92.0
	有	8.0	28.6	4.4	8.0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사업 의향) 미 설립자에 한해 부가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냐고 질문한 결과, 설립률은 9.1%였음

○(전환율) 환경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연예술단체가 17.3%, 아파트 부녀회가 2.7%였음

○(정책평가)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정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처럼 직접적인 재정지원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

○(유형) 환경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60.0%)를, 아파트부녀회는 시민기금 조성으로 긴급자금 지원(16.7%)을, 공연예술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33.0%)을 각각 1위로 평가

⇒ 이외 환경기업과 아파트부녀회는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를 2위로, 공연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을 2위로 평가

〈표 2-79〉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지원 정책	합계	400	15	109	276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26.0	13.3	10.1	33.0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 지원	20.0	26.7	33.0	14.5
	협동조합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6.8	60.0	15.6	14.9
	법적으로 시민기금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부실시 긴급자금 지원	14.5		11.0	16.7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14.0		16.5	13.8
	고용보험 법령상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5.3		5.5	5.4
	정부 고용지원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경영권설당 지원	3.5		8.3	1.8
합계		296	13	98	18.5
신규사업형태로 추진의사	無	90.9	61.5	82.7	97.3
	有	9.1	38.5	17.3	2.7

■(미 설립 이유)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29.8%),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24.7%), 사업체 내 의견교환 부족(22.0%)이 설립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이유로 조사됨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의 경우 환경기업이,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가, 사업체 내 의견교환 부족의 경우 공연예술단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표 2-80〉 기존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373	10	92	271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29.8	40.0	38.0	26.6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성공한 예를 보지 못해서	24.7		8.7	31.0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체내 의견교환이 없어서	22.0	10.0	27.2	20.7
기존 사업형태로도 충분이 사업이 되어서	6.7	20.0	6.5	6.3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6.2	10.0	5.4	6.3
정부의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없어서	5.9		1.1	7.7
전환 시, 법적 문제가 존재해서	2.1	10.0	4.3	1.1
모름/없음	1.9		6.5	0.4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0.5		2.2	
기타	0.3	10.0		

■(출자형태 및 출자금) 기존 사업형태를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출자금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17.1%였으며 출자금 평균액은 1억 4,286억 원이었음

○(전환유형) 환경기업보다 공연예술단체가 기존 출자금만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출자금 확대 시 금액은 반대로 공연예술단체가 높았음

○(신사업)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을 고려 시, 신규 출자금은 3억 2,500만 원이었고, 환경기업이 3억 8,750만 원으로 아파트부녀회와 공연예술단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8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총계	단체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합계		82	40	42
출자 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82.9	80.0	85.7
	출자확대	17.1	20.0	14.3
출자금 평균*		14,286	12,000	20,000

주: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표 2-8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만원)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0	6	5	29
출자금 평균*	32,500	38,750	20,000	20,000

주: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설립시기) 설립예정 단체 24.6% 중 약 20.3%가 2013~15년 중에 설립될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환경기업이 설립을 선도할 것으로 파악

○(전환유형) 환경기업과 공연예술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3년 안에, 아파트 부녀회는 시행 2~4년 안에 설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됨

〈표 2-83〉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소계	495	56	139	300
2013년 중	6.1	30.4	7.9	0.7
2014년 중	7.1	26.8	6.5	3.7
2015년 중	7.1	12.5	12.9	3.3
2016년 중	2.4	7.1	2.2	1.7
2017년 중	0.4	1.8	0.7	
2018년 이후	1.6	3.6	3.6	0.3
비설립	75.4	17.9	66.2	90.3

■(설립유형) 전체적으로는 비설립,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순이지만, 세부적으로 사회

적협동조합의 경우 환경기업(50.0%)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아파트부녀회(8.3%)의 설립의향이 높았음

○(환경기업) 추진이유로 현 사업과의 적합성(25.0%),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진(21.4%),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17.9%)을 1~3위로 제시

○(아파트부녀회) 추진이유로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양성(75.0%)이 1위,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25.0%)이 2위였음

○(공연예술단체) 1위인 사회적 가치 실현(22.2%)에 이어, 현 사업과의 적합성(14.8%)과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14.8%)이 2위였음

〈표 2-84〉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사회적협동조합	11.9	50.0	19.4	1.3
일반협동조합	12.7	32.1	14.4	8.3
비설립	75.4	17.9	66.2	90.3

〈표 2-8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59	28	27	4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사업에 적합	18.6	25.0	14.8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고 싶으니까	16.9	17.9	14.8	25.0
사회적 가치 실현	13.6	7.1	22.2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양성	10.2	7.1	3.7	75.0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진	10.2	21.4		
공동체 운영	8.5	7.1	11.1	
일자리 창출	6.8	3.6	11.1	
조합원의 복리증진	5.1	3.6	7.4	
정부지원	3.4	7.1		
경영의 안정화	3.4		7.4	
잘 모르겠다.	1.7		3.7	
기타	1.7	3.6		
무응답	1.7		3.7	

■(세부설립 유형) 전체적으로 문화협동조합이 37.7%로 1위였고 다음으로 근로자협동조합(16.4%)이 2위, 구매협동조합과 소비자생협이 각각 9.8%로 3위였음

○각 조사대상별로는 현 사업과의 적합성을 고려, 환경기업은 택배·청소부·가사 등의 근로자협동조합(41.3%)을 공연예술단체는 특성상 공연 등 문화협동조합(91.5%)을 고려하고 있었음

○아파트부녀회는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협동조합(41.4%)과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생협(31.0%) 등 2가지 유형이 72.4%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2-86〉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122	46	47	29
공연 등 문화협동조합	37.7	4.3	91.5	3.4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협동조합	16.4	41.3	2.1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협동조합	9.8			41.4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생협	9.8	6.5		31.0
에너지 등 에너지협동조합	5.7	15.2		
사회복지협동조합	5.7	15.2		
물류, 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4.9	10.9	2.1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자협동조합	3.3	2.2		10.3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	2.5	2.2		6.9
모름/없음	2.5		4.3	3.4
보험 등 공제협동조합	0.8			3.4
여가,여행 관련 협동조합	0.8	2.2		

■(전환 효과) 전체적으로 정부지원혜택 증가(8.9%)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8.9%)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객인지도 상승(6.5%)이 3위로 나타남

○조사대상별 기대효과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환경기업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48.2%)과 고객인지도 상승(28.6%)을 기대하는 반면, 아파트부녀회는 비용감소(4.0%)와 세금감면(3.3%)을 공연예술단체는 정부지원혜택 증가(16.5%)을 기대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87〉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생활문화형)(복수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모름/없음	99.0	91.1	100.0	100.0
정부지원 혜택 증가	8.9	25.0	16.5	2.3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8.9	48.2	12.2	
고객인지도 상승	6.5	28.6	7.9	1.7
세금감면	4.8	8.9	6.5	3.3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4.8	14.3	9.4	1.0
비용감소	4.6	8.9	4.3	4.0
매출증가	3.2	1.8	3.6	3.3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체성강화	0.4	3.6		
기타	0.2	1.8		

■(전환 예상 단체) 환경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55.4%)이, 아파트부녀회는 농촌 등 지방주민들(39.0%), 공연예술단체는 문화예술인(38.1%)의 전환예상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이외 환경(주거+대안)은 시민운동단체(39.3%)와 청소부 등 임금 취약근로자(23.2%)를, 아파트 부녀회는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28.3%)와 주부 등 아파트부녀회(22.0%)를, 공연예술단체는 시민운동단체(30.2%)와 사회적기업(28.8%)을 2~3위로 평가

〈표 2-8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농촌 등 지방주민	28.3	14.3	10.8	39.0
사회적기업	25.5	55.4	28.8	18.3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23.6	16.1	16.5	28.3
시민운동 단체	23.0	39.3	30.2	16.7
주택 재개발 주민	16.6	3.6	12.2	21.0
문화 예술인	15.6	1.8	38.1	7.7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14.1	1.8	2.2	22.0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3.7	21.4	15.1	11.7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10.9	1.8	15.8	10.3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7.5	23.2	8.6	4.0
각종 상조회	5.9	5.4	6.5	5.7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6	7.1	1.4	5.7
외국인 노동자	3.2		5.8	2.7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2.6	5.4	4.3	1.3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측면) 긍정적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20.0%)와 물가안정(19.0%)을 부정적 측면에서는 협동조합간 담합행위(29.3%)와 사기행위(22.0%)를 우려하고 있었음

○(긍정) 조사대상별에서는 환경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30.4%)를, 아파트부녀회는 물가안정(29.0%)을, 공연예술단체는 고용안정성 강화(29.5%)을 1위로 뽑았음

⇒ (고용수혜자) 임시직근로자(31.5%)와 여성 비취업자(22.6%)가 1~2위였고, 조사대상별로는 환경기업(41.1%)과 공연예술단체(41.7%)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를 아파트부녀회는 여성 비취업자(31.7%)를 주 수혜자로 판단하고 있었음

○(부정) 세부적으로 환경기업은 질 낮은 일자리 생성(25.0%)을, 아파트부녀회(31.0%)와 공연예술단체(33.1%)는 협동조합간 담합행위를 우려하고 있었음

〈표 2-8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고용안정성 강화	20.0	19.6	29.5	15.7
물가안정	19.0		5.0	29.0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17.0	12.5	27.3	13.0
지역경제 활성화	15.6	30.4	10.8	15.0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13.3	28.6	15.8	9.3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10.9	1.8	6.5	14.7
대기업 횡포 완화	2.6	3.6	0.7	3.3
모름/없음	1.4	3.6	3.6	
기타	0.2		0.7	

〈표 2-90〉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계층(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임시직 근로자	31.5	41.1	41.7	25.0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22.6	7.1	9.4	31.7
자영업자	16.0	7.1	13.7	18.7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10.7	10.7	10.1	11.0
정규직 근로자	7.1	1.8	6.5	8.3
장애인 등 취약계층	7.1	32.1	7.9	2.0
학생 등 청년	4.8		10.1	3.3
모름	0.2		0.7	

〈표 2-91〉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29.3	10.7	33.1	31.0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22.0	23.2	20.1	22.7
질 낮은 일자리 생성	18.8	25.0	14.4	19.7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3.5	8.9	16.5	13.0
경영상 혁신 및 창의성 저하	8.5	12.5	7.9	8.0
정부의 간섭 심화	7.5	17.9	7.9	5.3
모름/없음	0.4	1.8		0.3

■(사회측면) 긍정적으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9.4%)를, 부정적으로는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51.7%)을 1위로 평가

○(긍정) 2위로 환경기업(30.4%)과 아파트부녀회(18.7%)는 지역사회의 소통강화를, 공연예술단체는 복지사업 활성화(26.6%)를 뽑음

○(부정) 세부적으로 환경(대안+주거)는 복지전달체계의 왜곡(35.7%)을 1위로, 아파트부녀회(26.7%)와 공연예술단체(25.9%)는 기존 협동조합과의 경쟁을 2위로 평가하였음

〈표 2-9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시민 참여의식 증대	39.4	33.9	36.0	42.0
복지 사업의 활성화	20.8	25.0	26.6	17.3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17.4	30.4	9.4	18.7
사회 양극화 해소	13.9	7.1	14.4	15.0
청년 실업 해소	7.7		12.2	7.0
영향이 없을것 같음	0.4		1.4	
모름	0.4	3.6		

〈표 2-9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51.7	32.1	45.3	58.3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24.4	8.9	25.9	26.7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15.8	35.7	18.7	10.7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8.1	23.2	10.1	4.3

■(복지측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8.4%가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51.6%)때문이었음

○(경쟁력 평가) 환경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이 42.9%로 높은 반면에 아파트부녀회(31.0%)나 공연예술단체(33.8%)는 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이 더 높았음

○(차별적 우위) 환경기업(41.7%)과 아파트 부녀회(27.8%)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2위로, 공연예술단체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42.9%)을 1위로 평가함

〈표 2-94〉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경쟁력이 낮음	28.7	3.6	33.8	31.0
동일한 수준/ 차이 없음	52.9	53.6	43.9	57.0
경쟁력이 높음	18.4	42.9	22.3	12.0

〈표 2-95〉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91	24	14	36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51.6	54.2	35.7	52.8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26.4	41.7	14.3	27.8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2.1		42.9	8.3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8.8		7.1	11.1
기타	2.2	8.3		

○(사업분야)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4.5%)이 1위였으며, 다음으로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16.8%)과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16.8%)을 공동 2위로 평가

〈표 2-96〉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34.5	57.1	30.2	32.3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16.8	8.9	12.9	20.0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보전 사업	16.8	5.4	12.9	20.7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12.5	14.3	10.1	13.3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 분야	9.5	7.1	8.6	10.3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8.7		24.5	3.0
기타	0.6	3.6	0.7	
모름	0.6	3.6		0.3

○(지원과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절차 컨설팅(32.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위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 교육(11.9%)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11.9%)가 공동 2위였음

〈표 2-9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59	28	27	4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	32.2	32.1	33.3	25.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	11.9	21.4		25.0
행정제반 절차 및 과정 등의 메뉴얼	11.9	10.7	14.8	
무응답	10.2	10.7	7.4	25.0
법률자문	8.5	3.6	14.8	
조합원 모집과 조합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 등 교육	8.5	3.6	11.1	25.0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완화	6.8	3.6	11.1	
아직은 잘 모르겠음	5.1	3.6	7.4	
정부로부터 지원사업	3.4	7.1		
기타	1.7	3.6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연대(37.6%)가, 일반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역량강화(24.6%)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평가함

○(사회적협동조합) 환경기업은 협동조합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33.9%)을, 아파트부녀회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연대(45.7%)를, 공연예술단체는 조합원간의 공동체정신(27.3%)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적극적 참여(27.3%)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반협동조합) 환경기업은 구성원의 의식(44.6%)을, 아파트부녀회는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30.0%)을, 공연예술단체는 구성원들의 역량강화(32.4%)를 1위로 평가

〈표 2-98〉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37.6	26.8	24.5	45.7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5.3	21.4	27.3	25.0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22.8	16.1	27.3	22.0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13.9	33.9	20.9	7.0
모름/없음	0.4	1.8		0.3

〈표 2-99〉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생활문화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환경(대안+주거)	공연예술단체	아파트부녀회
합계	495	56	139	300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24.6	14.3	32.4	23.0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22.4	3.6	13.7	30.0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21.6	26.8	27.3	18.0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강화	15.6	8.9	8.6	20.0
구성원의 의식	15.2	44.6	17.3	8.7
모름/없음	0.4	1.8		0.3
기타	0.2		0.7	

3. 돌봄형 현황조사 결과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전체 돌봄형 응답자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의견은 4.4%로 매우 낮은 반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40.0%가 인식하고 있었음

○(협동조합) 인지내용 중 1위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61.8%), 2위는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47.6%)였음

⇒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라는 응답에 대해 공동육아와 대안학교, 돌봄기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협동조합기본법) 법제정 인지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았으며(19.6%), 공동육아(94.1%) 및 대안학교(73.3%)에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음

〈표 2-10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돌봄형)(중복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61.8	97.1	54.0	86.7	67.2	60.0	
농협,수협,소비자 생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이다	47.6	23.5	57.9	23.3	39.0	42.9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이다	36.8	52.9	31.3	23.3	45.9	34.3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이다	8.2	2.9	11.5	3.3	6.6	2.9	
주인이 없는 단체이다	7.0	11.8	6.1	6.7	6.9	9.5	
지방 등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5.0		7.8	3.3	2.3	2.9	
들어본 적 없다	4.4		4.4		2.3	12.4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이다	1.7	2.9	0.2	6.7	2.7	2.9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단	1.1		0.5	3.3	2.3		
기타	0.2				0.8		

〈표 2-10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예(알고 있음)	40.0	94.1	19.6	73.3	56.8	51.4	
아니오(모름)	60.0	5.9	80.4	26.7	43.2	48.6	

■(협동조합의 매력과 약점) 응답자들은 소유주이면서 근로자, 조합원 경영 등 조합원 관련 내용을 매력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 대비 전문경영인 부족에 따른 리더십 부족, 자본 출자 능력 부족 등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평가

○공동육아의 경우 협동조합의 매력으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를 지적인 경우(35.3%)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을 지적(27.9%)

○대안학교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30.0%)이나 1인 1표제(26.7%)를 장점으로 지적인 반면, 돌봄기관 및 돌봄종사자는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을 협동조합의 매력으로 응답함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취약점으로 수익축적 부족을 지적인 경우(33.3%)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0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30.3	20.6	27.9	13.3	34.7	37.1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7.7	35.3	17.1	10.0	17.4	17.1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7.3	23.5	15.6	13.3	19.3	18.1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10.4		12.7	30.0	7.7	5.7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9.8	20.6	9.3	26.7	7.7	8.6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7.2		8.6	3.3	5.0	10.5
고용창출 및 안정	6.2		7.3		7.3	2.9
모름/없음	0.8		1.2		0.8	
기타	0.2		0.2	3.3		

〈표 2-10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33.8	17.6	34.7	13.3	40.2	25.7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30.9	44.1	29.3	43.3	30.1	31.4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16.8	20.6	18.1	33.3	12.4	17.1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10.2	14.7	8.1	3.3	12.7	12.4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6.8		8.1	6.7	4.6	9.5
모름/없음	1.4	2.9	1.7			3.8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과 협동조합에 법인자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잉여금 적립과 정치행위 개입금지, 출자좌수 한도설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공동육아는 법인자격 부여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개인 돌봄종사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기대를 표명

○대안학교와 돌봄종사자는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파악

○나머지는 잉여금 적립과 정치행위 금지, 출자좌수 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

〈표 2-10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44.6	44.1	44.5	30.0	50.6	34.3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31.9	67.6	27.6	36.7	34.0	30.5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31.9	8.8	32.5	26.7	34.0	33.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22.6	32.4	19.1	16.7	27.4	22.9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19.7	14.7	22.2	33.3	17.4	13.3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13.9		19.3	6.7	7.7	1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9.0	8.8	9.0		9.3	10.5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8.1	14.7	9.0		5.4	11.4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6.9		9.5	3.3	3.9	7.6
모름	1.2	2.9	1.2		1.2	1.0

〈표 2-10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자기자본의 3배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2.4	52.9	31.1	13.3	37.5	23.8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16.8	26.5	18.3	10.0	13.9	17.1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16.5	14.7	16.4	20.0	14.3	21.9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	14.2		13.4	6.7	16.2	19.0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1.9		14.9	3.3	9.7	12.4
모름/없음	7.0	2.9	5.1	46.7	7.3	3.8
기타	0.5	2.9			0.4	1.9
저희단체와 관련성 없음	0.4		0.5		0.4	
국가보조의 감소	0.2		0.2		0.4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 의향)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8.4%였으며, 신규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1.0%로 조사되었음

○(전환) 기존 사업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해서는 공동육아(79.4%)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돌봄기관 39.8%, 지역아동센터 24.7%, 대안학교 23.3%의 순이었음

○(신규) 신규사업의 협동조합 형태 추진에서 단체의 경우는 돌봄기관 18.6%, 대안학교 17.4%, 지역아동센터 10.1%의 순이나 공동육아는 추진의향이 없음

⇒ 개인 돌봄종사자는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가입할 의사가 매우 높음(59.0%)

〈표 2-10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기존 사업 전환 의사	無	71.6	20.6	75.3	76.7	60.2	100.0
	有	28.4	79.4	24.7	23.3	39.8	
합계		599	7	308	23	156	105
신규사업 형태로 추진의사	無	79.0	100.0	89.9	82.6	81.4	41.0
	有	21.0		10.1	17.4	18.6	59.0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사업 의향) 정부의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5.5%였으며, 지원정책 중 사회적기업과의 동일 지원의 응답이 44.6%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가 18.0%로 2위였음

○공동육아의 경우, 사회적기업과의 동일 지원을 매력적인 지원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향율이 83.3%로 나타남

○대안학교의 경우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의 응답이 많음(36.8%)

○개인 돌봄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과의 동일지원 요구가 높았으나, 설립 의향은 5.6%로 낮음

〈표 2-10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473	7	277	19	127	43
지원 정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44.6	71.4	44.0	21.1	44.9	53.5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8.0		17.7	10.5	20.5	18.6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14.0	14.3	12.6	31.6	13.4	16.3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8.7	14.3	7.9	36.8	7.9	2.3
	정부 고용지원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경영건설탕 지원	6.3		7.6		4.7	7.0
	법적으로 시민기금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부설시 긴급자금 지원	5.3		6.9		3.9	2.3
	고용보험 법령상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3.2		3.2		4.7	
합계		407	6	242	13	110	36
정책지원시 설립의사	無	84.5	16.7	85.5	92.3	81.8	94.4
	有	15.5	83.3	14.5	7.7	18.2	5.6

■(미설립 이유)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47.6%), 기존형태로도 사업이 되어서(14.6%),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9.3%) 등이 1~3위였음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은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돌봄기관 및 돌봄종사자가 지적하였고, 대안학교는 기존의 사업형태로도 충분히 사업이 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음

〈표 2-108〉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410	2	242	18	107	41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47.6	50.0	56.6	22.2	35.5	36.6
기존 사업형태로도 충분히 사업이 되어서		14.6		11.2	38.9	19.6	12.2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체내 의견교환이 없어서		9.3		8.7	11.1	10.3	9.8
모름/없음		7.3	50.0	5.0		6.5	24.4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성공한 예를 보지 못해서		5.1		6.2		4.7	2.4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4.9		4.1		6.5	7.3
전환 시, 법적 문제가 존재해서		4.6		3.7	16.7	6.5	
정부의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없어서		4.4		2.9	5.6	6.5	7.3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1.7		1.2	5.6	2.8	
기타		0.5		0.4		0.9	

■(출자형태 및 출자금) 출자금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자는 22.1%였으며, 고려하는 출자금액은 약 2억 1,042만 원이었음

○(출자확대)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공동육아(84.4%)와 지역아동센터(80.1%) 돌봄기관(7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안학교에서는 낮은 편이었음

○(신사업) 출자금 규모는 약 2억 769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대안학교 및 돌봄기관보다 출자금액이 높게 나타남

〈표 2-109〉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돌봄형)
(단위: 개, 명, %, 만원)

구분		총계	단체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합계		299	32	136	8	123
출자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77.9	84.4	80.1	37.5	76.4
	출자 확대	22.1	15.6	19.9	62.5	23.6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21,042	15,000	22,143	10,000	23,077

〈표 2-110〉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돌봄형)

(단위: 개, 명, 만원)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128		31	4	29	64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20,769		40,833	5,000	10,000	18,750

*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설립시기) 협동조합 설립의향이 있는 51.0%의 응답자 중에서 33.4% 정도가 2014년까지 설립을 할 것으로 예상됨

○공동육아,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등은 향후 1~2년 이내 설립 비율이 많았으나,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이후에 설립하겠다는 응답이 18.1%를 차지하였음

〈표 2-111〉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2013년 중		18.6	58.8	12.5	10.0	21.6	24.8
2014년 중		14.8	32.4	10.3	23.3	18.1	16.2
2015년 중		11.1	2.9	8.3	3.3	15.1	17.1
2016년 중		2.0		2.9		1.5	1.0
2017년 중		0.7		1.0		0.8	
2018년 이후		3.7		5.9	3.3	1.5	1.9
비설립		49.0	5.9	59.2	60.0	41.3	39.0

■(설립유형) 돌봄형 범주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및 개인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호

○설립방식을 기존 사업체의 전환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신규로 설립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경우, 정책지원 시, 전환하는 경우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함.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18.3%)이며, 공동육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실현(47.8%)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2-112〉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사회적협동조합	39.1	67.6	32.5	26.7	45.6	42.9
일반협동조합	11.9	26.5	8.3	13.3	13.1	18.1
비설립	49.0	5.9	59.2	60.0	41.3	39.0

〈표 2-1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327	23	133	8	118	4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현재사업에 적합	18.3	8.7	16.5	62.5	26.3	
사회적가치 실현	16.5	47.8	20.3	12.5	9.3	8.9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양성	12.5	13.0	18.0		11.0	2.2
무응답	10.1	4.3	5.3		2.5	48.9
기타	8.6		0.8		11.9	28.9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고 싶으니까	7.0	4.3	7.5	12.5	9.3	
일자리 창출	5.8	4.3	5.3		7.6	4.4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기 때문	4.6		5.3	12.5	5.1	2.2
공동체 운영	4.0	8.7	3.8		2.5	6.7
정부지원	3.7	8.7	3.8		2.5	4.4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진	3.4	4.3	3.8		4.2	
조합원의 복리증진	3.1		3.8		4.2	
잘 모르겠다.	2.8		6.0		0.8	
경영의 안정화	2.1		3.0		2.5	

■(세부설립 유형)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 협동조합(6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 협동조합(11.0%)이었음

○돌봄기관 일부는 근로자 협동조합(26.3%)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일부는 생산자협동조합(5.4%), 물류협동조합(4.2%), 구매협동조합(3.6%), 문화협동조합(3.6%) 설립도 고려하고 있었음

〈표 2-114〉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돌봄형)(중복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427	32	167	12	152	64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	64.4	96.9	76.6	75.0	37.5	78.1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협동조합	11.0		1.2	8.3	26.3	6.3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자협동조합	6.8		5.4		11.2	4.7
물류, 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3.7		4.2		4.6	3.1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협동조합	2.8		3.6		3.9	
보험 등 공제협동조합	2.3		1.2		4.6	1.6
공연 등 문화협동조합	2.3		3.6	8.3	0.7	3.1
모름/없음	2.3		1.8		3.9	1.6
사회복지협동조합	1.9		0.6		4.6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생협	0.9		0.6		2.0	
기타	0.7	3.1		8.3		1.6
에너지 등 에너지협동조합	0.2		0.6			
의료협동조합	0.2		0.6			
여가, 여행관련 협동조합	0.2				0.7	

■(전환 효과) 협동조합 전환으로 가장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정부지원 혜택 증가(19.6%)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9.1%), 고객인지도 상승(18.4%) 등으로 조사되었음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등은 정부지원 혜택 증가를 큰 수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돌봄기관과 개인 돌봄종사자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고객인지도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음

○공동육아의 경우는 고객인지도 상승과 비용감소의 측면도 기대하고 있었고, 대안학교는 재무구조의 안정도 지적하고 있음

〈표 2-115〉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돌봄형)(중복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모름/없음	97.0	85.3	97.1	100.0	97.7	98.1
정부지원 혜택 증가	19.6	70.6	19.6	16.7	16.6	11.4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9.1	2.9	12.5	13.3	27.8	30.5
고객인지도 상승	18.4	23.5	15.2	6.7	23.6	20.0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12.7	11.8	13.4	16.7	13.9	5.7
비용감소	7.5	20.6	8.3	13.3	4.2	6.7
세금감면	6.5	17.6	2.4	6.7	9.3	11.4
매출증가	2.7		1.5	3.3	3.9	5.7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체성강화	1.6	8.8	1.5		1.5	
조합원들의 책임있는 사업 참여	1.1	5.9	1.2		0.4	1.0
기타	0.1					1.0

■(전환 예상 단체) 사회적기업(47.1%), 시민운동 단체(38.4%), 농민 등 지방주민(19.4%), 자영업자(16.2%) 등의 순으로 예상

○이외 공동육아에서는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52.9%)를, 대안학교와 돌봄기관, 돌봄종사자들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움직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

〈표 2-116〉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돌봄형)(중복응답)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사회적기업	47.1	55.9	46.0	26.7	47.9	52.4
시민운동 단체	38.4	26.5	36.2	43.3	42.9	38.1
농촌 등 지방주민	19.4	17.6	21.8	13.3	18.9	13.3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16.2	8.8	21.3	10.0	12.0	11.4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5.8	5.9	10.8	20.0	20.1	26.7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10.5	52.9	12.0	13.3	3.1	8.6
주택 재개발 주민	9.8	5.9	13.4	3.3	7.3	4.8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8.2		6.6		12.7	8.6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6.8	2.9	8.6	6.7	5.0	5.7
각종 상조회	6.1		5.1	6.7	8.9	4.8
문화 예술인	4.2	8.8	4.2	6.7	5.0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3.6		4.6		2.7	3.8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3.3	5.9	2.4	6.7	3.1	5.7
모름	1.4	2.9	1.2		1.9	1.0
외국인 노동자	0.8		1.7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측면) 비영리기관 자립(28.4%)과 일자리 생성(22.2%)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23.1%)와 협동조합간 담합행위(22.3%)를 부정적으로 평가함

○(긍정) 이외에 돌봄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22.4%)를, 돌봄종사자는 고용안정성 강화(29.5%) 측면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

⇒ (고용수혜자) 전반적으로 임시직 근로자(26.4%)와 주부 등 여성비취업자(20.3%)가 예상되었고, 돌봄기관(29.7%)과 돌봄종사자(13.3%)들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

○(부정) 공동육아는 정부의 간섭심화(41.2%)를, 지역아동센터(25.4%)와 대안학교(26.7%)는 정치세력화를, 돌봄기관(30.1%)과 돌봄종사자(21.9%)는 질 낮은 일자리 생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17〉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28.4	47.1	28.1	53.3	22.8	30.5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22.2	17.6	21.8	16.7	24.7	21.0
지역경제 활성화	17.7	11.8	17.6	20.0	22.4	7.6
고용안정성 강화	17.4	8.8	14.7	6.7	19.3	29.5
대기업 횡포 완화	6.1	8.8	7.8	3.3	4.2	3.8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4.8		6.6		3.1	4.8
물가안정	1.6	2.9	2.0		1.2	1.0
모름/없음	1.6	2.9	1.5		1.5	1.9
기타	0.2				0.8	

〈표 2-118〉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협동조합 생성 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임시직 근로자	26.4	20.6	26.7	16.7	27.0	28.6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20.3	41.2	21.5	26.7	13.1	24.8
장애인 등 취약계층	16.0	8.8	9.3	6.7	29.7	13.3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11.4	5.9	12.7		13.1	6.7
자영업자	10.8	14.7	11.5	16.7	8.9	9.5
정규직 근로자	9.1	8.8	10.8	3.3	6.6	10.5
학생 등 청년	4.9		6.4	30.0	0.8	3.8
모름	0.7		1.0		0.4	1.0
협동조합과 관계된 개별 특수 이해관계자	0.2		0.2		0.4	
기타	0.2					1.9

〈표 2-119〉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23.1	29.4	23.7	23.3	21.6	21.9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22.3	8.8	24.9	30.0	18.9	22.9
질 낮은 일자리 생성	19.5	17.6	13.2	6.7	30.1	21.9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7.9		25.4	26.7	8.9	14.3
정부의 간섭 심화	11.0	41.2	7.8	13.3	12.4	9.5
경영상 혁신 및 창의성 저하	4.7		4.2		6.2	5.7
모름/없음	1.6	2.9	0.7		1.9	3.8

■(사회측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복지사업의 활성화(32.7%)를, 부정적으로는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41.3%)을 1위로 평가

○(긍정) 이외에 공동육아와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를,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종사자, 돌봄기관은 시민 참여의식 증대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설립 유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종사자는 복지사업 활성화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공동육아와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많이 지적함

○(부정) 공동육아의 경우 복지전달체계의 왜곡(38.2%)을 부정적인 사회 효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른 사업체들은 모두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

〈표 2-120〉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복지 사업의 활성화	32.7	8.8	34.0	23.3	29.3	46.7
시민 참여의식 증대	30.7	41.2	27.9	23.3	36.3	26.7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22.1	44.1	20.8	26.7	22.4	18.1
사회 양극화 해소	10.5	5.9	12.5	20.0	8.9	5.7
청년 실업 해소	2.6		3.4	6.7	1.9	1.0
모름	0.7		0.5		0.8	1.9

〈표 2-12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41.3	20.6	44.3	56.7	38.2	40.0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28.0	38.2	27.1	20.0	29.3	26.7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17.0	8.8	18.8	6.7	16.6	16.2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12.5	20.6	9.3	13.3	15.1	16.2
모름/없음	1.2	11.8	0.5	3.3	0.8	1.0

■(복지측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은 전체 33.2%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41.0%)이라고 응답함

○(경쟁력 평가)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은 모든 단체 및 개인이 30%를 상회

⇒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공동육아 32.4%, 지역아동센터 33.0%, 대안학교 30.0%, 돌봄기관 32.0%, 돌봄종사자 38.1%임

⇒ 그럼에도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차이 없다는 응답(47.8%)

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공동육아 61.8%, 돌봄기관 54.1%의 순으로 높았음

○(차별적 우위) 모든 조사대상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차별적 우위로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를 제외한 기관 및 개인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도 우위가 있는 항목으로 지적

〈표 2-122〉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경쟁력이 낮음	19.0	5.9	24.0	30.0	13.9	13.3
동일한 수준/ 차이 없음	47.8	61.8	43.0	40.0	54.1	48.6
경쟁력이 높음	33.2	32.4	33.0	30.0	32.0	38.1

〈표 2-123〉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278	11	135	9	83	40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41.0	36.4	40.7	66.7	37.3	45.0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34.9	36.4	34.8		36.1	40.0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6.9	27.3	18.5	22.2	19.3	2.5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5.4		5.2		4.8	10.0
기타	1.8		0.7	11.1	2.4	2.5
법인격	1.4		0.7	11.1	2.4	
모름	0.4					2.5

○(사업 분야) 향후 발전사업 분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8.4%)이 1위였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 돌봄사업(21.9%)과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 분야(16.6%)를 지적

⇒ 공동육아의 경우 영유아 사업 분야와 취약계층 돌봄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돌봄기관과 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사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표 2-124〉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38.4	14.7	34.5	53.3	47.1	35.2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21.9	23.5	22.5	20.0	18.9	26.7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16.6	55.9	18.8	20.0	8.5	14.3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 분야	10.4		7.6		13.5	20.0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6.8	2.9	8.3	6.7	6.9	1.9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보전 사업	5.3		7.6		4.2	1.9
모름	0.6		0.7		0.8	
기타	0.1	2.9				

○(지원 과제) 협동조합 전환절차 컨설팅(19.3%)이 가장 시급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17.1%),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11.6%)가 2~3위였음

⇒ 공동육아의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26.1%) 이외에 법률자문(17.4%)과 행정제반절차 및 과정 등의 매뉴얼(13.0%)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돌봄종사자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모름과 무응답이 많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전달이 필요함을 시사

〈표 2-12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327	23	133	8	118	45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	19.3	8.7	21.8		24.6	6.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	17.1	4.3	18.8	50.0	18.6	8.9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완화	11.6	26.1	12.8	12.5	9.3	6.7
무응답	11.3		3.0		9.3	48.9
아직은 잘 모르겠음	9.5	17.4	12.8	25.0	5.1	4.4
기타	8.0		5.3	12.5	13.6	4.4
행정제반 절차 및 과정 등의 메뉴얼	6.4	13.0	5.3		7.6	4.4
법률자문	6.1	17.4	6.0		5.1	4.4
조합원 모집과 ,조합 규칙을 정하는 과정등 교육	6.1	4.3	9.8		4.2	2.2
현재는 없음	3.1	4.3	1.5		2.5	8.9
금전적 지원, 전환 절차상의 도움 모두 필요함	2.4	4.3	3.0		1.7	2.2
정부로부터 지원사업	1.2	8.7	0.8		0.8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34.3%)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주인·공동체의식 등 구성원들의 의식(2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38.2%)을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25.2%)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일반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와 대안학교의 경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은 구성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른 조사대상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126〉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34.3	35.3	30.1	50.0	37.1	39.0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4.6	38.2	23.2	20.0	24.7	26.7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22.6	23.5	25.2	6.7	21.6	19.0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17.8		20.8	23.3	16.6	13.3
모름/없음	0.6	2.9	0.7			1.0

〈표 2-127〉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돌봄형)

(단위: 개, 명, %)

구분	총계	단체				개인
		공동육아	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돌봄종사자
합계	837	34	409	30	259	105
구성원의 의식	26.3	41.2	20.5	23.3	32.8	28.6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25.2	38.2	28.6	56.7	16.2	21.0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22.1	11.8	25.2	13.3	22.0	16.2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강화	14.5	8.8	15.4	3.3	13.1	19.0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9.3		9.0	3.3	10.0	13.3
모름/없음	2.5		1.2		5.8	1.0
기타	0.1					1.0

4. 사회지원형 현황조사 결과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사회지원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협동조합 인지도(들어본 적 없음(3.3%))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인지도(법 제정 인지율(80.9%)) 모두 높은 편이었음

○(협동조합) 1위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63.4%)이었으며, 2위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형태(57.7%)라고 인식하고 있어 다른 유형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음

○(협동조합기본법) 시민단체(92.8%)가 법제정에 대한 인지도에서 사회적기업(7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8〉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사회지원형)(중복응답)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회지원형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	63.4	66.9	56.6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	57.7	52.1	68.7
농협·수협·소비자생활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	28.0	30.1	24.1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	11.8	10.4	14.5
주인이 없는 단체	5.3	4.9	6.0
들어본 적 없다	3.3	4.3	1.2
공동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원 출자로 만들	3.3	3.1	3.6
지방 등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	2.4	3.7	
기타	2.4	0.6	6.0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	1.6	0.6	3.6

〈표 2-129〉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회지원형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예(알고 있음)	80.9	74.8	92.8
아니오(모름)	19.1	25.2	7.2

■(협동조합의 매력과 약점) 장점으로 조합원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 대비 경영능력을 단점으로 평가하였음

○(매력)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을 사회적기업(26.4%) 및 시민단체(28.9%) 모두 1위로 평가하였고, 사회적기업은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23.3%)를, 시민단체는 조합원의 경영(21.7%)을 2위로 평가하였음

○(약점)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 모두 리더십 부족(35.0%)과 출자능력 부족(28.8%)을 1~2위로 지적하였음

〈표 2-130〉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협동조합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27.2	26.4	28.9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9.1	23.3	10.8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7.5	15.3	21.7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12.6	14.1	9.6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11.0	7.4	18.1
고용창출 및 안정	6.5	6.7	6.0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5.3	6.1	3.6
기타	0.8	0.6	1.2

〈표 2-131〉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32.5	35.0	27.7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29.3	28.8	30.1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21.5	22.1	20.5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12.2	9.2	18.1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2.8	3.7	1.2
모름/없음	1.6	1.2	2.4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52.0%), 법인자격 부여(35.4%) 및 신고를 통한 조합 설립(27.2%) 등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가능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잉여금 적립(38.2%)과 출자좌수 한도설정(19.5%)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

○(장점) 사회적기업(50.9%)과 시민단체(54.2%) 모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가능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다음은 법인자격 부여였음

○(단점) 이외에 사회적기업은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설정(17.2%)에, 시민단체는 금융과 보험업 영위불가(20.5%)를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표 2-132〉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52.0	50.9	54.2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35.4	35.0	36.1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27.2	23.3	34.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외 부가금 면제	24.8	27.6	19.3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17.5	19.6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15.0	16.0	13.3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9.8	11.0	7.2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5.7	4.9	7.2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3	4.3	1.2
9모름/기타	1.2		2.4

〈표 2-133〉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8.2	41.7	31.3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19.5	19.0	20.5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	16.3	17.2	14.5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1.0	6.1	20.5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6.5	6.1	7.2
모름/없음	4.9	6.1	2.4
저희단체와 관련성이 없음	1.6	1.2	2.4
협동조합 회원간의 인식부족	1.2	1.8	
기타	0.8	0.6	1.2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 의향) 사회지원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0.4%,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응답에선 28.7%였음

○기존 사업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해 사회적기업(48.5%)보다 시민단체(54.2%)가 긍정적이었고, 신규사업의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에서도 사회적기업(21.4%)보다 시민단체(44.7%)가 상대적으로 의향이 높았음

〈표 2-134〉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기존 사업 전환 의사	無	49.6	51.5	45.8
	有	50.4	48.5	54.2
합계		122	84	38
신규사업 형태로 추진의사	無	71.3	78.6	55.3
	有	28.7	21.4	44.7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사업 의향) 정부의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2.2%였으며, 사회적기업과의 동일 지원(36.8%)과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27.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이외에 사회적기업는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9.1%)을, 시민단체에서는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9.5%)을 높게 평가함

〈표 2-135〉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87	66	21
지원 정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인건비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36.8	34.8	42.9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27.6	28.8	23.8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17.2	18.2	14.3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	6.9	9.1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5.7	4.5	9.5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3.4	3.0	4.8
	고용지원자금으로 협동조합 경영권설립 지원	1.1	1.5	
	기타	1.1		4.8
합계		72	54	18
정책지원시 설립의사	無	77.8	81.5	66.7
	有	22.2	18.5	33.3

■(미설립 이유) 기존 형태로도 충분한 사업이 되어서(32.4%)와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23.9%), 그리고 과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16.9%) 등이 주된 미설립 이유였음

〈표 2-136〉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71	56	15
기존 형태로도 충분히 사업이 되어서	32.4	37.5	13.3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	23.9	23.2	26.7
사업체 내 의견교환이 없어서	16.9	17.9	13.3
시행령 등 제도 미확정	5.6	5.4	6.7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없어서	4.2	3.6	6.7
전환 시, 법적 문제가 존재해서	4.2	5.4	
현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4.2	1.8	13.3
모름/없음	4.2	3.6	6.7
기타	2.8	1.8	6.7
현재 협동조합이므로	1.4		6.7

■(출자형태 및 출자금) 출자금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40.7%, 출자금 규모는 약 1억 7천 만 원이었으며, 신규사업 시, 출자금 규모는 9,727만 원으로 규모가 적었음

○(출자확대) 기존 출자금만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사회적기업(6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민단체에서도 51.0%에 달했음

○(신사업 자금) 사회적기업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시민단체 6,727만 원보다 높았음

〈표 2-137〉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사회지원형)
(단위: 개, %, 만원)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140	89	51
출자형태	기존출자금만으로 전환	59.3	64.0	51.0
	출자 확대	40.7	36.0	49.0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17,197	9,065	29,667

〈표 2-138〉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사회지원형)
(단위: 개, 만원)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35	18	17
출자금 평균(단위: 만 원)		9,727	12,727	6,727

* 출자금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

■(설립시기) 전체 조사대상 중 비설립률은 28.9%였으며,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사업의 협동조합 추진시기의 경우, 2014년까지 57.7%가 설립을 희망하고 있었음

○사회적기업은 향후 1~2년 이내 설립 비율이 많고, 시민단체는 2013년에 설립하겠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음

〈표 2-139〉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2013년 중	38.6	32.5	50.6
2014년 중	19.1	20.2	16.9
2015년 중	9.8	8.6	12.0
2016년 중	2.4	3.1	1.2
2018년 이후	1.2	1.2	1.2
비설립	28.9	34.4	18.1

■(설립유형) 사회지원형 사업체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향이 일반협동조합 대비 3배 정도 높았음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중 사회적기업은 현재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25.0%)에, 시민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26.7%)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2-140〉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사회적협동조합	54.1	54.0	54.2
일반협동조합	17.1	11.7	27.7
비설립	28.9	34.4	18.1

〈표 2-141〉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이유(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133	88	45
사회적협동조합이 현 사업에 적합	22.6	25.0	17.8
사회적 가치 실현	21.8	19.3	26.7
지역사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양성	12.8	9.1	20.0
참여조합원 중심의 경영추진	9.0	9.1	8.9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진	7.5	10.2	2.2
일자리 창출	6.0	5.7	6.7
정부지원	5.3	5.7	4.4
무응답	5.3	5.7	4.4
경영의 안정화	4.5	3.4	6.7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고자	3.8	5.7	
조합원의 복리증진	3.8	3.4	4.4
기타	3.0	3.4	2.2
공동체 운영	2.3	2.3	2.2

■(세부설립 유형)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21.7%), 농·임·수산업 등 생산자협동조합(19.4%), 물류유통 등 물류협동조합(13.7%)이 1~3위였음

○사회적기업은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22.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농업, 임업 등 생산자협동조합(22.1%)이 가장 많았음

〈표 2-142〉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175	107	68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	21.7	22.4	20.6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자협동조합	19.4	17.8	22.1
물류·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13.7	15.0	11.8
공연 등 문화협동조합	9.7	9.3	10.3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협동조합	8.0	13.1	
모름/없음	6.9	4.7	10.3
기타	5.7	6.5	4.4
여가, 여행관련 협동조합	5.1	4.7	5.9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생협	3.4	0.9	7.4
의료협동조합	2.3	1.9	2.9
보험 등 공제협동조합	1.1	0.9	1.5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협동조합	1.1	0.9	1.5
사회복지협동조합	1.1	0.9	1.5
에너지협동조합	0.6	0.9	

■(전환 효과) 협동조합 전환으로 가장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29.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객인지도 상승(26.4%)과 정부지원 혜택 증가(18.3%)의 순이었음

○정부지원 혜택 증가의 경우 시민단체(25.3%)가 사회적기업(14.7%)보다 높았음

〈표 2-143〉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모름/없음	92.7	93.3	91.6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29.3	28.8	30.1
고객인지도 상승	26.4	24.5	30.1
정부지원 혜택 증가	18.3	14.7	25.3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13.0	14.7	9.6
매출증가	11.4	11.0	12.0
세금감면	9.8	11.0	7.2
비용감소	5.7	3.7	9.6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체성강화	3.3	2.5	4.8
기타	0.8	1.2	

■(전환 예상단체) 사회적기업(53.3%), 시민운동 단체(38.6%), 농촌 등 지방주민(26.8%),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16.7%)의 순으로 전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표 2-144〉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사회적기업	53.3	53.4	53.0
시민운동 단체	38.6	38.0	39.8
농촌 등 지방주민	26.8	25.8	28.9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16.7	15.3	19.3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4.2	15.3	12.0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7.7	9.2	4.8
문화 예술인	7.3	8.6	4.8
각종 상조회	5.7	6.7	3.6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5.3	3.7	8.4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9	3.7	7.2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4.9	3.7	7.2
주택 재개발 주민	4.5	6.1	1.2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3.3	3.1	3.6
외국인 노동자	1.2	0.6	2.4
모름	0.4	0.6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적 측면) 기타 사업유형들과 달리 긍정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26.4%)가 1위였고, 다음으로 일자리 생성(25.2%)이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24.8%)가 1위였고, 2위는 질 낮은 일자리 생성(22.4%)이었음

○(긍정) 사회적기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30.7%)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일자리 창출(30.1%)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고용수혜자) 일자리 창출의 수혜자로 임시직 근로자(26.8%)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23.2%), 그리고 주부 등 여성비취업자(19.5%)를 꼽았음

○(부정) 1~2위 외에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간 담합행위(16.3%)을 3위로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간섭심화(21.5%)를 3순위로 평가함

〈표 2-14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지역경제 활성화	26.4	30.7	18.1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25.2	22.7	30.1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19.9	20.9	18.1
고용안정성 강화	17.1	16.6	18.1
대기업 횡포 완화	4.5	4.9	3.6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2.4	1.8	3.6
물가안정	2.0	0.6	4.8
모름/없음	2.0	1.8	2.4
기타	0.4		1.2

〈표 2-146〉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 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임시직 근로자	26.8	25.8	28.9
장애인 등 취약계층	23.2	28.2	13.3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19.5	19.6	19.3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15.9	14.7	18.1
자영업자	7.3	3.7	14.5
정규직 근로자	4.1	4.9	2.4
학생 등 청년	1.2	1.2	1.2
모름	1.2	1.2	1.2
협동조합과 관계된 개별 특수 이해관계자	0.8	0.6	1.2

〈표 2-147〉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24.8	21.5	31.3
질 낮은 일자리 생성	22.4	21.5	24.1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16.3	20.2	8.4
정부의 간섭 심화	13.8	13.5	14.5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1.4	11.7	10.8
경영상 혁신 및 창의성 저하	8.9	9.2	8.4
모름/없음	2.4	2.5	2.4

■(사회측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9.4%)를, 부정적으로는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36.6%)을 1위로 평가하였음

○(긍정) 이외에 지역사회 소통 강화(26.8%)와 복지사업 활성화(18.3%)가 2~3위로 지적됨

○(부정) 사회적 혼란(36.6%) 외에 부정적 영향으로는 복지 전달체계의 왜곡(27.2%)이 2위였고, 3위가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의 마찰(19.5%)이었음

〈표 2-14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시민 참여의식 증대	39.4	37.4	43.4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26.8	28.8	22.9
복지 사업의 활성화	18.3	19.0	16.9
사회 양극화 해소	11.0	9.8	13.3
청년 실업 해소	2.4	1.8	3.6
모름	1.6	2.5	
영향이 없을 것 같음	0.4	0.6	

〈표 2-14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36.6	38.0	33.7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27.2	26.4	28.9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19.5	16.6	25.3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12.2	14.1	8.4
모름/없음	4.5	4.9	3.6

■(복지측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에 비해 높다는 의견은 41.5%였으며, 그 주된 이유 중 1위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42.2%)이었음

○(경쟁력 평가)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은 시민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60.2%)

○(차별적 우위) 사회적기업에서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51.9%)을 차별적 우위로 가장 많이 판단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40.0%)가 많았음

〈표 2-150〉 복지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경쟁력이 낮음	8.1	8.6	7.2
동일한 수준/ 차이 없음	50.4	59.5	32.5
경쟁력이 높음	41.5	31.9	60.2

〈표 2-151〉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102	52	50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42.2	51.9	32.0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33.3	26.9	40.0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1.8	9.6	14.0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11.8	11.5	12.0
법인격	1.0		2.0
기타	1.0		2.0

○(사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분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38.2%)이 1위였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18.3%)과 보육·육아 등 영유아 사업 분야(14.6%)가 2~3위였음

〈표 2-152〉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38.2	43.6	27.7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18.3	15.3	24.1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14.6	13.5	16.9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10.2	10.4	9.6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분야	8.1	8.0	8.4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	5.3	6.1	3.6
기타	3.3	1.2	7.2
모름	2.0	1.8	2.4

■(지원 과제) 전환절차 컨설팅(27.1%)이 1위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18.8%),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 완화(15.8%)를 2~3위로 평가함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전환절차 컨설팅(30.7%)을,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22.2%)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함

〈표 2-153〉 사회적협동조합 추진시 필요한 도움(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133	88	45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	27.1	30.7	20.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	18.8	17.0	22.2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완화	15.8	17.0	13.3
무응답	10.5	8.0	15.6
법률자문	6.0	6.8	4.4
행정제반 절차 및 과정 등의 메뉴얼	6.0	4.5	8.9
현재는 없음	6.0	3.4	11.1
조합원을 모집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 등 교육	4.5	3.4	6.7
금전적 지원, 전환 절차상의 도움 모두 필요함.	4.5	3.4	6.7
정부로부터 지원사업	4.5	3.4	6.7
아직은 잘 모르겠음	4.5	5.7	2.2
기타	3.0	3.4	2.2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42.7%)과 공동체 정신(26.8%)을,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식(30.9%), 역량강화(23.2%), 정부지원(22.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위였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의 경우, 시민단체(51.8%)가 사회적기업(38.0%)보다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이 높았음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내 전문경영인들의 영입(13.5%)을, 시민단체들은 협동조합간 또는 관련단체들과의 관계강화(16.9%)를 4순위로 평가함

〈표 2-154〉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42.7	38.0	51.8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6.8	28.8	22.9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18.3	18.4	18.1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11.4	14.1	6.0
모름/없음	0.8	0.6	1.2

〈표 2-155〉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사회지원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합계	246	163	83
구성원의 의식	30.9	30.1	32.5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23.2	23.9	21.7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22.0	22.1	21.7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11.0	13.5	6.0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강화	10.6	7.4	16.9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명백한 지원체계	0.8	1.2	
기타	0.8	0.6	1.2
모름/없음	0.8	1.2	

5. 근로자형 현황조사 결과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인지도) 타 사업유형에 비해 협동조합 인지도는 낮은 편(들어본 적 없음(20.6%))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편이었음(법 제정 모름(80.6%))

○(협동조합) 인지내용 중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가 가장 높은 50.0%이며, 다음으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라는 이해가 29.1%로 2위였음

⇒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정부의 허가 조직(4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33.3%)이 2위였음

○(협동조합기본법) 법제정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기사들에서만 인지도가 높았고(60.0%), 가사관리사(2.9%), 보험설계사(6.8%), 택시기사(19.0%)는 매우 낮은 편임

〈표 2-156〉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근로자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농협,수협,소비자 생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이다	50.0	57.1	45.5	6.7	55.9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29.1	22.9	40.9	33.3	27.0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이다	21.6	11.4	18.2	20.0	24.2
들어본 적 없다	20.6	37.1	29.5		19.0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이다	18.1	11.4	2.3	43.3	19.0
지방 등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11.3	8.6	4.5	6.7	13.7
주인이 없는 단체이다	5.3	2.9	6.8		6.2

〈표 2-157〉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예(알고 있음)	19.4	2.9	6.8	60.0	19.0
아니오(모름)	80.6	97.1	93.2	40.0	81.0

■(협동조합의 장점과 약점) 조합원의 이중자격(35.0%)을 가장 긍정적 평가한 반면, 주식회사와 비교 시, 전문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33.8%)을 가장 취약 사항으로 평가함

○(장점) 가사관리사(42.9%), 보험설계사(40.9%), 택시기사(35.5%)의 경우, 조합원의 이중 자격을 1순위로 응답했지만 건설기계기사는 조합원간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30.0%)을 1순위로 응답함

○(약점)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대규모 출자능력부족(56.7%)을 1순위로 평가해 다른 조사 대상자들과 차별적이었음

⇒ 2순위에서 가사관리사(22.9%)와 택시기사(19.9%)는 대규모 출자능력 부족을 선정했지만 보험설계사(31.8%)와 건설기계기사(20.0%)는 낮은 의사결정을 취약점으로 평가

〈표 2-158〉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35.0	42.9	40.9	13.3	35.5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18.1	17.1	6.8	10.0	21.8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15.6	14.3	18.2	23.3	14.2
출자 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12.5	11.4	9.1	10.0	13.7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8.1	2.9	11.4	30.0	5.2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5.6	11.4	6.8	13.3	3.3
고용창출 및 안정	4.7		6.8		5.7
모름/없음	0.3				0.5

〈표 2-159〉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33.8	31.4	34.1		38.9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22.2	22.9	9.1	56.7	19.9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18.4	17.1	20.5	13.3	19.0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18.1	20.0	31.8	20.0	14.7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7.2	8.6	2.3	10.0	7.6
모름/없음	0.3		2.3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장점으로서는 1~4순위가 협동조합 설립관련 내용이었고, 단점으로는 이

익배당과 관련된 잉여금 적립(31.6%)과 출자좌수 한도설정(25.9%)이라고 응답함

○(장점) 가사관리사(48.6%)와 택시기사(50.7%)는 신고설립제를 1위로 평가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52.3%)을 건설기계기사는 연합회 설립가능(56.7%)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함

○(단점) 가사관리사(34.3%)와 택시기사(32.2%)는 잉여금 적립을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자신들의 업종 제한인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38.6%)를, 건설기계기사는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설정(36.7%)을 사업추진 시 가장 큰 우려로 평가함

〈표 2-160〉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40.9	48.6	13.6	3.3	50.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35.0	40.0	38.6		38.4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33.4	34.3	18.2	46.7	34.6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23.8	20.0	20.5	56.7	20.4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18.4	17.1	15.9	20.0	19.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외 부가금 면제	17.2	14.3	52.3	3.3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9.7	17.1	9.1	10.0	8.5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4.7	5.7	11.4		3.8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1.9		2.3	6.7	1.4
모름	0.3				0.5

〈표 2-161〉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10~30% 잉여금 적립	31.6	34.3	27.3	30.0	32.2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25.9	28.6	11.4	36.7	27.0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7.5	11.4	38.6		16.6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	12.5	11.4	13.6	33.3	9.5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11.9	14.3	6.8		14.2
모름/없음	0.6		2.3		0.5

2)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 의향) 협동조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39.4%가 있다고 응답함

○(장점) 택시기사가 63.3%로 가장 많았고, 가사관리사(41.3%), 건설기계기사(38.6%), 보험설계사(25.7%)의 순이었음

〈표 2-162〉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109	35	44	30
신규사업형태로 추진 의사	없다	60.6	58.7	74.3	61.4	36.7
	있다	39.4	41.3	25.7	38.6	63.3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신규사업 의향) 협동조합 설립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 92.8%가 설립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설립률) 정책전환 시, 협동조합 설립률은 보험설계사(11.1%), 택시기사(7.2%), 가사관리사(3.3%)이었으며,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부재함

○(희망정책) 매력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시민기금 조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24.2%)이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조달사업 우선(18.6%),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 인건비 지원(17.0%),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16.5%)의 순이었음

⇒ 건설기계기사의 81.8%가 매력적인 지원정책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부정적이었음

〈표 2-16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지원 정책(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사	택시기사
합계		194	26	27	11	130
법적으로 시민기금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부설시 긴급자금 지원		24.2	23.1	3.7		30.8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18.6	7.7	59.3	18.2	12.3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17.0	30.8	14.8		16.2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16.5	11.5	14.8		19.2
고용보험 법령상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10.8	19.2	3.7		11.5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7.2			81.8	3.8
정부 고용지원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경영권설립 지원		5.7	7.7	3.7		6.2
합계		180	26	27	2	125
정책지원시 설립의사	無	92.8	96.2	88.9	100.0	92.8
	有	7.2	3.8	11.1	-	7.2

■(미설립 이유) 응답자의 과반수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 부족(34.3%)과 사내의 의견교환 부재(29.8%)를 미설립 이유로 응답함

○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가 없어서 라는 의견도 전체의 13.8%로 3위였는데 특히 건설기계기사(1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164〉 협동조합 설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181	25	24	11	121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34.3	36.0	66.7	54.5	25.6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체내 의견교환이 없어서	29.8	36.0	20.8	9.1	32.2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성공한 예를 보지 못해서	13.8		8.3	18.2	17.4
정부의 매력적인 지원방안이 없어서	11.6	12.0			14.9
기존 사업형태로도 충분이 사업이 되어서	5.5	8.0	4.2	18.2	4.1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3.3	4.0			4.1
모름/없음	1.1				1.7
전환 시, 법적 문제가 존재해서	0.6	4.0			

■(출자금) 협동조합으로 신규사업을 추진 시 고려하는 출자금 규모는 1억 5,910만 원이었음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을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출자금은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은 10억 8,571만 원이었고, 다음은 건설기계기사 9,091만 원, 택시기사 6,456만 원, 가사관리사 4,333만 원의 순이었음

〈표 2-165〉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근로자형)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출자금 응답자)	78	3	7	11	57
출자금 규모	15,910	4,333	108,571	9,091	6,456

■(설립시기) 전체 조사 대상자중 설립을 고려하는 43.4%의 약 90%이상이 2014~2016년 사이에 설립할 것이라고 응답함

○2013년 설립은 2.8%였으며, 2018년 이후라는 응답은 불과 0.9%로 협동조합 전환 시기에서는 비교적 근 기간 내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겠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2-166〉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2013년 중	2.8	5.7	4.5		2.4
2014년 중	10.6	5.7	15.9	30.0	7.6
2015년 중	14.1	5.7	18.2	33.3	11.8
2016년 중	13.8	8.6			19.4
2017년 중	1.3	2.9			1.4
2018년 이후	0.9		6.8		
비설립	56.6	71.4	54.5	36.7	57.3

■(설립유형) 근로자형 중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의사를 보인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일반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었음

○(세부설립유형) 전반적으로 근로자협동조합(31.7%)과 구매협동조합(28.1%)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건설기계기사들은 물류, 유통 등 물류협동조합(84.2%)을,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등 공제협동조합(65.0%)을 계획하고 있었음

〈표 2-167〉 협동조합 전환/신규 추진 시, 고려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사회적협동조합	3.8	2.9	13.6		2.4
일반협동조합	39.7	25.7	31.8	63.3	40.3
비설립	56.6	71.4	54.5	36.7	57.3

〈표 2-168〉 고려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139	10	20	19	90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협동조합	31.7	90.0		15.8	35.6
채매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협동조합	28.1		10.0		41.1
물류, 유통 등 물류협동조합	14.4		10.0	84.2	2.2
보험 등 공제 협동조합	12.9		65.0		5.6
에너지 등 에너지협동조합	5.8				8.9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협동조합	2.2		5.0		2.2
모름/없음	2.2	10.0	5.0		1.1
공연 등 문화협동조합	1.4		5.0		1.1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생협	1.4				2.2

■(설립효과) 세금감면(14.4%), 비용감소(14.1%), 정부지원 증가(11.9%), 매출증가(10.0%)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음

○택시기사는 세금감면(17.1%)을, 가사관리사는 비용감소(14.3%)를, 보험설계사는 정부지원 혜택(18.2%)을, 건설기계기사는 재무구조 안정성(33.3%)을 주 설립효과로 기대

〈표 2-16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근로자형)_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모름/없음	100.0	100.0	100.0	100.0	100.0
세금감면	14.4	8.6	6.8	13.3	17.1
비용감소	14.1	14.3	11.4		16.6
정부지원 혜택 증가	11.9	2.9	18.2	10.0	12.3
매출증가	10.0	8.6	9.1	13.3	10.0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8.4		9.1	33.3	6.2
고객인지도 상승	7.5	5.7	9.1		8.5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4.7	2.9	4.5	6.7	4.7

■(전환 예상단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자(28.8%)와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28.8%),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22.2%)라고 응답

○(대상별) 가사관리사는 청소부 등 임금 취약자(57.1%)가, 보험설계사는 시민운동단체 (40.9%)가, 건설기계기사는 학습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36.7%)와 각종 상조회(36.7%)가, 택시기사는 배송업체 종사자(37.0%)의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표 2-170〉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28.8	20.0	27.3	10.0	33.2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28.8	34.3	4.5		37.0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22.2	57.1	4.5	10.0	21.8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8.4	25.7	13.6	36.7	15.6
시민운동 단체	16.3	5.7	40.9	10.0	13.7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6.3	14.3	11.4		19.9
사회적기업	11.9	11.4	20.5	23.3	8.5
농촌 등 지방주민	10.6	2.9	25.0	6.7	9.5
각종 상조회	9.1		20.5	36.7	4.3
주택 재개발 주민	8.4	5.7	4.5		10.9
문화 예술인	7.8	5.7	9.1		9.0
외국인 노동자	5.9	2.9			8.5
주부 등 아파트 부녀회	2.5	5.7	4.5		1.9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1.3		2.3		1.4
모름	0.3				0.5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측면) 긍정적 측면으로 고용안정성 강화(2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협동조합간 담합행위(31.9%)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음

○(긍정적 효과) 이외 지역경제 활성화(17.2%), 비영리기관들의 자립(16.3%),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12.8%) 효과를 기대

⇒ (고용수혜자) 임시직 근로자(42.8%)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은퇴자라는 응답이 각각 21.3%와 14.4%로 뒤를 이었음

○(부정적 효과) 이외에 질 낮은 일자리 생성(20.6%), 정부의 간섭심화(14.1%)의 순이었고, 보험설계사(27.3%)와 건설기계기사(26.7%)의 경우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17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것 같은 항목(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고용안정성 강화	26.9	34.3	22.7		30.3
지역경제 활성화	17.2	8.6	18.2	20.0	18.0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16.3	22.9	13.6	36.7	12.8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12.8	14.3	18.2	23.3	10.0
대기업 횡포 완화	9.7	2.9	18.2	20.0	7.6
물가안정	9.4	8.6	4.5		11.8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7.8	8.6	4.5		9.5

〈표 2-172〉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다양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계층(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임시직 근로자	42.8	42.9	40.9	30.0	45.0
자영업자	21.3	8.6	22.7	60.0	17.5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14.4	14.3	11.4		17.1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9.4	20.0	11.4	3.3	8.1
장애인 등 취약계층	5.6	11.4	6.8	6.7	4.3
정규직 근로자	4.1		4.5		5.2
학생 등 청년	2.5	2.9	2.3		2.8

〈표 2-17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31.9	34.3	25.0	30.0	33.2
질 낮은 일자리 생성	20.6	22.9	6.8	23.3	22.7
정부의 간섭 심화	14.1	11.4	11.4	16.7	14.7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12.5	5.7	27.3	26.7	8.5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11.9	11.4	20.5	3.3	11.4
경영상 혁신 및 창의성 저하	8.8	14.3	6.8		9.5
모름/없음	0.3		2.3		

■(사회측면) 긍정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32.2%), 시민 참여의식 증대(29.4%), 복지사업의 활성화(23.8%)를 통해 우리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협동조합 난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32.2%)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가장 컸음

○(부정적 측면)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60.0%)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174〉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사회 양극화 해소	32.2	37.1	11.4	76.7	29.4
시민 참여의식 증대	29.4	37.1	38.6		30.3
복지 사업의 활성화	23.8	20.0	31.8		26.1
청년 실업 해소	8.1	5.7	6.8	6.7	9.0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6.6		11.4	16.7	5.2

〈표 2-17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50.3	68.6	40.9	20.0	53.6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27.2	11.4	22.7	60.0	26.1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11.6	8.6	18.2	3.3	11.8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10.9	11.4	18.2	16.7	8.5

■(복지측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부정

적이거나 중립적 견해가 더 많았음

○(경쟁력 평가)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10.3%에 불과하며,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은 39.4%, 동일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50.3%였음

○(차별적 우위) 구성원 참여(45.5%),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27.3%)으로 나타남

〈표 2-176〉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경쟁력이 낮음	39.4	48.6	18.2	63.3	38.9
동일한 수준/ 차이 없음	50.3	48.6	40.9	36.7	54.5
경쟁력이 높음	10.3	2.9	40.9		6.6

〈표 2-177〉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3	1	18	0	14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45.5		38.9		57.1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27.3	100.0	33.3		14.3
기타	15.2		22.2		7.1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9.1		5.6		14.3
모름	9.1		11.1		7.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6.1		5.6		7.1

○(사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향후 발전사업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42.2%)이 1위로 평가됨

⇒ 이외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25.9%), 장기요양사업 분야(10.6%), 영유아 사업(10.6%)의 순이었음

〈표 2-17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분야(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42.2	45.7	36.4	66.7	39.3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25.9	20.0	18.2	6.7	31.3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 분야	10.6	2.9	11.4		13.3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보전 사업	10.6	14.3	6.8	26.7	8.5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9.4	17.1	25.0		6.2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1.3		2.3		1.4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33.8%)가, 일반협동조합들의 경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31.3%)가 필요하다고 응답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29.1%)가 2위였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이 참여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시사

○(일반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25.6%)과 협동조합 내 전문경영인들의 영입(25.3%)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순이었으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표 2-179〉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시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33.8	34.3	18.2		41.7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29.1	31.4	18.2	13.3	33.2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24.7	20.0	34.1	36.7	21.8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12.5	14.3	29.5	5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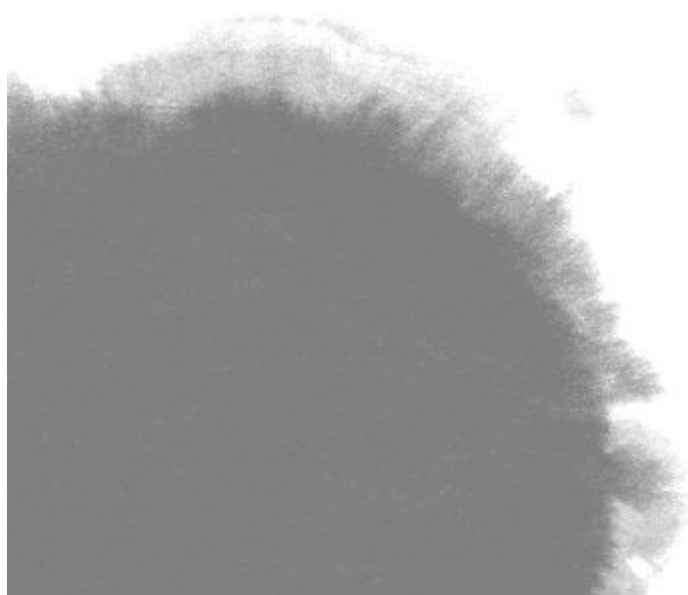
〈표 2-180〉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근로자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개인			
		가시관리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택시기사
합계	320	35	44	30	211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31.3	37.1	9.1	23.3	36.0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25.6	20.0	34.1	43.3	22.3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25.3	37.1	9.1	3.3	29.9
구성원의 의식	9.1		31.8	26.7	3.3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강화	8.8	5.7	15.9	3.3	8.5

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제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제1 절 협동조합 설립 수요예측에 관한 방법론

■(방법론 개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협동조합 설립수와 그로 인한 고용창출량 측정을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요예측 방법론을 개발함

○(1단계) 수요예측 추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산적 선택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중요 속성 수준과 내용을 도출함

○(2단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협동조합 생성가능 단체 및 개인들의 협동조합 전환의향과 신규사업의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설립수를 추정

○(3단계) 협동조합 생성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에 관한 수요추정을 위해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출자액을 합산한 후 업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추정

⇒ 매출액을 출자액으로 가정한 이유는 생성된 협동조합들의 운영능력으로 인한 고용창출량보다는 순수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측정하기 위함임

⇒ 일반사업체의 업종별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의 적용은 협동조합에 의한 지표가 부재하고, 협동조합의 고용창출량이 일반기업보다는 높다는 가정 하에 시도한 것임

■(중요 요인 도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단체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개념을 인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공하는 효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고 주요 속성들을 도출

○(이산적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특정 선택을 하는 의사결정자는 다양한 선택

대안들 중 대안이 가진 속성들의 가치가 높게 반영된 대안을 선택한다는 모형으로 McFadden(1974)¹⁾의 교통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이후 수요예측에 널리 사용됨

○(속성도출) 협동조합 설립추진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속성을 3가지 수준에서 도출함

- ⇒ 1차적으로 기업형태 수준에서 협동조합의 특성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 7개와 5개를 도출한 후, 다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와의 차이를 통해 응답자에게 인식시킴
- ⇒ 2차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각각 8개와 5개를 도출해 제시함으로서 설립으로 인한 속성가치 평가를 유도
- ⇒ 3차적으로 2차 수준에서 제시된 속성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 한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가상의 대안을 제시해 효익수준을 증가시킴

1) McFadden, Daniel L.(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Zarembka, P.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Academic Press, New York, pp. 105-142.

* 협동조합 설립과 이산적 선택모델 *

- (가정)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n)가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기존 단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선택(k)을 할 경우, 의사결정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U_{nk} 임 ($n = 1, \dots, N, k = 1, \dots, J$)
- (선택) 의사결정자(n)가 협동조합으로 인한 기업형태의 효용(U_{nk})이 협동조합 이외의 기업형태로 인한 효용(U_{nj})보다 클 경우($U_{nk} > U_{nj}$)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임
- (속성가치) 협동조합은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속성의 가치는 의사결정자(n)의 개인적인 특성(s_n)과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형태(x_{nk})로 이루어짐
· 의사결정자(n)가 협동조합에 대해 인식하는 효용을 V_{nk} 라고 한다면 $V_{nk} = V(x_{nk}, s_n)$ 임
- (선택기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자(n)는 각 협동조합이 가진 속성평가 외에 파악하지 못하는 효용부분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할 것임($U_{nk} = V_{nk} + \varepsilon_{nk}$)
- (선택확률) 협동조합 형태로서의 효용과 협동조합이 아닌 효용간의 비교를 통한 확률로서 조건부(conditioning)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의사결정자가 협동조합을 선택 시, 가치($V_{nj} = \beta'x_{nj} + \gamma's_n$)를 식(4)에 적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계수 추정이 가능

$$\begin{aligned} P_{nk} &= \Pr(U_{nk} > U_{nj}) \\ &= \Pr(V_{nk} + \varepsilon_{nk} > V_{nj} + \varepsilon_{nj} \forall j \neq k) \\ &= \Pr(\varepsilon_{nj} < \varepsilon_{nk} + V_{nk} - V_{nj} \forall j \neq k) \end{aligned} \quad (1)$$

$$P_{nk} | \varepsilon_{nk} = \prod_{j \neq i} e^{-e^{-(\varepsilon_{nk} + V_{nk} - V_{nj})}}. \quad (2)$$

$$P_{nk} = \int \left(\prod_{j \neq i} e^{-e^{-(\varepsilon_{nk} + V_{nk} - V_{nj})}} \right) e^{-\varepsilon_{nk}} e^{-e^{-\varepsilon_{nk}}} d\varepsilon_{nk}. \quad (3)$$

$$P_{nk} = \frac{e^{V_{nk}}}{\sum_j e^{V_{nj}}}. \quad (4)$$

〈표 3-1〉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상의 중요 속성

속성 구분			주요 내용
1차 수준	협동조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 고용창출 및 안정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 대규모 자본출자 능력부족 -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 1인 1표제로 인한 늦은 의사결정 -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2차 수준	협동조합기본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 적용 -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3배시 까지 10~30% 잉여금 적립 -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설정 -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 -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3차 수준	협동조합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지원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 시민기금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부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 - 기부금 지정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 정부고용지원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컨설팅 지원

제2절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가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향후 6년간 생성될 협동조합들의 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 변수를 고려하였음

○(실질 설립률 추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하더라도 주변 환경 여건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설립은 적을 것이라고 가정

⇒ 비록 설문응답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모집, 자본금 출자,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지 등에 의해 설립을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설립 주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외에 일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립 주체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

○(설립 방법) 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기존 사업체를 유지한 채,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경우를 고려

⇒ 개인들의 경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규 출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체를 전환한다는 가정보다는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추진한다고 설정

○(설립시기) 협동조합 설립 의향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준비수준에 따라 설립시기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 기준 2013년을 기준으로 6년간 추정

○(설립규모) 협동조합의 생존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설립의향자를 기준으로 실질 설립자의 규모를 최대, 국내기업의 생존율을 적용한 규모를 최소로 설정

○(희망정책 지원유무) 현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만으로는 설립을 고려하지 않지만 향후 정부정책변화에 따라 설립의향이 변한다는 가정 아래 희망정책 지원 시, 설립의향자 추정

1. 정책 미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단계: 실질 설립률 추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자 37.8%에 대해 설립가능성을 적용한 결과, 실질 설립률은 26.2%였음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의향과 더불어 그 가능성을 100%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하였음

○이는 설립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설립가능성이 낮다면 설립이 불가능한 허수이며, 수요에 초과정에 Bias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추정된 각 세부 조사대상의 협동조합 실질 설립률을 세부적으로 단체와 개인, 그리고 각 설립시기별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정책 미지원시 단체의 실질전환율은 28.0%이었고 개인은 26.6%였으며, 단체의

경우 공동육아(57.7%), 시민단체(54.4%), 기존 생협(53.6%) 등이 높았음

⇒ 개인에서는 돌봄종사자(36.9%), 특수직 근로자(26.2%), 택시기사(25.3%)가 높았음

⇒ 시기별로는 2014년 설립률이 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15년(7.0%), 2013년(5.9%), 2016년(4.7%), 2018년(0.9%), 2017년(0.3%)였음

■(2단계: 최대 설립수 추정) 추정 설립률에 모집단을 적용하여 향후 6년간 생성될 협동조합 수를 추정한 결과, 단체는 4,367개, 개인은 6,371개로 총 10,737개가 추정됨

○(단체) 시민단체가 총 1,007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돌봄기관 887개, 지역아동센터 778개, 재래시장 388개, 마을기업 330개, 공연예술단체 273개의 순으로 생성이 예상됨

○(개인) 돌봄종사자가 1,79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직근로자 1,457개, 아파트부녀회 1,152개, 소상공인 994개의 순으로 설립될 것으로 추정됨

⇒ 단체의 경우 전환률 응답자가 기관장급으로 전환 또는 신규사업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개인은 개별 민간인임으로 전환률에 의한 신규 설립은 과대추정의 우려가 존재함

⇒ 개인의 경우,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후 유사기업의 종업원 규모나 협동조합 형성 최소 인원인 5명으로 신규 조합원수를 나누어 협동조합 수를 산정

⇒ 특수직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의 평균 종사자수(73.8명)을, 택시기사는 법인택시 영업장 평균 종사자 규모(83.2명)를, 배송업체는 택배업체 허가기준(100명)을, 그리고 돌봄종사자는 정부 바우처 사업 기관의 평균 종사자 수(46.5명)를 대입

○(설립유형) 기존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총 3,554개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될 협동조합 수는 7,183개로 추정됨

○(시기별) 2013년에 3,386개로 가장 많은 후 2014년 3,351개, 2015년 2,563개, 2016년 955개, 2017년 165개, 2018년, 316개로 추정됨

■(3단계: 최소 설립수 추정) 최대 설립 수에 1년 간 기업생존율을 적용하여 최소 설립 수를 추정한 결과, 단체 설립 수는 3,534개, 개인은 4,754개로 총 최소 설립수는 8,289개로 예상됨

○(생존율 적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생성 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선 설립 이후 1년간 지속성에 대한 측정이 요구되어 설립 이후 1년간 기업생존율을 최대 설립 수에 적용

⇒ 본고에서는 기업 생존율을 각각의 협동조합 유형에 속한 조사대상군들의 산업군 생존율을 조사해 협동조합 유형별 평균 생존율을 산출하여 최소 설립수 추정에 적용함

○(단체) 시민단체와 돌봄기관이 각각 786개, 78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685개, 재래시장 275개, 마을기업 265개의 순으로 생성될 것으로 추정됨

○(개인) 돌봄종사자가 1,4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직근로자 1,137개, 아파트부녀회 816개, 소상공인 704개의 순이었음

⇒ 최소 설립수 산정에서도 개인은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최대 설립수 추정에 사용되었던 기업규모를 적용하여 조합 수를 산정

⇒ (설립유형) 기존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총 2,867개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될 협동조합 수는 5,422개로 추정됨

○(시기별) 2013년에 2,704개, 2014년 2,565개, 2015년 1,943개 2016년 704개, 2017년 123개, 2018년 250개로 추정됨

〈표 3-2〉 사업체의 설립 1년 후 평균 생존율

(단위: %)

유형	조사대상	산업군	기업1년 생존율(%)
생산·물류	마을기업	농림어업	80.17
	재래시장, 소비자 의료 생협	도소매업	70.84
생활·문화	환경(주거사업+대안기업)	사업시설관리	65.23
	공연예술단체	예술 스포츠	71.75
돌봄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돌봄기관, 대안학교	보건업·사회복지	87.96
사회지원	시민단체	협회 및 단체	78.04
	사회적기업	보건업·사회복지	87.96
근로자	택시기사, 배송업체	운수업	71.5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인서비스업	78.04

〈표 3-3〉 설립시기별 협동조합 생성수 수요예측

(단위: 개)

구분			전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대	정책 미지원시	전환	3,554	1,896	940	438	115	60	105
		신규	7,183	1,490	2,411	2,125	841	105	211
		소계	10,737	3,386	3,351	2,563	955	165	316
	정책지원시 소계		1,177	108	298	505	165	16	85
	전체		11,914	3,494	3,649	3,068	1,120	181	401
최소	정책 미지원시	전환	2,867	1,548	752	345	93	46	83
		신규	5,422	1,156	1,813	1,598	611	77	167
		소계	8,289	2,704	2,565	1,943	704	123	250
	정책지원시 소계		912	87	232	391	120	12	70
	전체		9,201	2,791	2,797	2,334	824	135	320

〈표 3-4〉 정책 미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 - 실질 설립률

구분		총계	설립 예상년도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전체 설립 가능성		26.6	5.9	0.2	5.7	7.9	0.1	7.8	7.0	0.0	7.0	4.7	0.0	4.7
단체	소계	28.0	13.9	12.2	1.7	7.7	6.0	1.7	4.2	2.8	1.4	0.8	0.7	0.1
	마을기업	41.1	23.3	21.0	2.3	13.7	12.9	0.8	2.8	1.5	1.3	0.9	0.8	0.1
	재래시장	19.0	1.3	1.3	0	10.1	9.9	0.3	4.4	4.4	0	0.8	0.8	0
	기존생협	53.6	26.5	22.2	4.4	14.5	9.7	4.9	12.0	11.0	1.0	0.6	0.2	0.4
	환경(대안+주거)	43.6	20.7	18.0	2.7	14.8	10.9	3.9	3.9	3.9	0	2.7	2.1	0.5
	공연예술단체	11.3	4.5	3.7	0.8	1.8	1.8	0	3.2	2.4	0.8	0.5	0.5	0
	공동육아	57.4	42.4	42.4	0	15.0	15.0	0	0.0	0.0	0	0	0	0
	지역아동센터	19.4	8.5	7.8	0.7	5.1	3.5	1.6	2.6	1.5	1.1	1.2	1.0	0.3
	대안학교	26.0	8.7	5.3	3.3	13.0	9.7	3.3	1.7	1.7	0	0	0	0
	돌봄기관(자활+돌봄)	31.0	14.2	12.9	1.3	9.2	6.8	2.4	6.2	3.7	2.4	0.8	0.8	0
	사회적기업	40.0	24.4	22.1	2.3	10.4	8.2	2.1	3.4	1.6	1.8	1.3	1.1	0.2
	시민단체	54.4	38.6	32.3	6.3	9.3	5.6	3.7	5.4	2.2	3.3	0.2	0.2	0
개인	소계	26.6	5.7	0	5.7	7.9	0	7.9	7.0	0	7.0	4.7	0	4.7
	특수직 근로자	26.2	2.8	0	2.8	10.9	0	10.9	8.6	0	8.6	2.1	0	2.1
	택시기사	25.3	1.8	0	1.8	5.4	0	5.4	5.4	0	5.4	12.0	0	12.0
	배송업체	18.6	2.3	0	2.3	2.3	0	2.3	2.0	0	2.0	12.0	0	12.0
	소상공인	8.0		0	0	3.3	0	3.3	3.4	0	3.4	0.8	0	0.8
	아파트부녀회	5.1	0.4	0	0.4	2.3	0	2.3	1.7	0	1.7	0.6	0	0.6
	돌봄종사자	36.9	18.7	0	18.7	8.4	0	8.4	8.5	0	8.5	0.3	0	0.3

〈표 3-5〉 정책 미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 - 최대 설립 수

		총계	2013년중			2014년중			2015년중			2016년중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전체설립가능성		10,737	3,386	1,896	1,490	3,351	940	2,411	2,563	438	2,125	955	115	841
단체	소계	4,367	2,161	1,896	265	1,204	940	264	655	438	217	131	115	16
	마을기업	330	187	169	18	110	104	6	22	12	10	7	6	1
	채래시장	388	26	26		206	201	5	90	90		16	16	
	기존생협	206	102	85	17	56	37	19	46	42	4	2	1	2
	환경(대안+주거)	153	73	63	9	52	38	14	14	14		9	8	2
	공연예술단체	273	109	89	20	44	44		78	59	19	12	12	
	공동육아	44	32	32		11	11							
	지역아동센터	778	340	312	28	203	140	63	103	61	42	49	38	11
	대안학교	38	13	8	5	19	14	5	2	2				
	돌봄기관(자활+돌봄)	887	406	369	36	264	194	70	177	107	70	22	22	
	사회적기업	262	160	145	15	68	54	14	22	10	12	8	7	1
	시민단체	1,007	714	598	116	172	103	69	100	40	60	4	4	
개인	소계	6,371	1,225		1,225	2,147		2,147	1,908		1,908	824		824
	특수직근로자	1,457	156		156	604		604	479		479	117		117
	택시기사	934	66		66	199		199	199		199	444		444
	배송업체	40	5		5	5		5	4		4	26		26
	소상공인	994				412		412	424		424	97		97
	아파트부녀회	1,152	90		90	516		516	389		389	127		127
	돌봄종사자	1,794	907		907	410		410	412		412	14		14

주: 개인의 경우, 관련 기업 평균 종사자수 적용

〈표 3-6〉 정책미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 - 최소 설립 수

구분		총계	2013년중			2014년중			2015년중			2016년중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소계	전환	신규
전체설립가능성		8,289	2,704	1,548	1,157	2,565	752	1,813	1,943	345	1,598	704	93	611
단체	소계	3,534	1,760	1,548	212	970	752	218	525	345	180	107	93	14
	마을기업	265	150	135	15	88	83	5	18	10	8	6	5	1
	재래시장	275	18	18		146	142	4	64	64		12	12	
	기존생협	146	72	60	12	40	26	13	33	30	3	2	1	1
	환경(대안+주거)	100	48	41	6	34	25	9	9	9		6	5	1
	공연예술단체	196	78	64	14	31	31		56	43	14	9	9	
	공동육아	38	28	28		10	10							
	지역아동센터	685	300	275	25	178	123	55	90	53	37	43	34	9
	대안학교	33	11	7	4	17	12	4	2	2				
	돌봄기관(자활+돌봄)	780	357	325	32	232	171	61	155	94	61	19	19	
	사회적기업	231	141	127	13	60	47	12	19	9	10	7	6	
	시민단체	786	557	467	90	134	80	54	78	31	47	3	3	
개인	소계	4,754	945		945	1,595		1,595	1,418		1,418	597		597
	특수직근로자	1,137	122		122	472		472	374		374	91		91
	택시기사	668	48		48	143		143	143		143	318		318
	배송업체	28	3		3	3		3	3		3	18		18
	소상공인	704				292		292	300		300	69		69
	아파트부녀회	816	64		64	366		366	276		276	90		90
	돌봄종사자	1,400	708		708	320		320	321		321	11		11

2.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단계: 실질 설립률 추출) 희망정책 지원 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실질 설립률은 정책미 지원시 설립률 26.2%보다 1.8%p 높은 28.4%였음

○(설립주체) 단체의 전환율은 32.4%로 정책 미지원시 전환율 28.0%보다 4.4%p 상승한 반면, 개인의 설립률은 28.3%로 정책 미지원시(26.6%)보다 1.7%p 상승하는 데 그침

○(설립유형) 단체에서는 공동육아(67.9%), 시민단체(58.4%), 기존생협(56.4%) 등이 높았으며 개인에서는 돌봄종사자(38.1%), 특수직 근로자(28.2%), 택시기사(27.5%)에서 설립률이 높았음

○(시기별) 2014년 설립률이 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15년(8.0%), 2013년(6.0%), 2016년(4.9%), 2018년(0.9%), 2017년(0.4%) 순이었음

■(2단계: 최대 설립 수 추정) 정책 미지원시와 같이 설립률을 모집단에 적용한 결과, 향후 6년간 생성될 협동조합 수는 단체가 5,051개, 개인은 6,862개로 총 11,914개였음

○(단체) 시민단체가 총 1,080개, 다음으로 돌봄기관 1,002개, 지역아동센터 956개, 재래시장 437개, 공연예술단체 431개, 마을기업 379개의 순이었음

○(개인) 돌봄종사자가 1,854개, 다음으로 특수직근로자 1,569개, 아파트부녀회 1,392개, 택시기사가 1,014개의 순이었음

○(시기별) 2013년에 3,64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3년 3,494개, 2015년 3,068개, 2016년 1,120개, 2018년 401개, 2017년 181개였음

■(3단계: 최소 설립 수 추정) 기업생존율을 적용한 결과 단체 설립 수는 4,085개, 개인은 5,115개로 총 9,201개로 추정됨

○(단체) 돌봄기관이 881개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843개, 841개로 2위군을, 재래시장 310개, 공연예술단체 309개, 마을기업 304개로 3위 군이었음

○(개인) 돌봄종사자가 1,4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직근로자가 1,224개, 아파트부녀회가 986개, 택시기사가 726개였음

○(시기별) 2013년과 2014년 각각 2,791개, 2,797개로 비슷했으며 2015년 2,334개, 2016년 824개, 2017년 135개, 2018년 320개로 추정됨

〈표 3-7〉 희망정책 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수 추정 - 실질 설립률

구분		총계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전체 설립 가능성		28.4	6.0	0.2	5.7	0.2	8.2	0.1	7.8	0.3	8.0	0.0	7.0	1.0	4.9	0.0	4.7	0.2
단 체 형	소계	32.4	14. 3	12. 2	1.7	0.5	9.0	6.0	1.7	1.3	6.0	2.8	1.4	1.8	1.1	0.7	0.1	0.2
	마을기업	47.2	25. 1	21. 0	2.3	1.8	17. 1	12. 9	0.8	3.4	3.0	1.5	1.3	0.2	0.9	0.8	0.1	0
	채래시장	21.4	1.3	1.3	0	0	11. 0	9.9	0.3	0.9	5.4	4.4	0	1.0	1.2	0.8	0	0.4
	기존생협	56.4	26. 5	22. 2	4.4	0	16. 6	9.7	4.9	2.1	12. 7	11. 0	1.0	0.7	0.6	0.2	0.4	0
	환경(대안·주거)	48.8	20. 7	18. 0	2.7	0	16. 3	10. 9	3.9	1.4	5.4	3.9	0	1.4	3.6	2.1	0.5	0.9
	공연예술단체	17.8	5.1	3.7	0.8	0.6	3.6	1.8	0	1.8	6.5	2.4	0.8	3.2	0.7	0.5	0	0.2
	공동육아	67.9	44. 1	42. 4	0	1.8	21. 5	15. 0	0	6.5	2.4	0	0	2.4	0	0	0	0
	지역아동센터	23.9	8.6	7.8	0.7	0.1	6.0	3.5	1.6	0.9	4.6	1.5	1.1	2.1	1.6	1.0	0.3	0.4
	대안학교	27.7	8.7	5.3	3.3	0	14. 7	9.7	3.3	1.7	1.7	1.7	0	0	0	0	0	0
	돌봄기관	35.0	14. 8	12. 9	1.3	0.7	10. 3	6.8	2.4	1.1	7.6	3.7	2.4	1.4	0.9	0.8	0	0.2
	사회적기업	43.4	24. 7	22. 1	2.3	0.3	11. 9	8.2	2.1	1.5	4.2	1.6	1.8	0.8	1.5	1.1	0.2	0.2
	시민단체	58.4	39. 6	32. 3	6.3	1.0	10. 1	5.6	3.7	0.9	7.6	2.2	3.3	2.2	0.2	0.2	0	0
개 인 형	소계	28.3	5.9	0	5.7	0.2	8.2	0	7.9	0.3	8.0	0	7.0	1.0	5.0	0	4.7	0.2
	특수직 근로자	28.2	2.8	0	2.8	0	11. 5	0	10. 9	0.7	10. 0	0	8.6	1.3	2.1	0	2.1	0
	택시기사	27.5	1.8	0	1.8	0	5.4	0	5.4	0	6.6	0	5.4	1.2	12. 8	0	12. 0	0.8
	배송업체	18.6	2.3	0	2.3	0	2.3	0	2.3	0	2.0	0	2.0	0	12. 0	0	12. 0	0
	소상공인	8.0	0	0	0	0	3.3	0	3.3	0	3.4	0	3.4	0	0.8	0	0.8	0
	아파트부녀회	6.2	0.4	0	0.4	0	2.6	0	2.3	0.3	2.1	0	1.7	0.4	1.0	0	0.6	0.4
	돌봄종사자	38.1	19. 4	0	18. 7	0.8	8.4	0	8.4	0	9.0	0	8.5	0.5	0.3	0	0.3	0

〈표 3-8〉 희망정책 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 - 최대 설립 수

구분		총계	2013년중				2014년중				2015년중				2016년중				2017년중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전체설립가능성		11,914	3,494	1,896	1,490	108	3,649	940	2,411	298	3,068	438	2,125	505	1,120	115	841	164	
단체형	소계	5,051	2,233	1,896	265	71	1,405	940	264	201	935	438	217	280	170	115	16	39	
	마을기업	379	201	169	18	15	137	104	6	27	24	12	10	2	7	6	1		
	재래시장	437	26	26			224	201	5	17	110	90		20	25	16		8	
	기존생협	217	102	85	17		64	37	19	8	49	42	4	3	2	1	2		
	환경(대안주거)	172	73	63	9		57	38	14	5	19	14		5	13	8	2	3	
	공연예술단체	431	123	89	20	14	87	44		44	157	59	19	78	17	12		5	
	공동육아	52	34	32		1	16	11		5	2			2					
	지역아동센터	956	343	312	28	3	238	140	63	36	186	61	42	83	64	38	11	15	
	대안학교	40	13	8	5		21	14	5	2	2	2							
	돌봄기관	1,002	424	369	36	19	294	194	70	31	218	107	70	41	27	22		6	
	사회적기업	285	162	145	15	2	78	54	14	10	27	10	12	5	10	7	1	2	
	시민단체	1,080	732	598	116	18	188	103	69	16	140	40	60	40	4	4			
개인형	소계	6,862	1,262		1,225	37	2,244		2,147	97	2,133		1,908	225	950		824	125	
	특수직근로자	1,569	156		156		641		604	37	554		479	74	117		117		
	택시기사	1,014	66		66		199		199		245		199	45	472		444	28	
	배송업체	40	5		5		5		5		4		4		26		26		
	소상공인	994					412		412		424		424		97		97		
	아파트부녀회	1,392	90		90		576		516	60	471		389	82	225		127	97	
	돌봄종사자	1,854	944		907	37	410		410		435		412	23	14		14		

〈표 3-9〉 희망정책 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 - 최소 설립 수

구분		총계	2013년중				2014년중				2015년중				2016년중				소계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소계	전환	신규	정책 지원 시	
전체설립가능성		9,201	2,791	1,548	1,157	87	2,797	752	1,813	232	2,334	345	1,598	391	824	93	611	120	
단체형	소계	4,085	1,817	1,548	212	58	1,130	752	218	161	749	345	180	224	138	93	14	31	
	마을기업	304	162	135	15	12	110	83	5	22	19	10	8	2	6	5	1		
	채래시장	310	18	18			158	142	4	12	78	64		14	17	12		6	
	기존생협	154	72	60	12		45	26	13	6	35	30	3	2	2	1	1		
	환경(대안주거)	112	48	41	6		37	25	9	3	12	9		3	8	5	1	2	
	공연예술단체	309	88	64	14	10	63	31		31	113	43	14	56	13	9		4	
	공동육아	45	29	28		1	14	10		4	2			2					
	지역아동센터	841	302	275	25	3	210	123	55	31	164	53	37	73	56	34	9	13	
	대안학교	35	11	7	4		19	12	4	2	2	2							
	돌봄기관	881	373	325	32	17	259	171	61	27	191	94	61	36	24	19		5	
	사회적기업	250	142	127	13	2	69	47	12	9	24	9	10	5	9	6	1	1	
	시민단체	843	571	467	90	14	146	80	54	12	110	31	47	31	3	3			
개인형	소계	5,115	974		945	29	1,667		1,595	71	1,584		1,418	167	686		597	89	
	특수직근로자	1,224	122		122		501		472	29	432		374	58	91		91		
	택시기사	726	48		48		143		143		175		143	33	338		318	20	
	배송업체	28	3		3		3		3		3		3		18		18		
	소상공인	704					292		292		300		300		69		69		
	아파트부녀회	986	64		64		408		366	42	334		276	58	159		90	69	
	돌봄종사자	1,447	737		708	29	320		320		340		321	18	11		11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추정

■(추정방법)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해 우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제공방식이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추정함

- (1단계: 출자금 제공 집단 추출) 기존단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출자금 확대 없이 전환하는 경우와 확대가 고려된 경우가 존재하며, 신규사업 시에는 출자금 확대가 필수
- (2단계: 설립추진 집단의 총 출자액 산정) 설립유형별로 파악된 평균 출자금액을 출자금 제공집단 수에 곱해 조사대상별 총 출자액을 산정
- (3단계: 취업자 및 피고용자 규모 추정) 산출된 각 조사대상별 출자액을 업종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에 적용해 고용창출량을 산출

■(1단계: 출자금 제공 집단 추출) 출자금 확대방식을 통해 산출된 협동조합 최소 및 최대 설립수는 6,310~8,295개였음

- (출자들) 출자를 확대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조사대상은 대안학교(62.5%)와 시민단체(49.0%)였으며 이외 조사대상은 대부분 40%이하였음
- (최대) 단체에서 출자금 확대를 고려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수는 1,111개였으며, 신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의 수는 7,184개였음
- (최소) 단체에서 출자금 확대를 고려해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수는 888개, 신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은 5,422개였음

〈표 3-10〉 단체의 출자금 제공방식에 따른 최대 및 최소 설립수

(단위: 개, %)

구분	마을기업	재래시장	기존생협	환경기업	공연단체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돌봄기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최대 설립수	294	383	166	128	233	44	597	24	706	217	761
출자 %	35.0	37.3	28.9	20.3	14.2	15.9	19.9	62.5	23.7	35.9	49.0
출자 설립수	103	143	48	26	33	7	119	15	167	78	373
최소 설립수	236	271	117	84	168	38	525	21	621	190	594
출자 %	35.2	37.3	29.1	20.2	14.3	15.8	20.0	61.9	23.7	36.3	49.0
출자 설립수	83	101	34	17	24	6	105	13	147	69	291

■(2단계: 설립추진 집단의 총 출자액 산정) 협동조합 출자 형식에 따라 향후 6년간 설립될 협동조합의 총 출자금은 최대 1조 9,934억 원에서 최소 1조 5,213억 원으로 추정됨

○(출자금 평균액 적용)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조사대상별 출자금 평균액을 출자금 전환방식 비율을 적용한 최대 및 최소 설립 수에 적용하여 조사대상별 출자액을 산정 후 합산함
○(최대)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형의 출자금은 2,423억 원, 신사업을 통한 출자금은 1,685억 원으로 총 4,108억 원이었으며, 개인에서 각각의 조사대상들이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은 1조 5,826억 원으로 추정됨

○(최소) 단체에서도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설립기관들의 출자금액은 1,940억 원, 신사업의 출자금은 1,379억 원으로 총 3,319억 원이었으며, 개인에서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은 1조 1,893억 원이었음

■(3단계: 취업자 및 피고용자 규모 추정) 협동조합 설립희망에 따라 향후 6년간 취업자는 39,182~50,908명, 피고용자는 29,918~38,389명으로 추정됨

○고용창출량 측정을 위해 앞서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협동조합 출자금 전환방식 별 총 출자액을 조사대상이 속한 2010년 업종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에 적용

⇒ 국제협동조합연합회(ICA)의 경우 고용창출력에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보다 고용창출력이 높다고 언급

⇒ 국내의 경우 각 업종별 일반기업 대비 협동조합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며, 본고가 보수적 관점에서 수요예측을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적용

〈표 3-11〉 조사대상군의 2010년 기준 업종 산업군과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조사대상	산업군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마을기업	농림어업	30.6	3.6
재래시장, 기존생협, 소상공인, 아파트부녀회	도소매업	25.3	13.2
환경(주거사업+대안기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사업시설관리	12.6	10.9
공연예술단체	예술스포츠	19.8	12.6
공동육아, 지역이동센터, 돌봄기관, 대안학교, 돌봄종사자	보건업 사회복지	41.2	37.3
시민단체	협회 및 단체	28.9	25.2
사회적기업	보건업 사회복지	41.2	37.3
택시기사	운수업	20.6	13.0
배송업체	택배업	16.3	14.8

자료: 한국은행(2010), 산업연관분석 고용표

〈표 3-12〉 최대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총 출자금 추계

최대추정		총계(만원)	전환				소계(만원)
			소계(만원)	출자			
				전체(개)	출자금유(개)	평균출자금(만원)	
전체		199,342,179	24,231,599	3,554	1,111	21,810	
단체	소계	41,087,051	24,231,599	3,554	1,111	21,810	
	마을기업	2,940,234	1,900,846	294	103	18,458	
	재래시장	1,963,830	1,785,155	383	143	12,500	
	기존생협	3,437,284	1,064,208	166	48	22,300	
	환경(대안+주거)	1,282,034	307,749	128	26	12,000	
	공연예술단체	1,451,876	667,775	233	33	20,000	
	공동육아	101,996	101,996	44	7	15,000	
	지역아동센터	10,025,906	2,632,488	597	119	22,143	
	대안학교	218,708	151,042	24	15	10,000	
	돌봄기관(자활+돌봄)	5,657,040	3,845,442	706	167	23,077	
	사회적기업	1,290,504	706,592	217	78	9,065	
	시민단체	12,717,638	11,068,307	761	373	29,667	
개인	소계	158,255,128					
	특수직근로자	60,580,214					
	택시기사	6,029,499					
	배송업체	181,495					
	소상공인	34,783,275					
	아파트부녀회	23,049,693					
	돌봄종사자	33,630,952					

주: 각 단체의 출자금은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평균 출자금으로 대체

〈표 3-13〉 최소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총 출자금 추계

구분		총계(만원)	전환			소계(만원)	
			소계(만원)	출자			
				전체(개)	출자금유(개)		평균 출자금(만원)
전체		152,134,587	19,402,054	2,866	888	21,849	132,932,533
단체	소계	33,198,110	19,402,054	2,866	888	21,849	13,256,261
	마을기업	2,357,186	1,523,908	236	83	18,458	1,009,820
	채래시장	1,391,177	1,264,604	271	101	12,500	650,000
	기존생협	2,434,972	753,885	117	34	22,300	1,000,000
	환경(대안+주거)	836,271	200,744	84	17	12,000	400,000
	공연예술단체	1,041,721	479,129	168	24	20,000	500,000
	공동육아	89,716	89,716	38	6	15,000	30,000
	지역아동센터	8,818,787	2,315,536	525	105	22,143	600,000
	대안학교	192,376	132,856	21	13	10,000	50,000
	돌봄기관(자활+돌봄)	4,975,932	3,382,450	621	147	23,077	1,000,000
	사회적기업	1,135,127	621,518	190	69	9,065	300,000
	시민단체	9,924,845	8,637,707	594	291	29,667	1,000,000
개인	소계	118,936,477					118,936,477
	특수직근로자	47,276,799					47,276,799
	택시기사	4,315,312					4,315,312
	배송업체	129,896					129,896
	소상공인	24,640,472					24,640,472
	아파트부녀회	16,328,403					16,328,403
	돌봄종사자	26,245,595					26,245,595

주: 각 단체의 출자금은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평균 출자금으로 대체

○(최대) 취업자의 총 수는 50,908명이며 이중 단체에 의한 일자리 수는 13,516개이고, 개인에 의해 생성될 취업자 수는 37,392명으로 추정됨

⇒ 피고용자의 경우, 총 수는 38,389명이며, 이 중 단체에서 10,797명, 신규사업 중심의 개인에 창출될 일자리 수는 27,592명으로 추정됨

○(최소) 취업자 총 수는 39,182명이며 단체에서 11,137명, 개인에서 28,045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피고용자는 총 29,918명이었고 이중 단체는 8,987명, 개인은 20,931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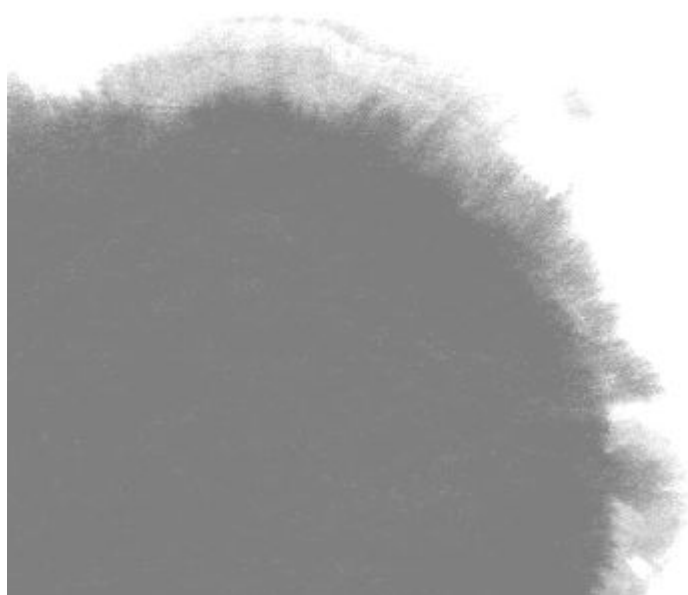
〈표 3-14〉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취업자 및 피고용자 창출 전망

(단위: 명)

구분		최대		최소	
		취업자	피고용자	취업자	피고용자
총계(명)		50,908	38,389	39,182	29,918
단체	소계	13,516	10,797	11,137	8,987
	마을기업	900	106	721	85
	재래시장	497	259	352	184
	기존생협	870	454	616	321
	환경(대안+주거)	162	140	105	91
	공연예술단체	287	183	206	131
	공동육아	42	38	37	33
	지역아동센터	4,131	3,740	3,633	3,289
	대안학교	90	82	79	72
	돌봄기관(자활+돌봄)	2,331	2,110	2,050	1,856
	사회적기업	532	481	468	423
	시민단체	3,675	3,205	2,868	2,501
개인	소계	37,392	27,592	28,045	20,931
	특수직근로자	7,633	6,603	5,957	5,153
	택시기사	1,242	784	889	561
	배송업체	30	27	21	19
	소상공인	8,800	4,591	6,234	3,253
	아파트부녀회	5,832	3,043	4,131	2,155
	돌봄종사자	13,856	12,544	10,813	9,790

4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제4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제1 절 실태조사 방법론의 구축방향과 방법

■(구축 방향) 향후 실시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실태조사 방법론 구축에 앞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고려함

- (해외조사: 방향성) 해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방향성 파악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실태조사의 방법론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
- (국내조사: 일관성) 현재 한국에는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등 다수의 법 관련 기업조사가 존재하고 있어 기업별 비교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간의 일관성을 확보
- (조사대상: 맞춤화) 향후 설립될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사업진행시 협동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관한 조사의 맞춤화 추구
- (정책실행: 효율성)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설립될 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기본법 설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증

■(구축 방법) 선진국들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국내 기존 법 관련 기업조사의 사례를 분석한 후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화 하는 과정으로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

- (해외 사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등록과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과 협동조합간의 연대 강도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에 정책방향을 파악
- (국내 사례)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 설문 내용 및 주체 등 전반적인 방법론상의 공통점을 도출해 향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위한 구성요소 및 체제를 도출하고자 함

○(방법론 개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지원되는 정책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내용을 도출한 후, 조사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법론을 개발

제2절 실태조사 방법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1. 분석 도구 설정과 요약

■(분석 대상)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 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문화적 적합성이 높은 일본을 선정함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EU 내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로 인한 임금근로자수가 6%이상인 국가로서 협동조합이 성장한지 100년 이상됨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축되어 있고, 문화적 성향도 유사하다는 관점아래 분석 대상에 포함함

〈표 4-1〉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수(2003년 기준)

(단위 : 명, %)

국가	사회적 경제				전산업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전 체(명)	전체	현비중(%)
전체	3,663,534	351,291	7,128,058	11,142,883	164,604,599	6.8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30	1,985,150	21,865,200	9.1
이탈리아	837,024	-	499,389	1,336,413	16,125,000	8.3
스페인	488,606	3,548	380,060	872,214	14,127,400	6.2
영국	190,458	47,818	1,473,000	1,711,276	28,046,000	6.1

자료: 유럽위원회, 2000; ILO 공식홈페이지 게재자료.

주: 현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한 비중임.

■(분석 도구) 본고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독관리 수단으로 가정하고 각국의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고려변수로 하는 분석 매트릭스를 구축한 후 조사방법론을 탐색

○(구축 이유) 각국의 실태조사 방법론이 관리자인 정책당국의 통제력과 관리대상인 협동조합들의 교섭력에 따라 현황중심에서 외부감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

○(통제력) 재정지원, 조세면제 등 각국 정부가 현재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정부의 감독관리에 대한 대체변수로 고려

- (교섭력) 협동조합간의 연대정도를 교섭력의 대체변수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실태조사 시 관여정도를 파악
- (조사 주체) 정부의 통제력과 협동조합들의 교섭력을 기반으로 실태조사의 주체와 방법론에 대한 사례를 분석

■(결과) 각국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방법론을 요약해 보면 영국은 민간자율형, 이탈리아는 민간 위탁형, 일본은 각개전투형, 프랑스는 외부감사형으로 요약이 가능함

- (영국) 협동조합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한 대신 영국협동조합연합회가 개별 협동조합들로부터 제출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
- (이탈리아) 통계청이 2년을 주기로 중앙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중앙협동조합연합회는 자체적으로 관심사항을 별도로 조사
- (일본) 설문형식을 통한 공식적인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부재한 대신 각 관련 부처 내에서 수집된 등록통계를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집하여 발표
- (프랑스)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의 실시로 정부가 세부부문별 연합회와 연계하여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외부감사와 더불어 보다 질적인 내용을 조사감독관을 통해 수집

〈표 4-2〉 해외 4개국의 실태조사 특징과 내용(요약)

구분	특징	주요 내용
영국 [민간자율형: 지원低-연대低]	·정부-연합회 비연계 ·협동조합 지원 無 ·현황파악 중점	- (정부) FSA가 협동조합 등록 심사 - (협동조합연합회) 연차보고서 중심 통계발표 - (사회적기업연합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이탈리아 [민간위탁형: 지원低-연대高]	·정부-연합회 연계 ·이익잉여금 세금 감면 ·현황파악 중심	- (중앙정부) 통계청 2년 주기 실태조사 기획 - (지방정부) 등록 주관 - (연합회) 등록 위탁 및 설문조사
일본 [각개전투형: 지원高-연대低]	·부처 개별형 ·장기 자금 융자 지원 ·설립 현황 파악	- (중앙정부) 협동조합 유형별로 각 부처파악 - (중소기업중앙회) 각 부처 조사결과를 취합해 발표
프랑스 [외부감사형: 지원高-연대高]	·정부-연합회 연계 ·다양한 조세감면 실시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 (정부) 협동조합 관리감독제도 및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등재 운영 - (연합회) 조사감독관을 통해 질적조사 시행

2. 영국의 민간자율형

■(개관) 영국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아, 통합적인 실태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3가지 다른 법적 형태가 존재해 실태파악이 진행됨

○(산업공제사회((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협동조합 원칙에 유사한 설립방법으로 조합원 1인 1표 선거권 등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금융감독청이 관할

○(보증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shares)) 기업청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나, 협동조합 원칙 보호 규정은 부재

○(공동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limited by guarantee/shares)) 자산동결 규정²⁾으로 비영리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에 적합하며, 사회적기업 연합회와 연계

■(특징)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등록과 관리를 위한 서류중심 자료 수집을, 협회는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 공유를 통한 정책 실행 등은 부재

○(정부) 정책의 중심이 시장 경제하에서 협동조합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관점이 강해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나 주무부처가 없고 특화된 실태조사도 부재한 상황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은 투자금에 따른 자본 수익보다 비즈니스 이용권에 따른 수익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의 면제조항이 존재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와 협동조합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연합회에서 독자적으로 협동조합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

1) 산업공제사회법 기반의 금융감독청(FSA) 실태조사

■(조사 주체) 금융감독청이 협동조합적 조직에게 가장 적합한 법인격인 산업공제사회(IPS) 등록 기능을 수행

○(금융감독청) 법적 권한(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을 부여받은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금융기관 및 모든 금융산업 시장참가자들의 인·허가, 건전성 감독, 검사 지시 및 조치 등 포괄적 감독권을 가짐

2) 법인청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협동조합관련 업무) 협동조합 등록 시 충족 요구조건에 관한 인가 및 감독 기능 수행과 협동조합 운영방법의 적합성 및 효율성 또는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등록 전) 제출 자료와 정관내용이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965 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의 필요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

⇒ (등록 후)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청에 결산결과를 매년 제출하고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금융감독청의 공적 기록 홈페이지에 공개

■(조사 방법) 금융감독청은 IPS 등록가능 수행을 위해 등록 법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관련서류와 협동조합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로 취합하고 관리함

○(실태 조사) 최근 IPS 등록법인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우려 증가로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협동조합 업무 팀의 인력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조사 내용) 등록 시, 일반 조항과 공동체 이익조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취합

〈표 4-3〉 협동조합 등록 지원서 내용

Mutual Societies Application Form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정보(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 - 조합원 자격의 발기인 3인과 이사장에 대한 기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 정관(조합원 3인과 이사장의 서명 포함) -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965 법 조항내용을 반영한 정관번호 명시 - 회계(사업)연도 - IPS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IPS 유형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협동조합(bona fide co-operative society) ·공동체이익조합(society conducted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 지원서 등록비용 관련 모델 정관 사용여부 (모델 정관을 변형한 횟수에 따라 등록비 차등)
공동체이익조합 (Benefit of the community societies)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공동체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느 지역·공동체의 권익·복리를 증진시키는가? ·지역주민·공동체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처리방법 ·조합 활동들이 어떤 공익·사회적 결과에 이바지하는가? - 조합의 자금 조달 방법 - 자선 목적의 활동 종류 - 다른 조합, 회사, 비영리기관과의 연계 활동(활동관계,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공)

자료: FSA UK, Mutual Societies Application Form, 2012.

○(부가 조사) 법률전문가와 협동조합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협동조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시험 사용 중

〈표 4-4〉 협동조합 진정성 파악을 위한 인터뷰 설문지

원칙	질문사항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인가? -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가?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조합원 1인이 1개의 선거권을 가진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조합원이 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가? - 조합운영 시, 조합원들이 가지는 실질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선출된 대표들은 조합원제도에 대한 어떤 형식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있는가?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제도의 회원 차등 분류와 주주로서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가? - 잉여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 주식자본·차입 자본금 제공자에게 어떠한 지불 의무 규정이 있는가? - 총 지불 이자는 총 잉여금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제4원칙: 자율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회원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회원들의 통제권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가?
제5원칙: 교육, 훈련,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협동조합 원칙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협력관계를 약속할 의무가 있는가?
제7원칙: 지역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무사항들이 있는가?
기타 사항: 자회사로서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소유자 회사(다른 기업에 의해 전액 출자된 자회사)가 되는 것이 조합이 의도하는 바인가? - 완전소유자 회사일 경우, 협동조합원칙을 따르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자료: FSA UK, Cobbetts Advic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12.

2) 영국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 UK) 실태조사

■(조사 주체) ‘The Co-operative Economy’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증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에 등록된 법인을 포함해 매년 영국 협동조합 섹터의 경제현황을 조사·보고함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협동과 상호협력 지지단체라면 어떤 조직이든 연합회 가입이 가능하며 협동적 행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기관들을 모아 상호협력을 도모

○(역할) 협동조합형 기업들을 홍보·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강화

⇒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최신 정보와 혁신 사례, 캠페인 정보 등을 제공

■(조사 방법) 개별 협동조합들이 제공하는 연차보고서 취합을 통해 영국 내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을 파악

○(조사 자료)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회원, IPS 등록 협동조합, 회사로 등록된 협동조합, 사회적 임대주(Registered Social Landlords)로 등록된 법인들의 개별 연차보고서

○(조사 내용) 영국의 경제상황 및 영국 협동조합들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

〈표 4-5〉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조사 내용

영국 경제 상황	영국 협동조합 경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대한 신뢰도 - GDP 성장률 - 정부부채 비율 - 실업률 - 평균임금 - 정부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숫자 - 조합원수 - 총 매출액 - 지역별 비교자료 - 섹터별 비교자료 - 협동조합 소유권 분석자료 - 협동조합 동향자료 - 국제 협동조합 자료

3)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 실태조사

■(조사 주체)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는 협동조합과 관련 있는 공동이익회사를 포함해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이 사회적기업 모델이라면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회원가입이 가능
- (역할)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과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그리고 국제교류 등을 추진

■(조사 방법) 2009년도부터 2년에 1번씩 ‘State of Social Enterprise Survey’라는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 (표본 추출) 사회적기업연합회의 회원들, 사회적기업 관련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들의 기관장, 그리고 재무담당자 대상으로 2011년 총 8,111개를 조사(2009년, 5,355개)
- (조사 단계) 1단계로 이메일 등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후, 2단계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심층 내용을 파악
- (조사 내용) 사회적기업의 규모 및 현황 파악,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 시장과 공공측면에서의 역할,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장벽과 기회 등으로 구성

〈표 4-6〉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규모 및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법적유형, 기관 지역, 기관의 사회적·환경적 목적 등 - 경영진 수 및 신상 내용 - 기관전체 구성원 수, 상근직원 수, 향후 고용예상 수 - 전년도 정리해고 여부 및 차년도 정리해고 가능성 - 수익창출 방식, 수익 주요원천,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등
설립 장벽과 운영 상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인원 여부, 설립 시 문제점 등 - 지속성장상에 문제점 및 해결 요소
재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대비 현재 매출액, 기간별 매출액, 향후 매출액 증가 가능성 - 전년도 흑자여부, 전년도 재정지원 투입 여부와 출처 및 내용 등 - 주거대 은행
경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비전 존재여부, 재무건전성에 대한 경제 및 공공환경의 영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여부 - 매출, 사회적기업 마크 활용 등 사업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효과 -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기여 내용과 정부정책 평가

2. 프랑스의 외부감사형

■(개관) 2개의 법적 제도를 기준으로 정부는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각 유형별·부문별 협동조합 연합회들이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개별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협동조합 관리감독(révision coopérative)제도) 유럽단일시장 형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상업기업 형태의 부분별 협동조합 규정과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

○(노동자 관보명부 등재(liste ministerielle)) 노동자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노동자 협동조합 명칭사용과 재무적 혜택을 요구 시, 필수적으로 관보명부에 등재하는 제도

〈표 4-7〉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관보명부등재 제도의 관련 법률

제도	관련 법률	관련 내용
협동조합 관리감독	- 농업협동조합 관련 연합체 및 농업관련 혼합기업 관련 67-813법	전통적인 농업인 결사체로서의 농업협동조합과 상업기업형태로 운영되는 농업협동조합을 구분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적 운영과 경제적 성과의 조화를 확인하기 위한 협동조합 관리감독 개념을 처음으로 제도화
	- 특정한 사회적 경제활동들의 발전 관련 83-657법	상업기업형태를 가진 장인협동조합, 운수협동조합, 어업·해운협동조합, 사회주택협동조합 및 이들의 연합체에 관련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으로 이들 협동조합들에 대한 협동조합 관리감독의 실행을 규정
	- 특정형태 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 관리감독절차의 실행 방법에 관한 84-1027 시행령	83-657법에 따르는 기업형태 협동조합들에 적용되는 협동조합 관리감독의 진행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특정 사회적 경제활동 관련 85-703법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협동조합 관리감독 적용을 규정
	- 노동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관리감독절차상의 특별한 규칙에 관한 시행규칙	노동자협동조합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협동조합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사회, 교육 및 문화에 관한 기타 조항 관련 2001-624법	공익협동조합 관련 조항을 47-1775 협동조합 일반법에 삽입하는 내용의 법으로서, 공익협동조합도 협동조합 관리감독의 대상이 됨을 명시
협동조합 관보명부 등재	- 노동자협동조합 지위 관련 78-763 법	54조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법적, 재무적 혜택을 받기 위해 관보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인정 관련 93-1231 시행령	관보명부등재에 관련된 실무사항을 규정

■(특징)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재무적 지원 하에 각종 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연합회와 연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외부감사형임

○(정부) 법적·재무적 지원방안과 관보명부등재 및 협동조합 관리감독의 법률로 정한 협동조합들의 관리감독을 위해 외부감사 형식의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계획

⇒ (법적 지원)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법적으로 인증 받지 못한 단체가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됨

⇒ (재무적 지원) 지역경제 기여세 면제,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익잉여배분 금액에 대한

조세혜택, 이윤배분참여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투자금 또는 적립금에 대한 조세
혜택, 주주가 아닌 협동조합 출자자로서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이 존재

○(연합회) 협동조합고등평의회의 협동조합 관리감독 조직에 가입 후 관리감독 기능을 위
탁받아 감독조사관의 충원 및 훈련을 담당함과 동시에 실태조사를 실시

⇒ 조직운동을 위한 자원은 개별 협동조합들의 의무회비로 조달

1) 협동조합 관리감독제도에 의한 실태조사

■(조사 주체) 협동조합고등평의회의 위임을 받은 지역 연합회가 실태조사를 담당하며 이에 소
속된 조사관들이 실사기능을 담당

○(지역연합회) 과거 협동조합고등평의회가 비영리 단체인 Arescop에게 감독관리 기능을
위임했으나 04년부터 Arescop은 최종결산만을 담당하고 지역연합회에서 자료를 취합

○(감독조사관) 경제, 재무, 경영 분야에 전문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들로서 자격신청
및 심사는 사회적 경제 담당부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Coopération) 대표 4인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조사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감독 기간인 5년마다 협동조합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과 조
합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

○(문서 열람) 정관 및 내부규정 이행여부,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 기술 및 투자, 영업상
황, 고용 및 교육훈련 상황, 결산 및 회계, 이익배분 협약, 자본금 조달 등 경영전반

○(조사과정)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노동자협동조합에 한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작동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후, 연령·근속연수들을 고려한 샘플을 추출해 인터뷰를 진행

○(조사내용) 조합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시장에서의 협동조합의 위치, 협동조합 내 경영비
전, 정보제공 정도 및 역량 평가, 그리고 조합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을 조사

〈표 4-8〉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 조합원 관련 내용	- 조합원 여부, 협동조합 내 조합원 역할, 훈련여부 및 내용, 희망 훈련내용 - 회사 및 직무 역할에 대한 만족 여부
- 협동조합의 시장 상황	- 시장 및 경쟁자 대비 협동조합의 위치 및 평가 - 시장 및 경쟁자 대비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약점
-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	- 향후 5년 후의 경영비전 존재여부와 조합원의 인지여부 및 인지내용
- 협동조합 내 정보제공	-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와 내용 - 협동조합 내 정보제공 수단 및 인지여부, 희망사항
- 협동조합의 역량평가	- 인적자원, 생산수단, 기업조직, 행정, 기술, 생산제품, 판매, 품질, 재무적 안정성 등 20개 항목
- 조합원 권한 인지내용	- 정관 인지 및 경영성과의 배분, 재정적 의무 여부 - 1인 1표제 등 협동조합에 대한 특징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

2)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등재 제도에 의한 실태조사

■(조사 주체) 협동조합고등평의회와 주정부 부처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고등평의회 소속의 협동조합 지역연합회의 조사관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신청) 협동조합고등평의회 회원의 경우는 협동조합고등평의회를 통해, 비회원일 경우는 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담당 주정부 부처들에게 관보 명부등재 신청 서류를 제출

■(조사 방법) 매년 개별 협동조합의 실태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협동조합 관리감독 실태조사와 서류가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 중심으로 진행

○(문서 열람) 정관, 활동내용, 경영진 및 외부회계 감사 명부, 기업형태관련 서류, 출자자본, 구좌 수 및 액면가치 관련 서류, 출자자 서류와 결산서, 은행계좌정보 등 회계자료

○(조사내용) 조합원, 자본금, 결산 후 잉여금 처분, 사업 및 부동산 양도 등 총 5개 부문

〈표 4-9〉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 조합원 관련 내용	- 직원 및 조합원의 인구학적 특성 - 고용형태별 현황과 직무 및 직급별 고용 현황
- 자본관련 내용	- 내부자본 및 외부자본의 금액과 출처 - 가장 많은 자본을 보유한 조합원의 신상 상황
- 결산 후 잉여금 처분	- 흑자 및 적자 결산 시 법정적립금 등 사용내용
- 기타정보	- 이익배분 참여 관련 특별 적립금 내용 및 타 기업 및 자회사 지분 관련 내용
- 사업 및 부동산 양도	- 전체 매출액 및 거래관련 매출액 -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 가치 산출 내용

3. 이탈리아의 위탁형

■(개관) 이탈리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및 구성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각 개별 연합회에서 소속 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현황조사가 존재

○(법률 381조)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유형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 (A유형) 의료 서비스, 교육, 보육원, 주간 연구소, 지역사회, 보건센터, 홈 케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협동조합

⇒ (B유형) 사회적 통합을 위해 알코올중독자, 전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협동조합으로 농업, 산업, 수공업, 상업서비스와 같은 모든 사업활동 포함

⇒ (구성원) 협동조합 내 노동자, 사용자,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법인회원 등 그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연합회) 레가코프 등 이탈리아 중앙 협동조합 연합회들은 구성원인 개별 협동조합들의 사업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

■(특징)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으나 조세감면 등의 최소 지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협동조합 연합회에게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유형임

○(중앙정부) 조세감면, 토지대여, 정부조달권 제공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최소지원을 전제로 전국 현황파악만을 계획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중앙 연합회에게 실태조사를 위탁

⇒ (조세감면)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30%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4%를 감면

⇒ (토지대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조합 결성 시, 토지를 100여 년간 무상 대여

⇒ (정부조달 우선권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정부물품 조달에 관한 우선구매 순위부여

○(지방정부) 지역 연합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을 담당하며, 등록 자료를 중앙정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

○(연합회) 중앙정부로부터 실태조사 비용을 받고 지역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조사

⇒ 지역 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정부와의 연계 하에 협동조합에 관한 등록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연차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

1) 이탈리아 통계청의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 주체) 중앙정부 내 이탈리아 통계청이 동일한 설문항목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협동조합 연합회와 연계해 2001년부터 2년에 1번씩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별 현황을 중심으로 연도별 협동조합 변화추이 등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조사내용) 개인정보, 협동조합 구조, 인적자원, 경제적·자본적 자원, 협동조합 활동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간 연대형태인 컨소시엄 협동조합들의 서비스 유형과 구성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요 부분으로 취급

〈표 4-10〉 이탈리아 통계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문내용

구분	조사 내용
- 개인정보	- 설문 응답자 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 - 설문 시점에서의 협동조합 운영여부
- 사업 구조	- 협동조합 법정 대리인 정보 ·성별, 출생년도, 학위여부 및 종류, 전문자격증 여부, 대리인 기간, 타 협동조합 활동여부 - 협동조합 정보 ·설립년도, 협동조합 등록여부, 협동조합 유형, 연합회 가입여부, ·컨소시엄 가입여부, 가입시 가입연도 및 제공 서비스, 민간기관과의 연대 내용 등
- 인적자원	- 조합원 및 의결권 조합원 수, 협동조합 이사회 회원 수 - 구성원 유형별 수(자원봉사자, 종교인, 공무원 등) ·협동조합 고용형태별 조합원 수 ·협동조합 직무별 조합원 수 - 협동조합 교육 참여 및 교육 주제
- 경제적·자본적 자원	- 생산가치 ·공공/민간별 수입, 재고품, 고정자산, 공공과 민간의 기타 수익과 소득, 총생산가치 - 생산비용 ·원자재 및 부자재 비, 서비스 비용, 인건비, 감각상각과 할부 상환비용, ·원자재, 부자재 재고변화, 위험 적립금 및 기타 적립금 현황 - 총 수입 및 비용 등(금융자산 가치, 총 특별 수입/비용, 총 소득세, 연간 순손실) - 자산 형태(무형자산, 유형자산, 재정자산 등) - 순자산 형태(사회적 자금, 연 이익/손실, 미래이익 등) - 부채(장단기 부채)
- 협동조합 활동	- A Type 협동조합 활동 분야 ·협동조합 활동분야 종류(휴양,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21개 분야) ·협동조합 활동분야별 이용자 수(취약계층 분야별: 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총 14개) ·협동조합 서비스 제공 장소(거주지, 중간지, 본적지, 소속지역 등) - B Type 협동조합 활동 분야 ·협동조합 내 고용인 특성(알콜 중독자, 범죄자 등 8개 구성원)과 고용형태 ·협동조합 활동분야(농업, 산업과 수공업, 상업과 서비스 등) - 컨소시엄 ·협동조합 내 컨소시엄 구성 특성(사회적협동조합, 타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활동분야(직원 채용서비스, 정보교환 서비스 등 16개 분야) - 기타 협동조합 활동: 주주회의 소집 횟수, 재무제표 승인회원의 수 등

자료: ISTAT(2007), Le cooperative in Italia.

2) 개별 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실태조사

■(개관) 이탈리아 중앙협동조합연합회 중 레가코프는 소속 협동조합 중 산업별 협동조합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등 경쟁력에 관한 현황을 매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 (조사방법) 산업별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들의 결과를 집계
- (조사대상) 건축업, 소비재 제조업, 기계·부품 등 중간재 생산 협동조합
- (조사내용) 협동조합들의 상품수입 증가율, 국내시장 판매 증가율, 해외매출 증가율 등 매출성과와 경영손실액, 총부채 등의 재무성과, 고용자 수 등 고용현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등 혁신상황 등을 조사
- (결과활용) 연도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들의 전년도 실적과 차기년도 전망을 수록하여 협동조합간의 정보를 공유

〈표 4-11〉 레가코프 협동조합 중앙회의 산업경쟁력 조사 설문내용과 결과

구분	조사 내용
- 성장성	- 상품 수입증가율(전년도 대비 +1.9%) - 국내시장 판매증가율(전년도 대비 +10.3%) - 해외 매출증가율(전년도 대비 +20.3%)
- 재무구조	- 경영손실액(전년도 대비 -17.5%)과 업종(산림 부분) - 총부채(전년도 대비 +3.6%) - 영업이익(전년도 대비 -24.8%)
- 고용현황	- 총고용자 수(8,775명, 전년도 대비 +1.4%)
- 해외진출상황	- 해외진출 여부와 주력 산업(건설업 등)
- 연구개발	- 연구개발 투자 여부 - 연구개발 인력 -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취득 수 -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계

자료: Cooperative Le Produzione e Lavoro associazione nazionale(2012), Assmble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di Produzionone e Lavoro Settore Industriale

4. 일본의 각개전투형

■(개관) 일본은 다양한 협동조합 개별법으로 인해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부처별로 등록 등의 현황을 파악

○(유형) 일본의 협동조합유형은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에 상공조합, 협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생활위생동업조합, 유한책임사업조합, 주식회사 등 총 7가지로 구분

〈표 4-12〉 중소기업형 협동조합의 세부유형과 주요 내용(1)

구분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기업조합
목적	조합원 경영근대화, 합리화, 경제활동 기회 확보	화재 등에 의한 조합원 재산 손해의 보전	자금 대부, 예금 취급	조합원의 일자리 확보, 경영 합리화
성격	인적결합체	인적결합체	인적결합체	인적결합체
사업내용	조합원 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사업	조합원의 화재 등에 의한 손해보전을 위한 공제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부, 예금 및 정기적금 취급 등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 운영
설립요건	4인 이상 사업자가 참여	가입자 1,000명 이상, 출자액 1,000만엔 이상	가입자 300명 이상, 출자금 1,000만엔 이상(도쿄와 금융청 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2,000만엔 이상)	4인 이상의 개인 참여
조합원자격	지구 내 소규모사업자(중소기업자)	지구 내 소규모사업자(중소기업자)	지구 내 소규모사업자(중소기업자) 또는 지구 내 거주지를 보유한 자, 근로자	개인 및 법인 등
책임	유한	유한	유한	유한
발기인 수	4인 이상	4인 이상	4인 이상	4인 이상(개인)
가입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임의탈퇴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조합원 비율	없음	없음	없음	전종사자의 50% 이상이 조합원
종사자 비율	없음	없음	없음	전조합원의 50% 이상이 조합사업에 종사
조합원 출자한도	25/100 (합병 및 탈퇴는 35/100)	25/100	10/100	25/100 (합병 및 탈퇴는 35/100)
결의권	평등(1인1표)	평등(1인1표)	평등(1인1표)	평등(1인1표)
조합원 외 이용권한	원칙상 조합원 이용분의 20/100(특례 있음)	조합원 등(친족 등)의 이용분의 20/100	임금 대부, 예금 취급은 대출 총액 및 예금총액 20/100까지	해당없음
배당	이용분 배당 및 10%까지 출자배당	이용분 배당 및 10%까지 출자배당	이용분 배당 및 10%까지 출자배당	종사분 배당 및 20%까지 출자배당

자료 : 일본 중소기업廳, 全國中小企業団体(2011), 中央會中小企業組合白書.

〈표 4-13〉 기타 일본의 협동조합 유형과 주요 내용(2)

구분	상공조합	협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생활위생동업조합
목적	조합원의 사업 개선 발전	조합원의 사업통합, 규모 적정화, 생산성 향상, 공동 이익 증진	상점가 지역의 환경 정비	조합원의 사업의 생활위생 수준 향상, 자력사업의 개선
성격	인적결합체	인적·물적 결합체	인적결합체	인적결합체
사업내용	지도교육, 조사연구, 공동 경제사업(출자조합 만)	조합원의 사업통합, 공동경제사업	상점가의 환경정비, 공동 경제사업	생활위생 적정화사업, 지도, 검사사업 기타
설립요건	1개 도도부현 이상 구역을 자구로 하고, 자구 내 자격사업자의 1/2 이상 가입	4인 이상 사업자 참가	1개 도도부현 이상의 구역을 자구로 하고, 소매상업자나 서비스업자 중 30명 이상 근접영업할 것	도도부현마다 1개의 조합. 자격사업자의 2/3 이상이 가입할 것
조합원자격	자구 내 자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및 정관 상 1/3 이상 미만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	중소기업자(조합원 추정상 속인 포함) 및 정관 상 1/4 이내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	자구 내 소매상업자나 서비스업자 및 정관 상 그 외의 자	자구 내 자격사업을 영위하는 자
책임	유한	유한	유한	유한
발기인 수	4인 이상	4인 이상	7인 이상	20인 이상
가입	자유	총화승인 필요	자유	자유
임의탈퇴	자유	지분양도에 의함	자유	자유
조합원 비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사자 비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합원 출자한도	25/100 (합병 및 탈퇴는 35/100)	50/100 미만 (비중소기업자 전원의 총 출자총액은 50/100 미만)	25/100	25/100
결의권	평등(1인1표)	평등(정관상 출자비례 의결권 가능)	평등(1인1표)	평등(1인1표)
조합원 외 이용권한	공동경제사업만 적용 원칙상 조합원 이용분 20/100(특례 있음)	해당없음	조합원 이용분의 20/100 (특례 있음)	조합원 이용분의 20/100 (특례 있음)
배당	이용분 배당 및 10% 까지 출자배당	출자배당(단 정관에 따름)	이용분 배당 및 10%까지 출자배당	종사분 배당 및 20%까지 출자배당

자료 : 日本 中小企業廳, 全國中小企業団体(2011), 中央會中小企業組合白書

○(법률) 7개의 협동조합 유형은 다음과 같이 6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이 가능하며 주무 부처 역시 차이가 존재³⁾

3) 이외에도 내향해운조합법에 따르는 내향해운조합 및 연합회, 주세의보전및주류업조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주조조합과 연합회 및 중앙회나 주관조합과 연합회 및 중앙회와 같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조합이

〈표 4-14〉 일본 협동조합 유형과 법률 및 주무부서

협동조합 유형	법률	주무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 화재공제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기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사업협동조합 및 연합회, 기업조합, 신용협동조합 창설,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자치·민주주의 명확화(49) - 화재공제협동조합 창설(57) - 사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의 신사업분야에 대한 진출지원사업 추가(97) - 기업조합 활성화, 법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출자 배당제한 규제 등 규제 완화(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공동 - 화재공제협동조합은 경제산업성, 금융청 공동 -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청이 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조합 - 협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 업계 구조개선을 위해 상공조합 사업 합리화 추가 - 상공조합 창설(57) - 업계 구조개선을 위해 상공조합 사업 합리화 추가(62) - 협업조합제도 창설(67) - 사업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 등 중소기업조합으로 부터 주식회사·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제도 창설, 상공조합의 카르텔사업 폐지, 지역별 동업종 조직으로 성격변경(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 진흥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 진흥조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위생 동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위생관계영업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책임회사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05)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사업화와 이 분야 융합 비즈니스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5년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공동

■(특징) 금융과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무부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부재한 채 지역 협동조합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각개전투형임

○(정부) 조합별 주무부서가 중복되거나 달라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각 부처별 등록 건수를 전국 중소기업중앙회가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발표

⇒ (자금융자) 상공조합금고를 통해 조합사업을 위한 설비자금(15년)이나 운전자금(10년),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융자사업 자금(조합 200억 엔, 조합원 20억 엔)을 융자
 ⇒ (세제지원)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22%), 유보소득 특별공제, 이용분배당의 손금산입, 사업세 및 사업소세의 경감, 인지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일정 공동시설 등의 고정자산세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 등이 있음

○(연합회) 생협, 생산자협동조합 등 지역 연합회 중심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개별 협동조합의 실태를 파악

○(중소기업중앙회) 매년 중소기업조합백서에 조합별, 지역별 총 조합수와 신규 설립조합수, 산업별 조합 수에 관한 통계를 발표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는 제외.

⇒ 현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 소속된 조합원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일본의 전체 중소기업자 약 420만 명의 71.4%에 이릅니다

■(조사 내용) 설문조사 없이 정부는 각 부처에 보고되는 설립허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합회는 각 개별 협동조합의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

○(정부) 7개 협동조합 관련 연합회의 설립추이, 6개 관련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추이, 협동조합의 종사 산업, 설립 법적형태의 전환에 대한 현황 등을 제시

○(연합회) 회원별 사업 및 조직현황, 업태별 매출 구성,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주요 경영 실적, 경영 분석 등에 관한 통계를 제시

⇒ 사례로 오사가 생협의 경우 오사카시 주변 시정촌 40개 지역의 개별 협동조합들로부터 연차보고서를 수집하여 주요 경영실적 및 분석을 포함해 현황을 파악

〈표 4-15〉 오오사카 생협의 현황 파악자료

구분	조사 내용
일반개황	- 조합원 수 및 그룹 수, 출자금 등 연도별 조합원 및 가입, 탈퇴, 순증 현황 제시
업태별 매출 구성	- 매출액 및 매출처별 비중 · 오사가 내 소매판매에서 판매하는 매출액과 비중 · 전국 생협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액과 비중 · 그룹, 개인, 점포별 매출액과 비중
시설현황	- 본부, 점포(신설점포 및 폐쇄 점포 수 포함), 택배, 물류, 복지시설, 이용시설 자료
직원현황	- 상근임원과 임원의 현황 - 자산 유형별 금액 및 합계 · 유동자산(현금 및 예금, 미수금, 채고, 기타) ·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출자금, 기타) 및 이월자산 - 부채 유형별 금액 및 합계 · 유동부채(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상여금 적립액, 기타) · 고정부채(장기차입금 및 기타)
경영실적	- 순자산 · 조합출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당기말 처분잉여금 등 - 손익현황 - 경영분석 · 발전성(조합원 1인당 출자금, 조합원 1인당 이용액, 상근직원 1인당 매출액, 상근직원 1인당 매출액 잉여금) · 수익성(매출잉여율, 사업 총잉여율, 인건비율, 물건비율, 경상잉여율, 단기잉여율 등) · 경제성(노동분배율, 이용분배율, 노동생산성, 총자본 경상잉여율 등) · 안정성(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출자금비율, 장기고정 적립금 등) · 활동성(총자본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상품회전율, 공급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등)

자료: 오사가 생협연합회 (2011), 연차보고서

제3절 조사방법론 공통요인 도출을 위한 국내 기업조사 사례분석

■(분석 방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사 방법론 검토를 위해 국내 법관련 기업체 실태조사 5개를 대상으로 조사방법론 상의 세부요소 별로 분석

○(조사 대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6과 같음

○(분석 항목) 실태조사의 구성항목인 조사 주체, 대상, 시기, 방법 등 실태조사에 관한 일반사항과 각 실태조사의 공통 설문항목, 그리고 차별적 설문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표 4-16〉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 분석 대상

조사명	주관(조사기관)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실태조사(2012)	- (주관) 고용노동부 (전담) 사회적기업 진흥원 (실사)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2010)	- (주관) 고용노동부 (전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실사) 한국리서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6조
중소기업실태조사(2011)	- (주관) 중소기업청 (실사)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여성기업 실태조사(2011)	- (주관) 중소기업청 (전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실사) ㈜ 맥스경영컨설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
E-러닝 실태조사(2011)	- (주관) 지식경제부 (전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사)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이러닝 산업발전법 제27조

■(조사주체) 대부분의 기존 실태조사는 정부 중앙부처가 관리를, 전담기관은 연구 및 실행을, 조사대행사는 실사를 담당하는 3단계 분업화 형태로 추진됨

○(중앙부처) 관련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실시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조사계획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선정

○(전담기관)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론을 계획하고 조사 대행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임

○(실사기관) 전담기관의 발주에 따라 실사조직을 갖춘 민간 리서치 기관들이 주로 기업체 실체조사를 담당

■(조사범위)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기업을 조사하되 기업체의 임원급 이상 경영자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종사자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

○(사회적기업) 관련기업의 사업 실태 및 성과 이외에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조사 범위에 포함

○(이러닝 기업) 산업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공급 측면의 경우, 이러닝 민간 공급업체와 사이버대학을 조사하고, 수요 측면에서 이러닝 도입 가구의 사용자들을 조사 범위에 포함

○(장애인 고용)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외에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

■(조사대상) 모집단이 적은 경우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모집단이 큰 경우,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한 표본조사를 실시

○(사회적기업) 2012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약 700여개에 지나지 않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경우는 종사자 수를 모집단으로 표본추출

○(이러닝 기업) 이러닝 공급업체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모집단 3,422개를 대상으로 하고, 수요자의 경우 모집단을 개인, 사업체,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규정 후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총 9,864개를 조사

○(기타)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모집단을 규정 후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2,067개, 10,000개, 4,000개를 조사

■(조사방식) 대부분이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편의를 위한 온라인 조사, FAX, E-mail 조사도 조사대상별로 병행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노동부에 제출한 연차 회계보고서를 활용

○(사회적기업) 사업실태 및 성과와 사회적기업가, 종사자 실태에 대해서는 설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성과의 경우 연차보고서 자료를 활용해 통계자료를 추출

○(기타)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여성기업 실태조사, E러닝 기업조사의 경우 조사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E-mail조사, FAX 조사를 실시

〈표 4-17〉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조사 방법론 요약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방법	Sampling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사회적기업)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644개소(2011년 12월 기준) - (사회적기업가 조사) 사회적기업 사업체의 경영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 	-3년	·방문면접조사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표본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 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전국의 상시 근로자50인 이상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 	- 2년	컴퓨터 지원 자기기업식 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수) 2,067개(고용기업체 1,579개 +미고용기업체 488개) · 제출한 기업체 명, 연락처, 주소, 장애인 고용 여부, 산업규모, 산업유형 등의 정보가 있는 명부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할당 분배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2009년말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체 112,424개 기업체 - (지식기반서비스)2009년 말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18개 업종, 48개 산업세세분류에 따른 종사자수 5~299인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체 18,579개 사업체 	- 1년	조사원 활용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수) 100,000개 · 제조업: 8,000개 기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2,000개 사업체 ·-(추출방법) · 제조업: 23개 업종별로 1차 층화, 6개종사자규모별 및 16개 시도별로 2차 층화 · 지식기반서비스업: 18개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속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의 48개 세세분류업종으로 1차 층화, 종사자규모별 4개층으로 2차 층화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사업체를 영위하는 여성기업인 - (조사범위) 대표자가 여성인 전국의 1,220,907개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대일방문 면접조사 ·On-line, F A X , E-mail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수) 4000개 ·-(추출방법) ·전체 기업체 DB에서 표본설계에 의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기업리스트를 작성 후 설정된 표본크기의 5배수를 각 층별로 추출 후 계통추출방법이용
E-러닝 실태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부문) · 1차: 추정 공급기업 총 3,422개의 리스트 확보 (2010년 이러닝 산업조사 응답기업 리스트, 코참비즈 및 중소기업DB 키워드 검색,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등록업체 리스트 인터넷 순위사이트 및 각종 검색 키워드 검색, 한국 기업데이터 기업정보 DB 활용) · 2차: 1차 조사결과 확정된 3,422개 기업 전수 전화조사(사업영위, 매출유무 등) - (수요자부문) · 개인: 만 3세 이상 포함 인터넷 보유 가구 · 사업체: 1인 이상 전업 중 사업체 · 교육기관: 국내 초중고 및 대학 정규교육기관 	-1년	방문조사 팩스, 이메일, 전화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표본수) 1,656개 ·-(추출방법) 대표사업분야별, 매출액 규모별 층화추출, 모집단 조사에서 확인된 1,656개 사업체에 대해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사업분야에 층화추출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00억 원 미만 사업체는 층내에서 계통추출 ·-(수요자표본수) 9,864개 · 개인: 2000명 · 사업체: 7,164개 · 교육기관: 700개 ·-(추출방법) · 개인: 추출된 가구에 전화 후 가구 내 인터넷 이용자 중 연장자 선정 · 사업체: 2010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업종(산업분류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다단계층화추출 · 교육기관 :지역별, 초중고 및 전문대학, 4년제 대학별 다단계층화추출

■(공통 조사내용) 기업 조사인 만큼 대부분의 실태조사가 사업체 특성과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그리고 서비스(상품) 등 5개 영역에 대해 현황을 파악

○(재무적 상황) 사회적기업조사의 경우, 열악한 경영능력을 고려, 노동부에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이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설문조사를 통해 재무 상태를 파악

○(고용 현황) 고용촉진을 고려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기본사항 이외에 고용관련 문항이 다수

〈표 4-18〉 국내 법 관련 기업체 조사의 공통 조사 문항

조사명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서비스(상품)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012)	- 사업분야 - 인증여부 - 조직형태 - 사업장 특성 - 모법인 정보	- 자원봉사자 현황 - 유급근로자 현황 - 신규채용 현황 - 이직 현황 - 인력수요 전망 - 근로시간/보상 - 1인당 급여액/형태 - 보상구조 - 사회보험가입현황 - 교육 훈련	- 사회적기업가 조사 - 부채현황 - 자금조달계획	- 공공시장 매출액 구성 - 의사결정 구조 - 이사회 구성 - 노동조합등 현황 - 네트워크 -	- 주요생산/서비스 매출비중 -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 가격구조/수준 - 경쟁력 수준 - 경쟁력 요인 - 경영관리 소프트 웨어 이용수준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0)	- 종사업종 - 법인형태 - 총 사업장 수	- 고용형태, 직종, 직위별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수 - 이직률 - 일반 및 장애인 근로자 임금 - 근로시간, 교대근 무, 임금결정, 고충처리방식 등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영업이익 - 인건비	-	-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1)	- 법인형태 - 공장규모 - 기업유형 - 설립년도 - 기업성장 단계 - CEO 출신	- 직종, 재직연수, 연령, 학력, 자격증 보유 등 - 학력별 연봉 - 교육 및 훈련 - 외국인활용 계획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 명세서	- 연구개발 비용 - 판매 실적	- 원부자재구매실적 - 설비투자 실적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1)	- 사업체 등록형 태 - 주력생산 품목 - 대표자 특성 - 사업장 현황	- 고용형태 - 인력조달 상황 및 대안 - 동기부여 방안 - 교육 및 연수	- 자산(자본, 부채) - 매출액/영업이익 - 자금조달/상황	- 투자, 사업 확대 - 사업규모 현황 - 마케팅/디자인 - 해외기업 활동	- 원자재 조달 - 생산활동 - 판매활동
E-러닝 실태조사 (2011)	- 개교년도	- 교수 등 교원수익 정규직/비정규직을 - 직무별 교원 현황 및 부족인력 - 충원 계획	- 2개년 수입예상액	- 2개년 투자현황	- 개설학과, 학생수 - 개설 프로그램 - 재학생 특성 - 이러닝 기술개발

■(맞춤화 문항)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맞춤화

○(정책효과) 사회적기업은 기업육성 상황에 대한 정부지원방식을, 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방법 및 인식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방식을, 여성 기업은 여성기업 지원 방식을, E러닝 기업조사는 산업수요 전망을 부가적으로 파악

〈표 4-19〉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맞춤형 조사 문항

조사명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효과 및 사회적기업 지원 요구사항, 지원제도에 만족도 평가 · 사회적기업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 사회적기업가의 경력사항,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유, 서비스/제품 선정이유, 창업과 경영과정의 애로점 · 경영: 자립시기 및 발전 단계, 의사구조현황, 서비스 제품의 경쟁력 수준, 근로자 평가, 교육프로그램 참여 · 지원: 협동조합/대안적 조직형태, 정부지자체의 역할/필요성, 전문인력채용과 사업개발비 등 지원 사항 평가 · 사회적기업 종사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 취업관련 문항, 종사기관의 이해 정도 · 기업: 기업가 평가, 의사결정 구조 상황, 경영활동의 참여정도 ·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노동조합 가입여부, 종사상 지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자 모집과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방식, 모집경로, 취업알선기관 우선순위, 장애인 채용 시 지원 사항 및 고려사항 ·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계획 여부, 채용분야, 채용인원 등 ·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 인지, 고용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종류와 도움정도,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등 · 장애인 고용인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생산성, 성실성, 근로손실비용, 편의시설 구입비용, 고용지원 인력비용, 조직 적응력 등
중소기업 실태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실태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시도여부와 동기, 소요자금, 경영성과, 애로요인 등 · 수위탁거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 납품거래 형태, 협력거래 단계, 위탁기업의 개수와 납품거래,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 · 판매대금 수취 방법 및 기일 ·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방안, 홍보대상, 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실효성 등 ·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유, 활용계획, 애로사항 등 · 산업기능 요원 및 전문요원 고용현황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전망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인증, 기술마크, 지적 재산권 보유현황 · 정보화 수준 및 현황 ·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사항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창업관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동기, 창업 전 직업, 창업시 애로점, 창업지원 기관 여부와 지원내용, 창업자금 마련 방법 등 · 신성장 동력 및 녹색성장 마련 관련 내용
E-러닝 실태조사 (사업체조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전망 · 지적재산권 보유 및 보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저작권 지출액, 이러닝 관련 지적 재산권 보유현황, 지적 재산권 피해 상황 ·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보완장치 설치 유무, 이러닝 개발시 지적 재산권 애로사항

제4절 협동조합 조사방법론 맞춤형 방안 개발

■(개발 단계) 해외 협동조합 실태 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법 관련 기업조사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조사방향 등 5개 구성요인별로 맞춤형 방안을 개발

○(조사정책 방향) 해외 협동조합 실태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제 공하는 지원정책의 강도와 협동조합연합회간의 연대정도를 추정해 정책방향을 설정

○(조사 주체) 조사방향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해 실태조사 외에 실사조직도 포함

○(조사 대상) 협동조합 단체 종류와 활성화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해 조사대상 범위를 선정

○(조사 방법) 현황과악을 위한 연 1회성 설문조사 방식이외에 조사 정책방향을 고려해 다 단계 조사방법을 고려

○(조사 내용) 국내 일반 법 관련 조사에서 추출된 공통문항 이외에 협동조합 유형별로 지원제도 및 위법 사항과 관련된 맞춤형 문항을 포함

■(조사정책 방향) 협동조합기본법의 지원제도 현황과 협동조합간의 연대정도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실태조사 정책방향은 관리감독 중심의 프랑스 외부감사형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

○(지원제도) 정부의 협동조합 설립지원 정책의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은 부재하나 공통사항인 공정거래법 적용배재를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정책의 강도는 높다고 판단

〈표 4-2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원제도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법인격 - 공정거래법 적용배재 - 임직원 겸직의 허용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추가 -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 -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추가 -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법인격 (비영리법인) - 공정거래법 적용배재 - 임직원 겸직의 허용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추가 -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 -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추가 -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
차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회사법인 형태 추가 -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지정기부금 단체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 -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료: 기획재정부(201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대정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 시민단체 주도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총 28 개 단체)가 관여했으며, 구성원들의 경우 각각의 연합회와 단체연합들이 포함됨

⇒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시, 협동조합들간의 연대가 적어도 부문별·유형별 연합회 수준 이상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

〈표 4-21〉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구성단체

구분	참여 단체	구분	참여 단체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생협연합회 - iCoop 생협연합회 - 한국의료생협연대 - 대학생협특별위원회 -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 한겨레 두레공제조합연합회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 재활용대안기회연합회 - 한국대안기업연합회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단체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YMCA 전국연맹 - 한국 YWCA 연합회 - 전국실업단체연대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나눔의집 협의회
협동형 사업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 (주)온케어(도우누리) - 신나는 문화학교교사협의회 	연구지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성공회사회적기업연구센터 - 사회투자지원재단 - 사회연대은행 - 신나는 조합 - (사) 사람과 마을

자료: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2012)

■(조사 주체) 기획재정부에서 위임을 받은 설문중심의 실태조사 전담기관과 위법 등 문제소지가 있는 협동조합을 실시하는 조직(가칭 조사감독관) 등 2원화된 조사체계가 요구

○(프랑스 사례) 경제부처의 협동조합고등평의회가 협동조합 감독조직을 운영하고 경제, 재무, 경영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들을 감독조사관으로 고용해 5년 마다 협동조합관련 문서열람과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개별 협동조합을 감독

○(실사 조직) 기획재정부 소속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동조합 실사를 관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실사를 담당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적용가능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등 지원사항 외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의 위험성이 높은 지원방안을 고려 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해 외부감사형태의 감독이 필요

⇒ 시행령으로 연차 회계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회계사 등 이를 위반한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행 조직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조직구성을 신중히 고려

■(조사방법) 모집단 선정 → 실태조사 → 실사조사 집행의 3단계 조사방법으로 협동조합 실태

조사를 추진

- (모집단 선정) 조사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협동조합 유형과 연합회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선정
- (실태조사) 법 시행 초기에는 전수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추진하되 생성된 협동조합 수가 약 10,000 개 이상일 경우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를 실시
- (실사조사) 실태조사에서 지원정책의 효과 및 법 위반 사항이 포착된 협동조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실사전 담조직이 해당 협동조합을 방문해 질적 조사를 실시

■(기본 조사내용) 기존 법 관련 기업체 조사에 포함된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서비스(상품)에 관한 설문내용과 프랑스의 협동조합 설문내용을 혼합해 구성

- (사업체 특성) 협동조합 유형, 사업분야, 조직형태, 협동조합 인증 전 사업형태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외부출자 등에 관한 출처 정보 등을 포함
- (고용현황)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임금, 4대보험 가입, 교육훈련 등 복지현황 외에 고용창출 및 안정성과 관련된 신규채용 현황, 이직률, 인력수요 등에 관한 설문을 포함
- (재무상황) 공시된 회계보고서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현재 출자금 출처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 결산 후 잉여금 처분에 관한 내용 및 사업과 부동산 관련 거래 현황을 포함
- (경영활동) 주력 시장에 대한 매출구조, 의사결정구조, 이사회구성, 경영정보시스템 이용 수준, 협동조합 간 네트워킹 및 연대, 투자사업 계획, 연구개발 현황 등을 포함
- (서비스상품) 주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구조, 시장 가격수준, 매출비중과 원자재 조달 및 생산판매활동 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과 요인 등을 조사내용에 포함

■(부가 조사 내용)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지원하는 매출, 경영, 기타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의 이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

- (매출지원)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담합 정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현황, 학술연구용품 사용현황과 물류단지시설 사업자 및 농어업회사, 산림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 등을 포함
- (경영지원) 임직원 겸직 허용 정도,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여부, 기부금 규모 및 사용처, 의사록 인증제외 여부, 고용보험기금 사용여부 등을 조사
- (기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여부 및 지원사항 등 타 부처 지원정책 이용 내용을 포함

■(지표개발 및 분석) 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 협동조합을 추출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협동조합들의 건전성 지표 개발이 필요

○(구성내용)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자료 이외에 조합원과 임금근로자를 연계한 지표개발 및 구성, 그리고 체계화가 필요

○(활용방안) 개별 협동조합들 중 건전성이 낮게 평가된 협동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협동조합 실사조직에게 전달, 직접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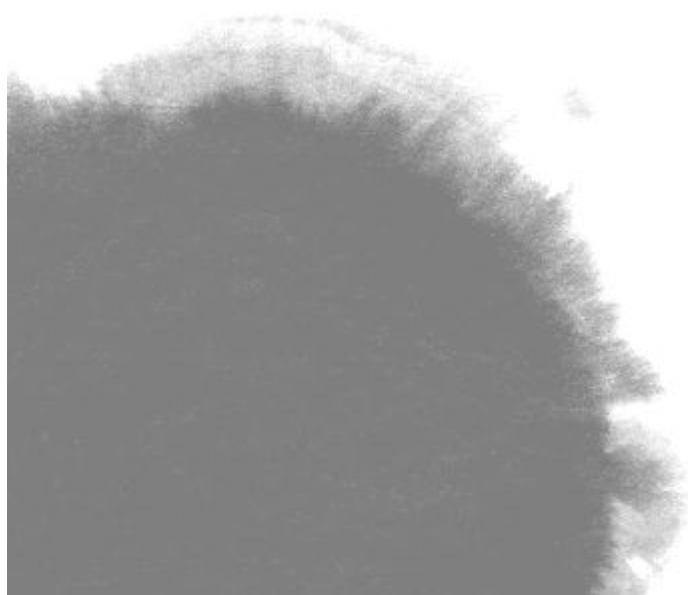
■(RFP 발주) 협동조합기본법내 규정된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시, 앞서 언급되었던 조사방법론을 적용한 RFP 발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성내용) 부록2에 제시된 RFP 예시와 같이 조사대상을 비롯,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되, 협동조합들의 실사관리를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건전성 지표개발도 포함

○(분석기준) 실태조사 시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조합 추출을 위해 협동조합의 건전성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함

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제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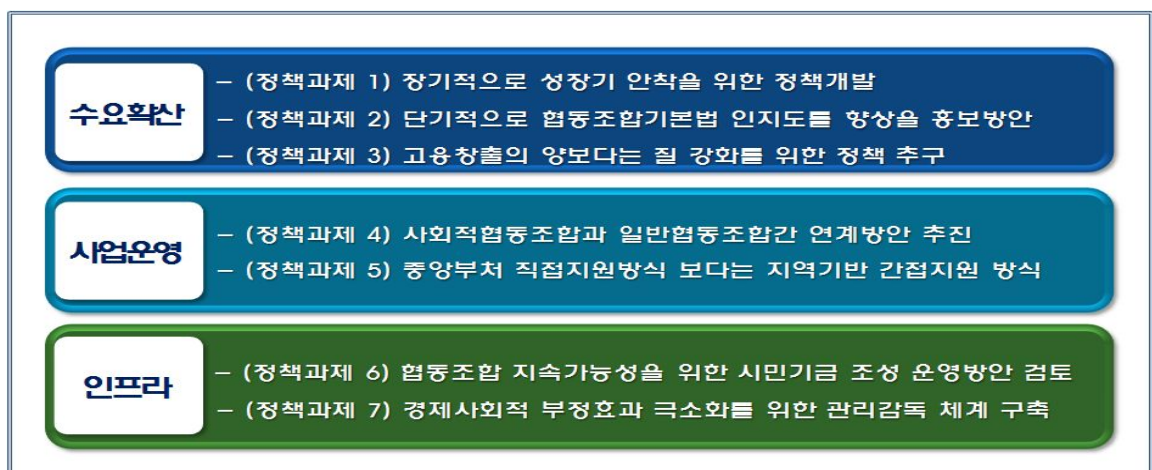
■(정책범위)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와 협동조합실태조사 방법론 개발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3범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함

○(수요확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협동조합 생성 및 확산속도는 단계별 수요자의 특성과 협동조합 유형, 수요자의 생성 및 교육정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사업운영) 협동조합 생성 시, 준비되지 못한 협동조합들로 인해 파산 등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으로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됨

○(인프라) 향후 생성될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차원의 인프라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1) 확산과정상에서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이 필요

○(시사점) 향후 6년간 생성될 협동조합 설립 수는 약 1만개로 도입기는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기 진입 시, 설립의향자가 적어 성장기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확산모델) 신서비스와 제품, 제도 등이 사회에 도입 시 확산과정은 일반적으로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가지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 수요자는 차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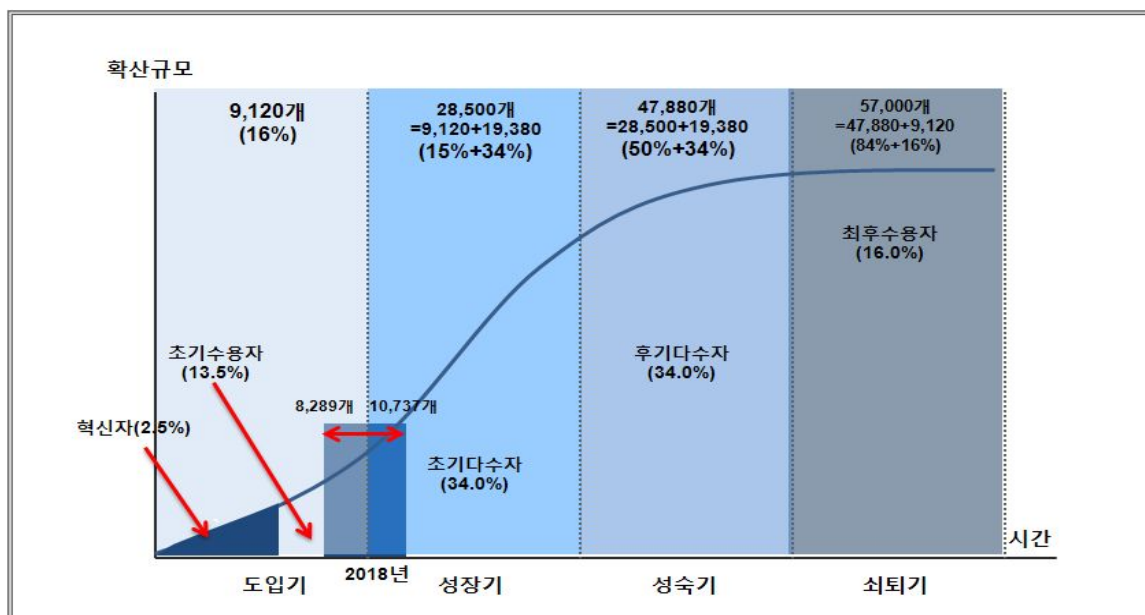
⇒ (포화점) 협동조합이 성숙한 이탈리아 등 해외사례를 고려 시, 5인 이상 사업체의 10%정도를 포화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 570,000개의 10%인 57,000여개가 국내 협동조합의 모집단으로 추정

⇒ (확산속도) 향후 6년간 설립이 예상되는 약 8,289~10,737개의 협동조합 수는 전체 모집단의 약 14.5~18.8%로 확산모델 상에서 도입기 진입 성공을 의미

○(정책방향) 향후 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차기 사회적기업가 등 성장기 진입 시 고려되는 수요자 개발과 활성화에 주력

⇒ (우려점) 설립 수에 대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설립시기가 늦어질수록 설립의향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기 진입에 필요한 수요자가 적음을 의미

[그림 5-2] 협동조합 확산모형



자료: E.M. Rogers(1995), Diffusion of innovation 4th Edition

■(정책과제 2) 협동조합 대비 인지도가 낮은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

○(시사점) 농협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파악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사업운영 및 효익 등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지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는 약 92%이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는 약 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

⇒ (비설립 이유)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35.7%)과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18.9%),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13.3%)이 1~3위를 차지

○(정책방향)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구축하되, 필수적으로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국민들이 체득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 특임장관실에서 기획한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에서 대중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협동조합 설립 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음

■(정책과제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근본취지 중 하나인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시사점) 협동조합 설립 수에 비해 고용창출량은 적으며, 그 이유는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규모가 작고, 출자금 없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기관이 많은 등 자금력 부족 때문

⇒ (출자금) 기존 단체 중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출자금 없이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약 71%수준이고, 신규로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규모는 약 2억 원으로 매우 적음

⇒ (고용의 질) 협동조합에 대한 매력사항 중 조합원의 이중자격과 경제적 효과에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응답이 높아 고용의 질은 상당부분 상승할 것으로 파악됨

○(정책방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정책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양보다는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협동조합들이 자금력을 확보 한 후, 생성되는 고용의 양을 확인하여, 홍보정책 방향을 고용의 양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

■(정책과제 4)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반협동조합과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시사점) 협동조합 생성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초기에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대거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금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 사회적기업 문제가 지속될 여지가 존재

⇒ (시기)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법제정 이후 1~2년에,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은 2~4년에 걸쳐 설립될 것으로 조사됨

⇒ (해외)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이 안정화된 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한국은 반대 성향임

○(정책방향) 사회적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생협 등 영리성을 갖춘 일반협동조합들을 발굴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구하는 단체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

⇒ (이탈리아) 생산자, 유통, 생협 등 영리중심의 일반협동조합들이 자본력을 확보 후 조합원 대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축

⇒ (일본) 산업별 기업 또는 기존생협들이 연합회를 구축 후 조합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진

■(정책과제 5)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식을 중앙부처의 직접지원보다 지역기반의 간접지원을 추진하는 등 분산지원방식을 추진

○(시사점) 중앙부처의 재정지원방식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자의 요구 또한 지역기반의 간접지원으로 파악됨

⇒ (설립률) 간접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유무간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률 차이는 1.8%p에 지나지 않을 만큼 효과성이 약한 것으로 파악

⇒ (활성화 과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연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및 의식 고양 등 지역기반의 지원방식 요구가 많음

○(정책방향) 설립절차에 관한 컨설팅과 협동조합 교육, 차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필요

⇒ (이탈리아) 각 지역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 설립 및 대행기관으로서 역할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

⇒ (일본) 각 지역의 협동조합연합회와 NPO지원단체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정책과제 6)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주도의 기금조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

○(시사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들의 대거 설립과 파산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

⇒ (경영상황)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기관들의 자산규모는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매출액 역시 약 3억 7,000만 원 정도로 작으며, 몇몇 조사대상군에서는 자본침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출자금) 출자금 규모 역시 약 2억 원 정도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력이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기관들은 운영자금을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방향)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일정액을 안정 기금으로 조성, 또는 시민주도의 기금조성으로 신사업이나 파산시 설립지원금이나 구조조정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3%를 각출하여 기금화 한 후, 부실한 협동조합의 파산 시, 구조조정기금으로 사용

⇒ (일본) 지역단위로 시민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가가 신사업을 추진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

■(정책과제 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감사형의 협동조합관리체계 구축이 요구

○(시사점)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동조합 설립 난립이 이루어질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가 손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의 감소가 우려

⇒ (조사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제적·사회적 부정효과에 대해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와 협동조합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제시

⇒ (대응체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기부금 단체 지정 등 부정적인 효과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내 구체적인 실사 시스템은 미완인 상황

○(정책방향) 3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사조사를 연계하는 방안과 실사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 (프랑스) 담당부처 내 관리감독조직을 두고 연합회와 연계하여 부실 협동조합에 대한 실사 등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참고문헌

- 국회예산처(2004~201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 국제협동조합연맹(2012). 글로벌 30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1.26). 협동조합기본법 공포 2012.12월 시행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법제처(2012). 8개 기존 개별법
- 산업자원부(2011). E-러닝 실태조사
- 오사카 생협연합회(2011). 연차보고서.
- 유럽위원회(2000). ILO 공식홈페이지 게재자료.
-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실태조사
- 특임장관실(2012).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 특임장관실(2012). 협동조합자료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1). 여성기업실태조사
- 한국은행(2005~2010).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10)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Cooperative Le Produzione e Lavoro Associazione Nazionle(2012). Assmble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di Produzionone e Lavoro Settore Industriale.
- E.M.Rogers(1995). Diffusion of Innovation. 4th Edition
- FSA UK(2012). Cobbetts Advic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FSA UK(2012). Mutual Societies Application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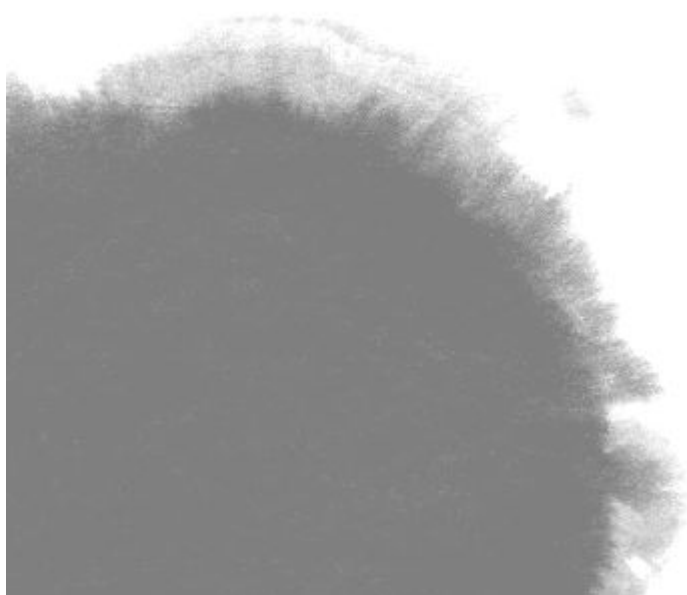
ISTAT(2007). Le cooperative in Italia.

McFadden, Daniel L.(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Zarembka, P.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Academic Press. New York. pp.
105-142.

Social Enterprise UK(2012). State of Social Enterprise Survey.

日本 中小企業廳, 全國中小企業団体(2011). 中央會中小企業組合白書.

부록



부 록 1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작년 말에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하여 현 국내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으로 고려되는 단체들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 협동조합들의 실태 및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한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시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지는 ① E-mail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하기를 클릭하여 응답시거나 별도로 작성하시어 ② E-mail 또는 ③ Fax 로 9월 12일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조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성심껏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INI마케팅 조사 담당자 : 이은지 슈퍼바이저

단체특 성	① 소비자 생협 ② 의료 생협 ③ 지역아동센터 ④ 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방과후학교()) ⑤ 마을기업 ⑥ 가사관리사 관련 단체 ⑦ 문화 예술단체 ⑧ 시민단체 ⑨ 사회적기업 ⑩ 자활공동체 ⑪ 재건축 추진회 ⑫ 미소금융 ⑬ 아파트 부녀회 ⑭ 대안기업 ⑮ 노동조합 ⑯ 대안학교 ⑰ 자영업자(재래시장) ⑱ 배송업체 ⑲ 학교비정규직 ⑳ 학습지교사 ■ 캐디 ■ 보험설계사 ■ 기타()				
단체명		성명		응답 자 지위	① 경영진/사업주/이사장/기관장/시설장 ② 회원/조합원/직원 (응답 중단)
연락처	사무실 (), HP()			e-M ail	

문1. 혹시 귀하께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으신지요?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① 들어본 적 없다 ② 농협, 수협, 소비자 생협 등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이다
- ③ 주식회사와 다른 기업의 한 형태이다 ④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 ⑤ 허가 등 정부가 허가해야 지원하는 조직이다 ⑥ 주인이 없는 단체이다
- ⑦ 지방 등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⑧ 기타()

※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①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이 1인 1표제로 운영되며 ② 조합원은 지분 출자로 인해 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이중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③ 주식회사와 달리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진이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④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⑤ 영리사업과 더불어 비영리사업 추진도 가능하며 ⑥ 지역경제에서 유사 협동조합들간에 공동사업이나 상위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⑦ 고용창출 및 유지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2. 귀하께서는 위 7가지 특성 중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① 출자지분 규모에 상관없는 1인 1표제 ② 협동조합의 소유주이면서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③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의 경영 ④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
⑤ 영리 사업과 비영리사업 병행 가능 ⑥ 조합간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연합회 구성
⑦ 고용창출 및 안정 ⑧ 기타()

문3. 그렇다면 혹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어떤 부분이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가장 크게 생각되는 부문 1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① 대규모 자본 출자 능력 부족 ② 전문 경영인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③ 1인1표제로 인한 낮은 의사결정 ④ 비영리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 축적 부족
⑤ 지역경제 중심의 고립성 ⑥ 기타()

문4. 혹시 귀하께서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illegible]

※ 작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이란 ***

2011년 12월, 국회는 농협, 수협 등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① 어느 누구나 5인 이상이면 보험과 금융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과 ②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③ 지역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④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⑤ 일반기업과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예외와 ⑥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을 10%~30%이상 적립하게 하는 법정적립금 의무조항제도, 그리고 ⑦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⑧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와 ⑨ 조세의 부가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향후 2년 동안 기존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새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자금 등을 인정해 주는 등 기존의 사업운영에 관한 부문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 내용 중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①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 자격 부여 ②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④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예외적용 ⑥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⑦ 협동조합 내 이익잉여금 10~30%이상 적립 ⑧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부가금 면제
⑨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 출자금 등 사업부분 인정 ⑩ 기타()

문6. 이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다음 사항 중 협동조합을 통해 귀하께서 속한 단체나 사업체가 사업추진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① 금융과 보험업 영위 불가
10~30% 잉여금 적립
- ②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 ③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
- ④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
- ⑤ 일반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출자금 10%이하, 사업 수익 50% 이상)
- ⑥ 기타()

문7. 지금까지 귀하께서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 혹시 귀하의 단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100% 기준 시 몇% 가능성이 있으신지 (/100%)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없다 ⇒ 문7-1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② 있다 (/100%) ⇒ 문8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문7-1. (문7의 ① 응답자 만) 그렇다면 혹시 새로 시작하실 신사업 등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100% 기준 시 몇% 가능성이 있으신지 (/100%)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없다⇒ 문7-2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② 있다(/100%) ⇒ 문8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문7-2. 다음은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정책들입니다.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지원 방안

- 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지원
- ③ 법적으로 시민기금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부설시 긴급자금 지원
- ④ 지정 기부금 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 ⑤ 고용보험 법령상 우선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 ⑥ 정부 고용지원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컨설팅 지원
- ⑦ 기타 희망정책()
- ⑧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없음 ⇒ 문7-4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문7-3. 그렇다면 가장 매력적인 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귀하의 단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100% 기준 시 몇% 가능성이 있으신지 (/100%)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없다 ⇒ 문7-4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② 있다(/100%) ⇒ 문8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문10-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2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추진하신다면 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위 필요한 도움이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전환 절차상의 도움에 대해서)

문11.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자 협동조합 | ② 보험 등 공제 협동조합 |
| ③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구매 협동조합 | ④ 아이, 노인 등 돌봄 및 교육 협동조합 |
| ⑤ 택배, 청소부, 가사 등 근로자 협동조합 | ⑥ 공연 등 문화 협동조합 |
| ⑦ 에너지 등 에너지 협동조합 | ⑧ 주택 공동구매 등 주택협동조합 |
| ⑨ 물류, 유통 등 물류 협동조합 | ⑩ 아파트 주민의 공동 구매 등 소비자 생협 |
| ⑪ 기타() | |

문12.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귀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 수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매출증가 | ② 비용감소 |
| ③ 고객인지도 상승 | ④ 세금감면 |
| ⑤ 재무구조의 안정성 증대 | ⑥ 정부지원 혜택 증가 |
| ⑦ 고용안정 | ⑧ 기타() |

※ 다음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1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어떤 단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주택 재개발 주민 ② 농촌 등 지방주민 ③ 시민운동 단체 ④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 ⑤ 사회적기업 ⑥ 문화예술인 ⑦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 ⑧ 외국인 노동자
 ⑨ 학습지 선생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⑩ 택배 등 배송업체 종사자 ⑪ 청소부 등 임금 취약 근로자
 ⑫ 주부 등 아파트부녀회 ⑬ 각종 상조회 ⑭ 대안학교 등 교육단체 ⑮ 기타()

문1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② 고용안정성 강화 ③ 물가안정 ④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⑤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⑥ 지역경제 활성화 ⑦ 대기업 횡포 완화 ⑧ 기타()

문1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성된다면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어떤 계층들의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정규직 근로자 ② 임시직 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주부 등 여성 비취업자
 ⑤ 학생 등 청년 ⑥ 정년퇴직 등 조기은퇴자 ⑦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⑧ 기타()

문16. 금번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력이 낮음 ② 동일한 수준/차이없음 ③ 경쟁력이 높음

문16-1. (문16 ③ 응답자 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 우위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③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④ 사업을 통한 창출 수익 ⑤ 기타()

문17.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 육아 등 영유아 사업분야
 - ②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사업 분야
 - ③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 ④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사업
 - ⑤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보전 사업
 - 지역 문화계승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 기타 (내용 :)

문18.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사회 양극화 해소 ② 시민 참여의식 증대 ③ 복지 사업의
활성화
- ④ 청년 실업 해소 ⑤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 ⑥ 기타 (내용 : _____)

문19.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기존 협동조합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 ②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
- ③ (유사의료협동조합과 같은)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 ④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 ⑤ 기타 (내용 :)

문20. 이의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
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② 협동조합간의 담합행위 ③ 질 낮은 일 자리 생성

④ 협동조합을 이용한 사기행위 ⑤ 정부의 간섭 심화 ⑥ 경영상 혁신·창의성 저하

⑦ 기타 ()

문21.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조합원들간의 공동체 정신 ②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
- ③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 ④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 ⑤ 기타 (내용 :)

문22. 그렇다면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 ② 협동조합 내 전문 경영인들의 영입
- ③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④ 협동조합 간 또는 관련단체들과의
관계강화
- ⑤ 구성원의 의식(주인·공동체의식) ⑥ 기타 (내용 :)

※ 다음 문항들은 귀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23. 먼저 조직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답
23.1) 귀 단체는 민법상 영리기관인가요?	① 영리기관 ② 비영리기관 ⇒ 문 23.3 질문으로
23.2) 귀기관은 상법상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① 개인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 회사 ④ 주식회사 ⑤ 소비자 협동조합 ⑥ 임의단체 ⑦ 기타 ()
23.3) 귀기관의 전체 구성원과 상근직원, 경영진 /운영진은 각각 몇 명인가요?	① 구성원()명 ② 상근 직원() 명 ③ 경영진/운영진 ()명
23.4) 상근 직원의 월평균 임금과 4대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1인당 평균 만 원 ② 4대 보험 가 입률()%
23.5) 경영진/운영진 중 경영·경제학 전공자 비중은?	%

문24. 다음은 귀 단체의 재무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24.1) 귀 단체의 2011년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총수입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 인지요?	① 자산 : ()억 원 ② 부채 : ()억 원 ③ 총수입 : ()억 원 ④ 순이익 : ()억 원
24.2) 총수입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나요?	① 회비()% ② 주 사업수입()% ③ 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지원()% ④ 정부, 시민 등의 외부지원()% ⑤ 공공기금 등 후원()% -----100%
24.3) 귀 기관의 자본금은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① 주식발행 ② 회원 출자 ③ 기업 등 외부 투자 ④ 정부투자 ⑤ 금융기관 대출 ⑥ 조합원 등 회원들로부터 대출 ⑦ 공적기금 투자 ⑧ 기타()

문25. 다음은 귀 단체의 운영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25.1) 귀기관은 경영상 이익발생시 조직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 하시나요 ?	① 예 ② 아니요 ⇒ <u>문26 질문으로</u>
25.2) 이익 발생 시, 기관 내 이익을 적립하시나요? 하신다면 총이익 중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有 → 전체 이익적립금()% ② 아니요 ⇒ <u>문26 질문으로</u>
25.3) 적립한 이익잉여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① 신사업 투자 ② 타 단체 지원 ③ 기존사업 투자 ④ 회원배당 ⑤ 기타()

문26. 다음은 귀 단체의 국내 협력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26.1) 귀 기관은 중앙회 같은 상위단체가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u>문27 질문으로</u>
26.2) 귀 기관은 중앙회 같은 상위단체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중복응답)	① 회계 지원 ② 운영비 지원 ③ 홍보지원 ④ 등록 절차 ⑤ 인원 파견 ⑥ 교육지원 ⑦ 경영(운영지원)컨설팅 ⑧ 지원 없음 ⑨ 기타()
26.3) 귀 단체는 상위단체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복응답)	① 결산 보고 ② 회비 납부 ③ 영업지원 ④ 등록 절차 ⑤ 인원 파견 ⑥ 기타() ⑦ 지원 없음
26.4) 귀기관은 국내 동종업계들과 정기적인 교류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교류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운영비 등 금전지원 ② 인력 ③ 사업연계 ④ 교육 등 정보교류 ⑤ 기타() ⑥ 교류가 없다

문27. 다음은 귀 단체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 문	응 답
27.1) 귀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u>문27.4 질문으로</u>
27.2) 현재 귀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수응답)	① 회원(영업)관리 ② 회계(결산)관리 ③ 출자(배당)관리 ④ 자원(자재)관리 ⑤ 생산성 관리 ⑥ 의료정보관리 ⑦ 홈페이지 ⑧ 인터넷쇼핑몰 ⑨ 기타
27.3) 현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수응답)	① 인터넷 검색어 등록 서비스 ② e-mail 홍보서비스 ③ 인터넷 배너광고 서비스 ④ Fax 서비스 ⑤ SMS 홍보 서비스 ⑥ 기타
27.4) 향후 귀 단체에서 필요한 정보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① 회원(영업)관리 ② 회계(결산)관리 ③ 출자(배당)관리 ④ 재고(자재)관리 ⑤ 생산관리 ⑥ 의료정보관리 ⑦ 홈페이지 ⑧ 인터넷쇼핑몰 ⑨ 기타
27.5) 향후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인터넷 공용서비스를 실시한다면, 귀 단체에서 어느 부문을 활용하시겠습니까? (복수응답)	① 서비스(생산물)홍보 ② 신고 및 인허가 ③ 조합원(회원)관리 ④ 조합 결산관리 ⑤ 출자(배당)관리 ⑥ 법적적립금 관리 ⑦ 해산(청산)관리 ⑧ 기타
27.6) 향후 귀 조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화지원이 실시된다면, 어떤 부문이 필요한지요? (복수응답)	① 정보화 구축 자금 지원 ② 소프트웨어 구매지원 ③ 정보화 구축 세제 혜택 ④ 하드웨어 구매지원 ⑤ 정보화 운영인력 지원 ⑥ 네트워크(회선) 임대지원 ⑦ 정보화 교육 지원 ⑧ 기타

질 문	응 답
28.1) 귀기관에서는 주사업 외에 소액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8.3 질문으로
28.2)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관련 내용을 적어주세요.	① 대출 자격 : ② 대출 한도 : ③ 이자율 : ④ 만기년도: ⑤ 상환방법: ⑥ 현재 대출자 수: ⑦ 평균 대출금액:
28.3)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문28.6 질문으로
28.4) 향후 대출 사업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
28.5) 향후 대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요?	()
28.6) 귀 기관에서는 주사업 외에 상호부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8.9 질문으로
28.7) 상호부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내용을 적어주세요.	① 사업내용 : ② 계약기간 : ③ 가입자수 : ④ 평균 납입회비: ⑤ 부조금액 : ⑥ 현 부조사업 적립금액:
28.8) 상호부조 사업운용자금의 조성/충원 방식과 기금수지 개선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른쪽 각항목별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기금 운영방식은 어떤 ① 회비 방식으로 조성되니까? ② 기타방법
	2) 상호부조 운영기금은 ① 회비증액 어떤 방식으로 충원됩니까? ② 기타방법
	3) 최근 기금수지 개선 여부 ① 개선 ② 악화 부는?
28.9) 상호부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사업 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 종료
28.10) 향후 상호부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
28.11) 향후 상호부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요?	()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협동조합기본법관련 실태조사RFP 가안)

I. 제안 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실태조사 연구」

☐ 추진 배경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규정에 의한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
 - 농협 등 기존 8개 협동조합은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을 포괄
 - 기존 300명 이상으로 제한하던 필수 조합원 수를 5인 이상으로 완화해 고용창출과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제정
 - *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유형을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
 - 본 연구는 법 규정상의 필수요건인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협동조합의 경영현황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파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축에 활용
 - *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법제정의 근본취지인 고용창출과 자생적 복지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장기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함
 - 법 시행이후 등록된 개별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경영진과 근로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임

☐ 조사 내용

①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기초 경영자료 분석

- 구체적으로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활동, 서비스 상품 등 5개 부문 협동조합 기초 경영 자료를 분석

구분	주요 조사내용
사업체 특성	- 협동조합 유형, 사업 분야, 조직형태, 협동조합 인증 전 사업형태, 외부출자 관련 정보 등
고용현황	-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임금, 4대보험 가입률, 교육훈련 등 복지현황, 신규채용 및 이직률, 향후 인력수요 등
재무상황	- 공시 회계보고서, 현 출자금 출처와 향후 자금조달계획, 결산 후 잉여금 처분에 관한 내용, 사업과 부동산 관련 거래 현황 등
경영활동	- 주력 시장에 대한 매출구조, 의사결정구조, 이사회구성, 경영정보시스템 이용수준, 협동조합간 네트워킹 및 연대, 투자사업 계획, 연구개발 현황 등
서비스 상품	- 주력 상품 및 서비스 가격구조, 시장 가격수준, 매출비중, 원자재 조달,